
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 연구

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 연구

발행인

박은실

발행일

2023.02.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사회예술교육본부장	노준석
시민·지역연계팀장	최영희
시민·지역연계팀	고우중
시민·지역연계팀	최실비

등록

KACES-2222-R001

ISBN

978-89-6748-509-2(93370)

문의

Tel. (02)6209-5900

Fax. (02)6209-5999

E-mail. contact@arte.or.kr

www.arte.or.kr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출처를 표시하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
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
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신혜선 위컬처 리서치 앤 컨설팅 대표

공동연구자

나보리 서울대학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연구원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연구보조원

이지선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위컬처 리서치 앤 컨설팅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7
3. 연구의 방법과 기대효과	9
 II.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정책의 배경과 실태	14
1. 개념과 역할	14
2. 기초 거점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19
3.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 참여 조직 현황	49
4. 거점 관련 제도 분석	67
5. 미래 거점 조직의 요건 및 유형 분류	73
6. 유관 사례조사	78
 III. 인증제도 현황과 유관 법률	107
1. 인증제도의 개념과 특성	107
2. 국내 인증제도 현황	112
3. 국내 인증제도 평가체계 현황	120
4. 인증제도와 지원정책의 연계 현황	130
5. 소결 및 시사점	133
 IV. 자료 수집과 분석	139
1. 설문조사	139
2. 표적집단면접조사(FGI)	149
3. 델파이조사(Delphi Method)	167
4. 소결 및 시사점	179

V. 기초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제도 모델 방안	185
1. 인증제도의 목적과 방향	185
2. 인증제도 운영 체제(안)	193
3. 거점인증의 요건	198
4. 인증기관 선정 평가지표(안)	203
5. 단계적 전략	205
 VI. 거점 간접지원 정책 방안	209
1. 거점기관 접근성 증진 방안	209
2. 거점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	219
3. 거버넌스 체계 구축	231
4. 단계별 기초 거점 지원 전략	239
 VII. 결론	245
1. 기초 거점 간접지원 방안	245
2.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 제언	254
 참고문헌	261
 부록	267

표 목차

〈표 I-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 배경 및 현황	3
〈표 I-2〉 「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중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과제	5
〈표 II-1〉 거점의 개념과 역할로 본 거점의 구성요건	16
〈표 II-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사업(2022년 기준)	19
〈표 II-3〉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 연차별 현황	24
〈표 II-4〉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참여 주체 및 사업내용	25
〈표 II-5〉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 3년 참여주체의 성과	26
〈표 II-6〉 문화파출소 운영프로그램 사례	28
〈표 II-7〉 ‘꿈꾸는 예술터’ 조성 현황	29
〈표 II-8〉 개관하여 운영 중인 꿈꾸는 예술터 프로그램	30
〈표 II-9〉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범주 및 현황	33
〈표 II-10〉 2022년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 기초 거점 발굴 사업 현황	36
〈표 II-11〉 생활문화센터 건립 특성별 유형구분(2020.12 기준)	39
〈표 II-12〉 팔복예술공장	42
〈표 II-13〉 세대공감창의놀이터	43
〈표 II-14〉 복합문화지구 누에	44
〈표 II-15〉 대덕문화원	45
〈표 II-16〉 광주북구문화의집	46
〈표 II-17〉 성북 키움센터	47
〈표 II-18〉 지리산씨협동조합	48
〈표 II-19〉 전국 시군구 내 문화기반시설 현황	49
〈표 II-20〉 전국 시군구 내 생활기반시설 현황	51
〈표 II-21〉 부처간 협력 사업의 연도별 참여조직 프로그램 수	56
〈표 II-22〉 꿈다락 사업의 연도별 참여조직 프로그램 수	56

〈표 II-23〉	지역특성화사업의 연도별 참여조직 프로그램 수	57
〈표 II-24〉	꿈다락 사업에 7년 이상 참여한 조직이 운영한 프로그램 장르	58
〈표 II-25〉	꿈다락 사업에 4년 이상 참여한 조직의 종류	59
〈표 II-26〉	꿈다락 사업에 참여한 조직들 중 단년도에 하나 이상의 꿈다락 사업을 운영한 경우	59
〈표 II-27〉	꿈다락 사업에 참여한 조직들의 전체 기간 내 참여 년수 별 평균 총 지원받은 예산 규모	60
〈표 II-28〉	지역특성화 사업에 7년 이상 참여한 조직이 운영한 프로그램 장르	60
〈표 II-29〉	지역특성화 사업에 7년 이상 참여한 조직의 종류	61
〈표 II-30〉	지역특성화 사업에 참여한 조직들 중 단년도에 하나 이상의 지역특성화 사업을 운영한 경우	61
〈표 II-31〉	지역특성화사업에 참여한 조직들의 전체 기간 내 참여년수별 평균 총 지원받은 예산 규모	62
〈표 II-32〉	문화예술교육 시설 기준	73
〈표 II-33〉	거점의 역할 유형	75
〈표 II-34〉	거점의 4대 요건	75
〈표 II-35〉	미래 거점 조직의 분류기준별 유형 구분	77
〈표 II-3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한국 지자체 참여 현황	81
〈표 II-37〉	기초 단위 평생교육 체계 사례	83
〈표 II-38〉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대상과 기준	87
〈표 II-39〉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90
〈표 II-40〉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98
〈표 II-41〉	사회적기업 인증 세부절차	99
〈표 II-4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100
〈표 II-43〉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101
〈표 II-44〉	지정, 설치, 인증, 지원 기반의 단체 및 기관 육성 사례	103
〈표 III-1〉	인증제도 적용 사례	108
〈표 III-2〉	운영 중인 인증제도 현황	112
〈표 III-3〉	유관 분야 인증제도 운영사례	114

〈표 Ⅲ-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요 인증제도 적용 사례	118
〈표 IV-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참여 경험	139
〈표 IV-2〉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140
〈표 IV-3〉 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	141
〈표 IV-4〉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주요 역량	142
〈표 IV-5〉 인증제도 평가지표 구성안에 대한 의견	144
〈표 IV-6〉 응답자 연령대	147
〈표 IV-7〉 응답자 성별	147
〈표 IV-8〉 응답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형태	147
〈표 IV-9〉 응답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위치 지역	148
〈표 IV-10〉 응답자의 직무	148
〈표 IV-11〉 FGI 참여자 구성 및 부여 코드	149
〈표 IV-12〉 표적집단면접조사(FGI) 질문 체계	151
〈표 IV-13〉 FGI 분석 결과표	152
〈표 IV-14〉 델파이조사 개요	168
〈표 IV-15〉 델파이조사 참여자 현황	169
〈표 IV-16〉 1차 델파이조사 결과	170
〈표 IV-17〉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산출된 평가지표별 적절성(타당성) 분석 결과	172
〈표 IV-18〉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실무자(A)와 연구자(B) 간 Welch's T 분석 결과	176
〈표 IV-19〉 AHP 분석 결과	178
〈표 V-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 SWOT 분석	186
〈표 V-2〉 거점 인증대상 기관의 특성: 조직 모델과 시설 모델 비교	188
〈표 V-3〉 인증제도 도입 쟁점 이슈	189
〈표 V-4〉 거점 인증제도의 비전과 목표	191
〈표 V-5〉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기관 사업 및 내용	194
〈표 V-6〉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실태조사 지표체계 개발	195
〈표 V-7〉 거점 인증제도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197
〈표 V-8〉 거점 인증 요건과 내용	198

〈표 V-9〉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201
〈표 V-10〉 인증 평가지표 개발 관련 쟁점 및 설계 방향	203
〈표 V-11〉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안)	203
〈표 V-1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인증제도 도입 단계별 전략(안)	205
〈표 VI-1〉 우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선정 및 시상 사업	210
〈표 VI-2〉 우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심사 평가지표	210
〈표 VI-3〉 우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선정 사업 유형	211
〈표 VI-4〉 거점기관의 지역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유형	214
〈표 VI-5〉 거점기관의 지역융합형 파트너십 프로젝트 지원사업 단계별 전략	215
〈표 VI-6〉 거점기관의 지역융합형 파트너십 프로젝트 지원 참여자 역할 구조	215
〈표 VI-7〉 거점기관의 지역융합형 파트너십 프로젝트 선정 심사 평가지표	216
〈표 VI-8〉 비문화예술 영역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환경 조성 사업	217
〈표 VI-9〉 비문화예술 영역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환경 조성 사업 참여 조직 과 역할	218
〈표 VI-10〉 비문화예술 영역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환경 조성 사업 심사기준	218
〈표 VI-11〉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의 필요 역량	220
〈표 VI-12〉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역량 강화 사업 유형과 내용	220
〈표 VI-13〉 문화예술교육 PD 사업 유형과 내용	223
〈표 VI-14〉 문화예술교육 PD 직무와 역량	223
〈표 VI-15〉 거점기관의 브랜딩 전략 활성화 사업내용	225
〈표 VI-16〉 거점기관의 재원 조성 활성화 사업	226
〈표 VI-17〉 연도별 예술나무운동 기부금 집계표	229
〈표 VI-18〉 연도별 예술나무운동 기부금 활용	230
〈표 VI-19〉 최근 예술나무운동 기부금 활용 성공 프로젝트 비교표	230
〈표 VI-20〉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유형 : 단독형과 컨소시엄 협력형 비교	232
〈표 VI-21〉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거버넌스 유형	234
〈표 VI-22〉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참여자 역할구조	235
〈표 VI-23〉 단계별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전략	239

〈표 VII-1〉 유형별 기초 거점 조성 및 육성사업 모델	245
〈표 VII-2〉 유관 사업 국내 사례 종합비교	247
〈표 VII-3〉 지정제도와 인증제도의 비교	250
〈표 VII-4〉 평가지표에 대한 델파이조사와 AHP 분석 결과	252
〈표 VII-5〉 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안)	253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수행 절차	10
[그림 II-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 추진체계	23
[그림 II-2]	꿈꾸는 예술터 조성 지역	31
[그림 II-3]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체계	34
[그림 II-4]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현황	40
[그림 II-5]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단체 종류	53
[그림 II-6]	꿈다락 사업 참여단체 종류	54
[그림 II-7]	지역특성화 사업 참여단체 종류	55
[그림 II-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광역별 참여단체 운영 프로그램 수	63
[그림 II-9]	꿈다락 사업 광역별 참여단체 운영 프로그램 수	64
[그림 II-10]	지역특성화 사업 참여단체 운영 프로그램 수	65
[그림 II-11]	사업별 참여조직이 운영한 프로그램의 예술장르 분야	66
[그림 II-12]	전국 과학문화 지역거점 현황 지도	70
[그림 II-1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절차	79
[그림 II-1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한국 지도	80
[그림 II-15]	문화예술후원 인증 로고	89
[그림 II-1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절차 도식	93
[그림 II-17]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101
[그림 IV-1]	응답자의 거주 지역	145
[그림 IV-2]	응답자의 주요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역	146
[그림 IV-3]	평가지표별 델파이조사 정량분석 종합 결과 시각화	173
[그림 VI-1]	연도별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 현황표	212
[그림 VI-2]	기업 메세나 문화예술 지원 현황	228
[그림 VI-3]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거점 네트워크 구조	233
[그림 VI-4]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거버넌스 체계	238

요약

□ 연구 목적과 의의

1) 연구 목적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가 이행 과정에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구조적, 체계적 조성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원방안 탐색과 체계(안) 제시를 본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함.
- 특히, 지속 가능한 기초 거점 운영을 위해 자율성을 강조한 간접지원 방안과 체계 제시에 방점을 둠.

2) 연구 의의

- 간접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 다각화
- 간접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자율적인 기초 네트워크 형성 촉진
- 기초 거점 평가지표와 추진방안 제시를 통해 양질의 생활권 중심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제공 발판 마련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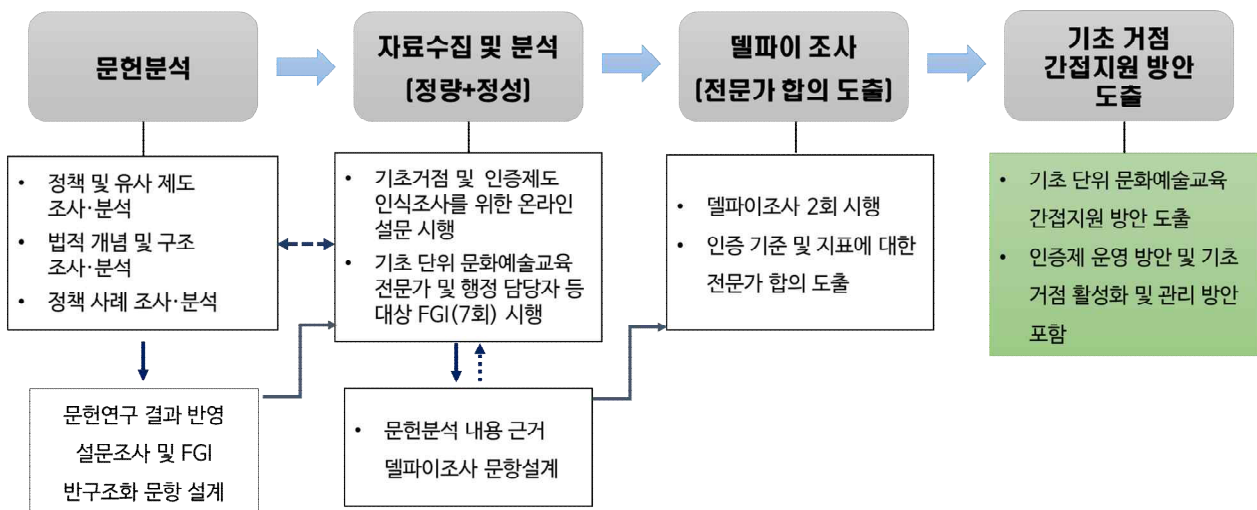
- 인증제도 중심의 간접지원 방안 법적 근거 및 개념, 제도적 특성과 현황 분석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타 부처(예: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간접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생태계적 특성에 적합한 방안 도출
- 간접지원 방법의 설계를 위해 기초 거점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도출하여 그 유형에 적합한 지원사업 운영방안을 제시
- 기초 거점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평가지표 개발(안) 도출

□ 연구 절차와 방법

1) 연구 절차

- 문헌조사: 문화예술 분야 및 타 부처의 유사 제도 및 사업 운영 사례조사와 분석 시행과 문화예술교육 및 유관 영역의 동향 및 환경조사

- 설문조사: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초 거점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시행
- 집단면접조사: 반구조화 면접 문항을 설계하여 행정가를 포함한 지역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시행
- 델파이조사: 선행한 조사(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델파이조사 문항 설계함. 평가 기준 및 지표개발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델파이 기법과 계층화 분석(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기법을 병행하여 시행



연구진 - 진흥원 정례 회의 및 수시 협의

[연구 수행 절차]

□ 연구 결과와 제언

1) 연구 결과

- 기초 거점 조성 및 육성사업
 - 기초에서 광역과 지역을 잇고 지역 내 교육 주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거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을 통해 거점을 만들고 육성해 왔음.
 - 실제로 중앙과 광역에서 주로 진행해 온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기초 거점사업, 꿈꾸는 예술터,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들은 거점을 만들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을 둬.

- 위 세 가지 사업의 특성에 기반하여 거버넌스 체계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기초 거점을 조성 및 육성하는 사업형 모델을 구성할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제시한 표의 내용과 같음.
- 기초 거점 조성육성사업 모델은 주관 주체와 예산조달 방법, 선정 방법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지만, 기초 거점의 공간활용이나 기능 및 역할, 사업내용에서는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기초 거점에 기대되는 역할과 사업 방향성은 조성과 육성 방법과 별개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서 구성되어야 함.

〈표1〉 유형별 기초 거점 조성 및 육성사업 모델

구분	중앙주도형	지자체주도형	중앙-지자체 협력형
주관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시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초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초자치단체
사업 참여대상	민간예술단체, 기관(기초문화재단, 지역문화원 등)	지자체, 민간예술단체, 기관(기초문화재단, 지역문화원 등), 주민	민간예술단체, 기관(기초문화재단, 지역문화원 등), 주민
예산	중앙정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 혹은 보조금	중앙정부와 지자체 매칭
공간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시설 활용 유휴시설 신축 공간 간 기능을 분산하여 연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시설 활용 유휴시설 신축 공간 간 기능을 분산하여 연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시설 활용 유휴시설 신축 공간 간 기능을 분산하여 연계운영
기능/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지역내 교육주체들간의 네트워크 생활권내 주민과 예술가들의 교류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구성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지역내 교육주체들간의 네트워크 생활권내 주민과 예술가들의 교류 광역 단위 거점기관과의 연계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구성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지역내 교육주체들간의 네트워크 생활권내 주민과 예술가들의 교류 광역 단위 거점기관과의 연계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구성 및 확산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조성사업과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구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거점의 특성화 작업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경우 목표하는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컨설팅, 운영관리 및 성과공유회 추진 년도별 구분하여 연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조성과 시설 프로그램개발을 함께 진행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거점의 특성화 작업 목표하는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컨설팅, 운영관리 및 성과공유회 추진 년도별 구분하여 연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조성사업과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구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거점의 특성화 작업 목표하는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컨설팅, 운영관리 및 성과공유회 추진 단년지원 후 지자체 매칭이나 부담수준을 늘릴 수 있음
선정 방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모로 선정	지자체가 기초단위 민간단체나 공공단체에 공모하여 선정	지자체의 공모를 중앙에서 관리

○ 지원방안으로서의 인증제도와 지정제도

- 인증제도와 지정(지원·육성)제도를 비교함으로써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에 대한 보다 적합한 지원방안을 선택 및 추진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인증제도의 경우 새로운 정책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선택, 시행되는 경우가 많음. 다만,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증제도가 시행될 때, ‘품질’인증을 전제로 함.
- 반면, 지정제도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지원을 통한 육성을 시행하고자 특정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시 말해, 지정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공익의 목적에 따른 사업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직접지원이 제공되는 것임.
- 본 연구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에 대한 인증제도 중심의 간접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연구의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현장에 급진적으로 간접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의견이 확인됨. 이에 추가적인 선택지로 직접지원이 수반된 지정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정책방안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간접지원의 체계 구축과 시행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기초 거점기관 또는 조직 인증심사를 위한 평가지표

- 델파이조사와 AHP 가중치 분석 결과를 종합한 표와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한 인증심사 평가지표임.

〈표2〉 평가지표에 대한 델파이조사와 AHP 분석 결과

범주	평가지표 항목	1차 적절성(타당성)		2차 적절성(타당성)		가중치	
		점수 (표준편차)	순위	점수 (표준편차)	순위	항목별	범주별
Ⅰ. 단체 실적 및 역량	Ⅰ-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5.93 (±0.96)	7	5.80 (±1.08)	5	0.22	0.28
	Ⅰ-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6.07 (±0.88)	3	5.87 (±0.99)	2	0.40	
	Ⅰ-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6.00 (±0.93)	5	6.00 (±0.93)	1	0.38	
Ⅱ. 공간	Ⅱ-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5.67 (±1.59)	10	5.53 (±1.6)	10	0.35	0.10
	Ⅱ-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5.2 (±2.08)	12	4.8 (±1.82)	12	0.27	
	Ⅱ-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5.8 (±1.15)	9	5.73 (±1.1)	7	0.38	
Ⅲ. 전문인력	Ⅲ-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	5.33 (±1.68)	11	5.13 (±1.64)	11	0.13	0.22
	Ⅲ-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	6.07 (±0.88)	3	5.80 (±1.15)	5	0.25	

범주	평가지표 항목	1차 적절성(타당성)		2차 적절성(타당성)		가중치	
		점수 (표준편차)	순위	점수 (표준편차)	순위	항목별	범주별
	III-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연계 활용 역량	6.2 (±0.77)	1	5.87 (±1.06)	2	0.62	
IV. 네트워크	IV-1.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6.13 (±0.83)	2	5.87 (±1.06)	2	0.60	0.29
	IV-2.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 보유 여부	5.87 (±0.64)	8	5.73 (±0.70)	7	0.40	
V. 정성평가	V-1.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포함	6.00 (±1.07)	5	5.67 (±1.45)	9	1.00	0.11

〈표3〉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안)

범주	평가지표 항목
단체 역량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신청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에 속해 있거나 구성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타 문화예술분야 또는 비문화예술 조직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있다면, 협력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이행했는가?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인력교류 포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발굴, 양성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최소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을 갖추고 있는가?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가? 평가 대상 시설은 최근 2년 동안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후, 향후 3년 사업계획이 지역사회 특성과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조직 역량, 인력, 시설, 프로그램, 재원조성 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2) 연구의 제언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지형과 특성을 고려한 기초 거점 조성·육성(안) 수립 중요
- 광역-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생활권 기반 기초 거점 조성 및 지속 발전정책 추진
-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
- 간접지원 방안 수용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Indirect Support Measures for Arts Education Hubs at the Local Level

Yim, Haksoon, Ph.D.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 Media Content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hin, Hyesun, Ph.D.

Co-founder and Director, WECULTURE research and consulting

Na, Bori, Ph.D.

Visiting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Information, Knowledge and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Kyoung-Shin, Ph.D.

Adjunct Professor, Law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 Research Purpose and Significance

1) Research Purpose

-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support measures that can be used in the long term and to present related policy plans, as the need and demand for structural and systematic creation of a hub for arts education at the local level have been identified in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 In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presenting indirect support plans and systems that facilitate autonomy for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local arts education hu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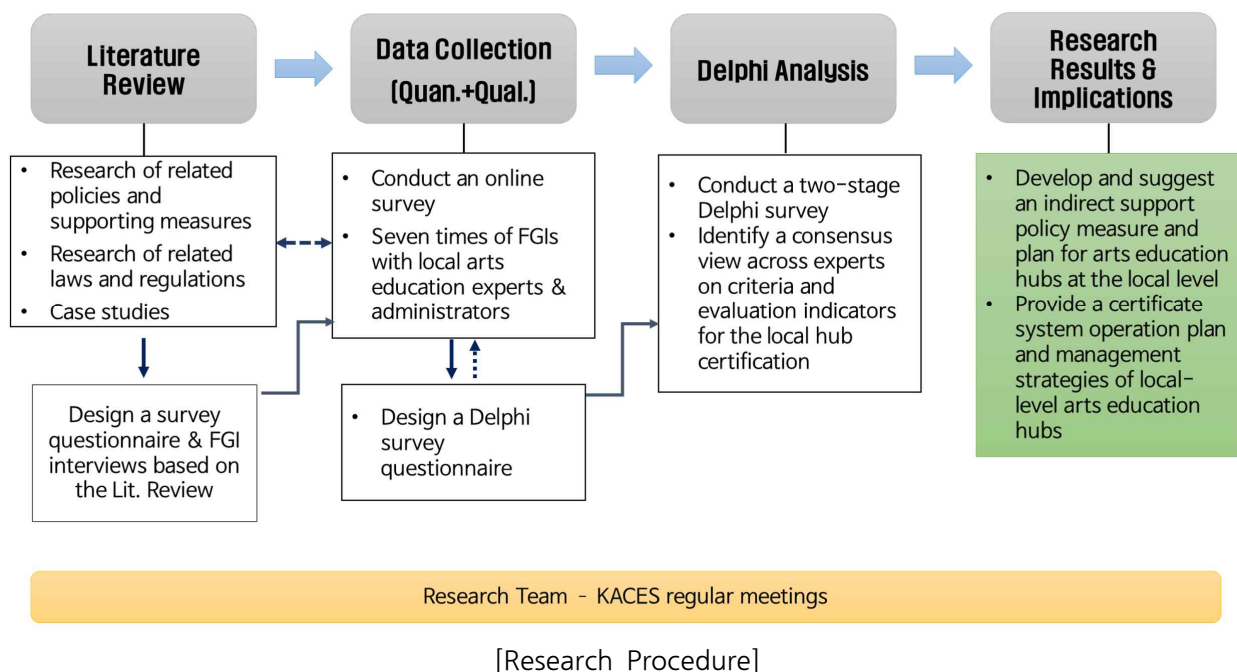
2) Significance of the Study

- For diversifying public support measures for creating sustainable arts education ecosystems at the local level through indirect support plans.
- For facilitating the formation of an autonomous local governance network through indirect support plans.
- For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the constant provision of high-quality arts education programs to the citizens at the local level by presenting evaluation indicators and policy plans designed for local-level arts education hubs.

3) Research scope

- Analysis of the current indirect support measures based on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ir related laws, regulations, legal concept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 Research of indirect support policies of other ministries (e.g.,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tc.) to create and revitalize the arts education hubs at the local level, and derive measures suitable for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ts education domain.
- For designing indirect support measures and related policies, this report suggests the operation direction and role of the hubs and a policy implementation plan.
-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index to be used as selection criteria for hubs at the local level.

□ Research Procedures and Methods



-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of related systems and policy implementations in the domain of arts and culture and other ministries; and trend and environment research in arts education and related fields
- Survey: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local arts education administrators and experts on introducing a certification system for local-level arts education hubs.

- Focus Group Interview: Design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 and conduct interviews with local arts education experts and administrators.
- Delphi Survey: Delphi survey items were design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previous surveys (literature review, survey, focus group interviews). The Delphi and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techniques are implemented in parallel, focusing on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development.

□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1) Research Results

- Development of Local-level arts education hubs and policy projects to foster the hubs
 - The need for a network that connects regional-level entities and arts education entities at the local level and local-level hubs to promote the revitalization of arts education in regions has been addressed. With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created and nurtured local-level arts education hubs through policy programs.
 - The arts education hub projects of the metropolitan arts education center, the 'Dreaming Arts Space,' and the local-level arts education hub establishment projects, which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have mainly carried out, are aimed at creating hubs and revitalizing their operation.
 -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bove three businesses, it is possible to construct a business model that creates and nurtures local-level hubs by classifying types by governance system. Details are shown in the table below.
 - The local-level arts education hub development project model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host entities, budget procurement plans, and selection process. Still,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ypes of space utilization, function and role, and arts education programs of the local-level hub. The role and governance direction expected of the local-level hub should be configured as a goal to be achieved independently of the way of creation and development.

[Creation of the Local-level Arts Education Hub and its Development Business Models]

Category	Center Government-led	Local Government-led	Central – Local Government Cooperative
Host Entitie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Regional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 Regional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s
Target Project Participation	Private art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e.g., local-level cultural foundations, regional cultural centers, etc.)	Local governments, private arts organizations, institutions (e.g., local-level cultural foundations, regional cultural centers, etc.), and residents	Private arts organizations, institutions (e.g., local-level cultural foundations, regional cultural centers, etc.), and residents
Budget Sources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Local government budget or subsidies	Matching the alloc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pace Uti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own facilities. • Renovate and use idle space/buildings in the area. • Build/create a new space. • Manage multiple spaces by usage and n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own facilities. • Renovate and use idle space/buildings in the area. • Build/create a new space. • Manage multiple spaces by usage and n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own facilities. • Renovate and use idle space/buildings in the area. • Build/create a new space. • Manage multiple spaces by usage and needs.
Function / R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arts education programs. • Networking among educational entities in the area. • Creating meeting and communicating opportunities between residents and artists in the area. • Structuring and promoting regional arts education poli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arts education programs. • Networking among educational entities in the area. • Creating meeting and communicating opportunities between residents and artists in the area. • Structuring and promoting regional arts education poli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arts education programs. • Networking among educational entities in the area. • Creating meeting and communicating opportunities between residents and artists in the area. • Structuring and promoting regional arts education policies.

Category	Center Government-led	Local Government-led	Central – Local Government Cooperative
Pro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tinguish between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and program development projects. • Develop distinguished missions and programs for each local-hub based on the region's circumstances and needs. • For program development, provide funding, consultation, management, and a conference to present its project results. • (In)direct support by year for a determined peri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tinguish between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and program development projects. • Develop distinguished missions and programs for each local-hub based on the region's circumstances and needs. • For program development, provide funding, consultation, management, and a conference to present its project results. • (In)direct support by year for a determined peri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tinguish between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and program development projects. • Develop distinguished missions and programs for each local-hub based on the region's circumstances and needs. • For program development, provide funding, consultation, management, and a conference to present its project results. • Provide funding for a year and then consider offering matching funds with the local government's allocated budget or lowering its funding size.
Selection Process	Review process coordinated by the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Review process coordinated by public agencies or authorized private organizations at the local level	The central government manages the review process coordinated by public offerings by local governments

○ Certification system and designation system as (in)direct support measures

- Comparing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designation (support/nurturing) system can be used to choose and promote a more suitable support plan for the local-level arts education hub.
- In the case of certification systems, promoting new policies is often implemented as the primary purpose. However, when the certification system is implemented as a means of policy promotion, 'quality' certification is premised.
-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designation system, a specific institution is designated to carry out the project to foster a public project through government funding.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implementing the designation system, direct support from the state is provided for public program operation following the purpose of public purpose.
-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indirect support plan for the local-level arts education hub. Still, concerns about the radical promotion of the indirect support

plan for unprepared fields were identified during the research. Therefore, as an additional option, the designation system accompanied by direct support is reviewed together to expand the range of policy options and to consider graduall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n indirect support system.

○ Certification review index for the local-level hub institution or organization

- This table combines the Delphi survey and AHP weight analysis results. This certification review index has been modified, reflecting the results.

[Results of Delphi Survey and AHP Analysis on Review Indicators]

Category	Review Indicators	1st Survey Result: Relevance (Feasibility)		2nd Survey Result: Relevance (Feasibility)		Weight	
		Score (Standard Deviation)	Order	Score (Standard Deviation)	Order	By item	By category
I . Organization's Performance Records and Capabilities	I-1. Record of arts education program operation for more than two years	5.93 (±0.96)	7	5.80 (±1.08)	5	0.22	0.28
	I-2. Record of arts education programs researched and developed by the applicant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6.07 (±0.88)	3	5.87 (±0.99)	2	0.40	
	I-3. Professionals with arts education program planning capabilities	6.00 (±0.93)	5	6.00 (±0.93)	1	0.38	
II . Space & Infrastructure	II-1. Owning or securing arts education facilities and space	5.67 (±1.59)	10	5.53 (±1.6)	10	0.35	0.10
	II-2. Whether the facility to be evaluated has been used as an arts education space for more than two years	5.2 (±2.08)	12	4.8 (±1.82)	12	0.27	
	II-3. Whether to secure local facilities and space for arts education programs	5.8 (±1.15)	9	5.73 (±1.1)	7	0.38	
III . Professional Personnel	III-1. Employment of at least one person specializing in arts education	5.33 (±1.68)	11	5.13 (±1.64)	11	0.13	0.22
	III-2. Competence in fostering and training local arts education professionals	6.07 (±0.88)	3	5.80 (±1.15)	5	0.25	
	III-3. Competence to connect and work with arts education human resources in the area	6.2 (±0.77)	1	5.87 (±1.06)	2	0.62	
IV . Governance Network	IV-1. Having (capacity to build) a local network for arts education in the region	6.13 (±0.83)	2	5.87 (±1.06)	2	0.60	0.29
	IV-2. Record of various cooperative work experiences for arts education	5.87 (±0.64)	8	5.73 (±0.70)	7	0.40	
V . Qualitative Evaluation	V-1. Reviewing the applicant organization's business plan as a local-level hub	6.00 (±1.07)	5	5.67 (±1.45)	9	1.00	0.11

[Review Index for Certification Entity Selection]

Category	(Modified) Review Indicators
Organization's Performance Records and Cap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es your organization have the capacity to plan an arts education program? • Has your organization independently researched and developed arts education programs? • Has your organization operated arts education programs conducted for more than two years?
Space &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es your organization belong to, or have the capacity to form, a regional arts education cooperation network? • Does your organization have conducted various cooperative work experiences with other arts fields or non-arts organiz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so, what roles and contributions did your organization make in the collaboration process?
Professional Personn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es your organization have the capacity to hire (including human resource exchange) external experts in local arts education through networks, etc.? • Does your organization have the capacity to discover and nurture arts education professionals in the area? • Does your organization have at least one employed person specializing in arts education?
Governance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 you have a track record of operating programs using various local facilities and spaces? • Does your organization own arts education facilities and spaces, or can they secure them? • Has your facility been used for arts education programs for the past two years?
Business Plan (Qualitative E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ter the certification is obtained, does your business plan for the next three years adequate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 local (arts education) community? • As a local arts education hub, have you identifie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human resources, facilities, arts education programs, and fundraising plans?

2) Policy Implications

- Emphasis on establishing a creation and promotion plan for the local arts education hub considering the regional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arts education.
- Reinforcing regional-local governance for cooperation in arts education
- Establishment of the local arts education hub for living areas and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 Carefully planned preparation stages for an introduction to the certification system are required for arts education communities and their partners.
- Build a common ground of understanding and adopting indirect support measures in the arts education domain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연구의 방법과 기대효과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되어 온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간접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 현장의 다양한 여건과 수요에 대응하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의 자율적인 설계와 협력 거버넌스 조성을 지향하는 ‘풀뿌리’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음.
 - 해당 목적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방안 탐색과 지역화 흐름에 따라 중앙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직접지원 형식 외에 간접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촉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본 사업에서 정의하는 거점은 다음과 같음.
 - ‘거점’에 대한 정의로 공간적인 의미 외에도 실행 주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함. 다시 말해,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나 자원을 기획하여 엮어내고 촉진하는 주체”로 ‘거점’을 정의함으로써 공간과 같은 물리적 요건에 귀속되지 않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환경 및 생태계, 그리고 협력 구조의 조성 및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 수행을 강조하였음(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n.d.:11).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에 관한 그간 진행된 연구와 수립된 정책계획 및 종합계획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됨.
- 여전히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책계획이나 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에 근거가 될 법·제도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1-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 배경 및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문화예술교육 법률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제도.•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계획수립,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미흡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2018-2022) : 기초 지역,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2006-2009) •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2009-2011) • 2018년 문화예술교육 지역협력위원회 운영(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 (2020-현재) • 2020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지방이양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8)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릴레이 간담회 추진(2018.12-2019.3) • 기초센터 시범 운영 준비단 구성 운영(2019.6-11) • 지역화 로드맵 수립 추진단 구성 운영(2019.7-12) •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 분석 연구 (2019)

□ 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 이행도

- 「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부터 추진되어 온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분권화 기조에 근거하여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한 기반 확립과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간접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추가로 확인됨.
- ‘I-1-4. 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은 「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로서 시기상 2021년부터 추진과제가 이행되는 일정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음.
 - 이는 ‘I-1-3. 광역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같이 광역 단위로의 문화예술교육 지역 분권화 추진에 이은 정책의 단계적인 이행 일정으로서 해석됨.
- 2021년에 시행된 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이행도 인식조사(신혜선 외, 2021)에 따르면,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이 가장 낮은 이행도를 달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 이처럼 낮은 이행도는 지역 분권화 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동시에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체계와 구축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기도 함.
 - 또한, 연구 결과 생활권 중심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체계구축 및 이에 대한 인식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역의 자율적 문화예술교육 지형 구축과 광역-기초 간의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1-2〉 「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중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과제

추진과제		추진주체	추진일정
I.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I-1.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1.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의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문체부	2019~
2.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		지자체	2019~
3. 광역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문체부, 지자체	2019~
4. 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		문체부, 지자체	2021~
I-2.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1.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문체부	2018~
2. 지역 내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공간 지원		문체부, 지자체	2018~
3.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 강화		문체부, 지자체	2018~
I-3.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1. 중앙과 지역간 협력 강화		문체부, 지자체	2018~
2.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문체부, 교육부 등	2018~
3. 문화정책 내 연계협력 강화		문체부	2018~
4. 지역 중심 문화시설 및 타 영역과의 협력 강화		문체부, 지자체	201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1.).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pp.36-37. 발췌.

1.2 연구의 목적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접지원 방안 탐색

- 문화예술교육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형식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재 지원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됨.
- 이에 직접지원에 더하여 간접지원을 통해 자립을 위한 발판 마련을 돕고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형성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가 이행 과정에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구조적, 체계적 조성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원방안 탐색과 체계(안) 제시를 본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함.
- 특히, 지속 가능한 기초 거점 운영을 위해 자율성을 강조한 간접지원 방안과 체계 제시에

방점을 두고자 함.

○ 이에 다음 세 가지를 본 연구의 세부 목적으로 정함.

- 기초 거점에 대한 간접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및 가능성 논의
- 간접지원 방식으로서 인증제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적용 가능성과 적합성을 검토
- 기초 거점의 유형 및 역할에 따른 인증제도 설계, 운영관리, 성과진단 방안 제시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2.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검토하고자 하는 자료와 내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이는 유관 정책의 시의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임.
- 시간적 범위:
 - 2020~2022년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이행 기간을 중심으로 함.
 - 단, 코로나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차 종합계획의 기점인 2018년도부터 논의 및 자료를 추가로 참고함.
- 내용적 범위:
 - 타 부처(예: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기초 및 생활권 단위 중심 유사 사업 및 정책 방안
 - 인증제도 중심의 간접지원 방안 법적 근거 및 개념, 제도적 특성과 현황
 - 서유럽과 북미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함에 있어 직접지원과 함께 대안적 지원(예: 미국)과 간접지원을 활용하고 있음. 미국의 대안적 지원은 비영리 단체 대상 조세 혜택 외에도 주(state)마다 조세제도에 따라 숙박업소세금, 특별자산세, 주류판매 및 도박관련 업종세금(Sin Taxes) 등을 활용하여 주(state)와 시(local) 행정단위에서 지역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음. 서유럽과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간접지원 형태의 경우, 세제 지원과 함께 금융특혜(자금대출)를 제공하거나 복권기금을 활용하고 있음(Mulcahy, 2000).
 - 조세제도를 통한 민간의 직접지원 유도나 문화예술 단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의 간접지원보다 확장된 접근에서 간접지원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 구성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비금전적 지원을 간접지원의 범주로 보고자 함. 예를 들어,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기회 및 지역협의체 활동 촉진을 위한 장치(예: 평가지표 활용) 마련, 대상 단체/기관의 전문성과 우수성에 대한 보상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음.

2.2 연구의 내용

□ 연구의 주요 구성

- 연구의 세부 목적과 연계하여 먼저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구성과 활성화를 위해 타 부처의 간접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생태계적 특성화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도출함.
- 다음으로 간접지원 방법의 설계를 위해 기초 거점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도출하여 그 유

형에 적합한 지원사업 운영방안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지원대상 기초 거점의 운영 실태와 성과진단을 위한 방안도 도출함.

□ 기초 거점의 유형 및 역할 제시

-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단위의 지역적 맥락에 바탕을 둔 기초 거점의 유형과 역할의 차별화 방향 논의
- 기초 거점으로서의 공통 역할과 유형별 특화 역할 제시

□ 기초 거점에 대한 장기적 지원방식 설계

- 지역화 흐름을 고려하여 중앙주도의 직접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간접지원 방식을 검토
 - 간접지원 방식 중,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검토
- 기초 거점으로서 인증제의 필요성, 목적, 방식, 고려사항 등 검토
 - 타 부처 및 문제부 내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해 근거 법제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검토
- 기초 거점으로서 인증제 시행 시, 기준 및 절차 설계 및 제시
 - 기초 거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 도출
 - 인증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 신청-평가-인증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증제 운영을 위한 체계 설계 및 제시
- 기초 거점으로서의 인증제 시행 시, 제도 활성화 및 관리방안 도출
 - 인증된 거점의 고유 역할 수행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유도 방안 논의
 - 인증된 거점의 활성화 지원방안(예: 인센티브 등) 검토
 - 중앙(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광역 거점과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설정 및 전략 방안 논의

□ 기초 거점의 성과 점검 방향성 및 추진방식

- 기초 거점으로서의 인증제 시행 시, 거점별 성과에 대한 진단 및 점검 방식 설계 및 제시
 - 기초 거점의 인증 목적에 따른, 개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평가와 차별된 성과 점검이 가능한 진단 방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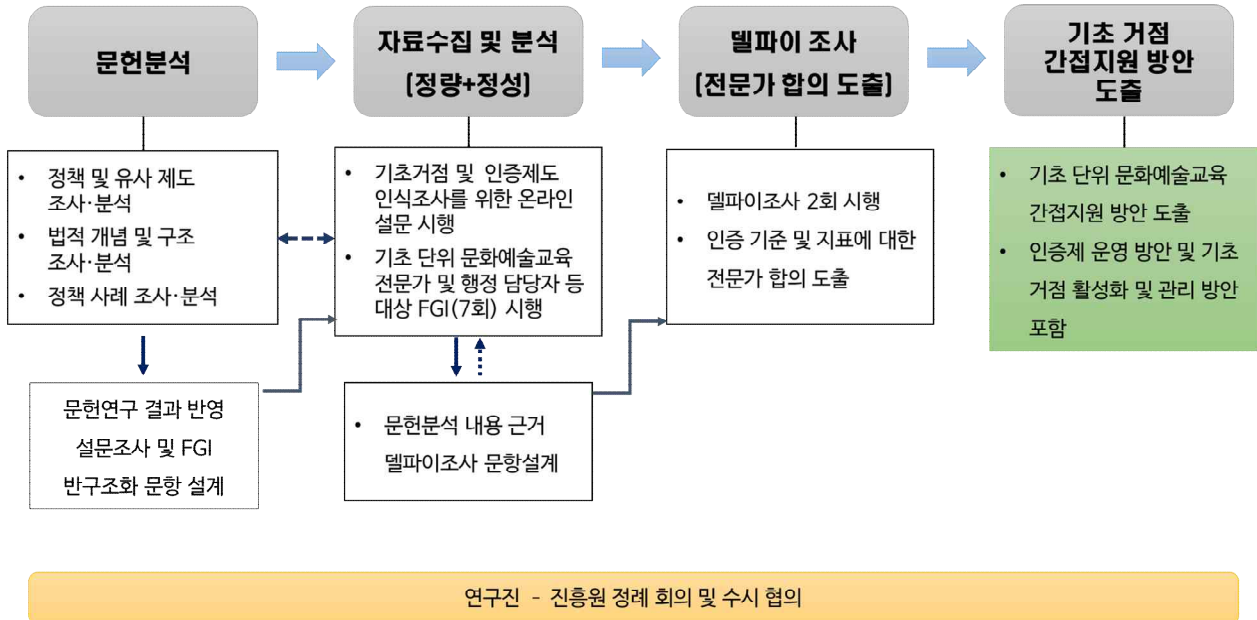
3. 연구의 방법과 기대효과

3.1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과업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정량연구), 심층면접(정성연구), 델파이조사를 순차적으로 활용한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함.
- 문헌조사: 문화예술 분야 및 타 부처의 유사 제도 및 사업 운영 사례조사와 분석 시행과 문화예술교육 및 유관 영역의 동향 및 환경조사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개념, 정책 및 참여 조직 유형 분석
 - 인증제도의 개념과 운영현황 등 실태 및 사례조사
 - 거점 제도와 인증제도 관련 법, 조례 등 조사분석
- 양적연구: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초 거점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시행
 - SurveyMonkey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
 - 300+명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약 8일간(2023.01.05~13)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208건의 응답 수집
- 질적연구: 문헌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반구조화 면접 문항을 설계하여 행정가를 포함한 지역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시행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관 및 단체와 협력 단체, 그리고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시행
 - 문화재단, 문화원, 민간 문화예술교육 단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 등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룹별 3인 내외로 구성하였으며, 7개 지역(구례, 광주, 대전, 울산, 완주, 서울, 전주)에서 총 7회의 FGI를 시행함.
 - FGI 참여자는 협력 관계자 풀을 보유한 진흥원과 협의하여 구성하였으며, 추가로 스노우볼(snowball) 기법을 활용하여 모집함.
- 델파이조사: 선행한 조사(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델파이조사 문항 설계함. 평가 기준 및 지표개발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델파이 기법과 계층화 분석(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기법을 병행하여 시행
 - 전문가 합의도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델파이조사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문가, 현장 전문가, 행정가를 중심으로 20인의 참여자를 선별하여 구성함.
 - 총 2회에 걸쳐 설문을 시행하며, 2회차에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을 AHP를 시행함.

3.2 연구수행 절차

○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3.3 연구의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기반 확립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간접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 다각화
- 간접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자율적인 기초 네트워크 형성 촉진
- 기초 거점 성과 점검 방향 및 추진방안 제시를 통해 양질의 생활권 중심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제공 발판 마련
- 현장 중심 의견 수렴을 통한 상향식 접근으로 수립한 간접지원 방안 및 체계 제시를 통한 지원사업의 실효성 증진

Ⅱ.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정책의 배경과 실태

1. 개념과 역할
2. 기초 거점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3.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 참여조직 현황
4. 거점 관련 제도 분석
5. 미래 거점 조직의 요건 및 유형 분류
6. 유관 사례조사

Ⅱ.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정책의 배경과 실태

1. 개념과 역할

1.1 거점의 개념

- 거점의 사전적 의미
 - 표준대국어사전에서 ‘거점(據點)’은,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을 뜻함.
- 일반적으로 거점은 활동의 근거가 되는 지점을 의미.
 - 조합어들의 개념풀이에서도 사전적 의미와 유사한 정의가 나타나는데, ‘성장거점’은 지역 개발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으로 정체 지역이나 미개발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군사용어로서 ‘거점지역’은 점령하여 확보함으로써 공중 또는 해상으로 부대 및 물자의 지속적 수송을 보장하고 계획된 합동 작전에 필요한 기동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임.
 - 거점의 맥락에 따라 세부 의미가 다를 수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특정 활동의 근본이 되는 장소를 의미함.
- 거점은 공간에 활동을 수반하여 특정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청됨.
 - 협의로서 거점시설은 생활권 내 주민들이 모이고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 개념을 확장하면, 거점시설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봄(박성은, 이석환, 2016).
 - 과학기술거점의 일생 관점에서 대덕연구단지의 진화과정을 분석(송성수, 2009), 산업클러스터 정책에서 경쟁거점 위주 판단(정옥주, 2006)을 하는 등 산업에서 확산을 위한 근거지로서 거점이 논의되어 옴.
 - 지역 커뮤니티 거점 만들기 사례(남지현, 2014) 등 지역의 특정 이슈들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지로서의 거점도 논의되었음.
 - 거점은 장소성과 함께 그 공간에서 공유되는 콘텐츠와 가치가 함께 논의되고 있음.
 - 거점의 역할과 사용자에 따라 거점의 유형을 구분해 오고 있으며, 특히 공공서비스 공급의 범위와 연계하여 커뮤니티형, 지역자원의 연계, 문화관광의 지원 등으로 구분 가능(박성은, 이석환, 2016; 장민영 외, 2021)

1.2. 거점의 역할

- 거점은 장소성을 기반으로 특정 활동을 수행하며 그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거점공간은 거점‘시설’로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이 되거나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시설이 되기도 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기능이 추가되기도 함(장민영 외, 2021).
- 도시재생과 맞물려 중앙부처 사업들에서 많은 거점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장민영 외, 2021).
- 문화예술교육분야에서는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광역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서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거점은 장소성과 활동의 성격,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게 되므로 거점을 구성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거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물리적 장소 범위 뿐 아니라 활동을 발생시킬 운영자와 교육내용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최근 거점에 기대하는 역할이 추가되었는데, 네트워크 기능이 그것임.

- 거점경로당의 경우 운영프로그램의 확충과 시설환경 개선 뿐 아니라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중간조직으로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시설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기를 기대받고 있음(송명중, 김모두, 이효원, 2019). 즉, 사용자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가지 않고도 두 조직들이 가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거점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임.
- 시민문화예술교육에서 거점공간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벌어지는 단순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 아니라 거점과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을 의미(이영범, 2020)
- 그렇다면 공간의 성격과 공간 운영주체 및 운영하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거점 공간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콘텐츠 중심으로 기획자가 운영하는 문화예술거점공간은 프로그램형 성격을 가질 것임. 반면 기획자와 참여자가 공간을 함께 운영하면서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플랫폼형 거점공간이 되고, 기획자와 참여자, 지역단체가 공간을 운영하면서 공간들의 연계에 신경 쓴다면 네트워크형 거점공간이 될 것임(이영범, 2020). 이는 공간과 공간 사용자의 역할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임.

○ 기초 단위 생활권에서도 문화예술교육활동이 이루어질 때 거점이 필요할 수 있음.

- 기초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활동이 이루어질 때 사용자와 콘텐츠, 공간이 만나 가치를 형성하고 네트워크가 일어날 때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행되어 왔던 문화예술교육 정책들과 사업을 살펴보면서 문화예술교육활동의

현황과 방향성을 짚어보고 기초에서의 거점 운영 가능성을 판단한 후, 나아가 기초 단위에서 거점이 될 수 있는 조직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제기됨.

〈표 II-1〉 거점의 개념과 역할로 본 거점의 구성요건

구성요건	근거
프로그램	활동(표준대국어사전)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벌어짐(이영범, 2020)
시설	근거가 되는 지점(표준대국어사전) 기반시설 혹은 활성화 시설(장민영 외, 2021)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공간(박성은, 이석환, 2016)
인력	기획자와 참여자의 공간운영(이영범, 2020)
조직역량	네트워크 기능의 기대(이영범, 2020) 시설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송명중, 김모두, 이효원, 2019)

1.3. 문화예술교육분야에서의 기초 거점 논의

- 문화예술교육분야에서의 거점 논의는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
 - 2017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전문, 전용공간 조성방향과 모형, 추진방안을 제시함. 특히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거점개념을 제안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한 시설공간을 기반으로 문화공공성의 이념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실현시키며, 지역의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보급, 지원하며 교류하는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의 거점기관이 필요함을 강조
- 2018년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문화비전 2030 등 문화예술교육 추진 기반이 되는 계획들이 수립됨.
 - 2018.1월 발표된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에 따르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추진전략 1.‘지역기반 생태계 구축’의 세부 추진과제 1-1.‘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아래 4.‘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이 계획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2020년 기초센터 시범 지정을 목표로 함.
 - 2018.5월 발표된 문화비전 2030에 따르면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 문화분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과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함.¹⁾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제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지역분권 맥락에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를 개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자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전문적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기초 단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음.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 이에 기초 단위 거점으로서의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이 제안됨.
- 기초-광역-중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기능할 것을 제안
- 대부분 지역현장에서는 기초 단위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역 현장 단위의 의견이 상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초문화재단,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이 각기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

○ 기초 단위 센터 운영의 상세내용 논의

- 2018년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결과, 센터 운영의 상세 내용이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역의 여건과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기초 단위 추진체계 구축 관련 정책 담론 형성을 통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향후 후속 연구 토대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월 3일~1월 17일 총 12회 동안 진행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역 릴레이 간담회가 개최됨.
- 본격적으로 기초 단위 센터 유형, 지역별 특화운영, 운영 방안에 대한 제안들이 등장
- 2019.11.11. <2019 기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함께 이야기하는 집담회> 개최,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100여명이 참여함. 기초센터의 성격을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을 기획, 촉진하는 거점’으로 소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17개 광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을 분석하

1) 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1-3. 문화권리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1-3-1.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행정체계 구축 : 기초센터 지정방안 마련)

6. 지역 문화분권 실현

6-4. 중앙과 지방 간 협치모델 설계

6-4-1. 지역문화, 예술분야 협력체계 구축 : 기초센터 지정 기반 마련

여 도출한 결과 문화예술교육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내실화의 방안으로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제고하고 기초센터를 신설하여 지역문화분권을 이룰 것을 제안(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초센터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 제안됨. 특히 문화예술교육 특화자산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용시설 지원이 필요한데, 이 공간들은 지역거점 및 허브가 될 수 있기 때문

○ 기초 단위 거점 구축 사업 시작

- 2019년 교육진흥원의 기초 단위 문화예술 거점 구축 지원사업이 시작되어 2020~2022 까지 3년간 수행

2. 기초 거점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2.1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사업 및 예술교육인력양성, 정책연구, 국제교류 등을 폭넓게 수행해 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해온 문화예술교육사업을 2022년 기준으로 구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목 내 2022년 계획 기준 총 예산은 124,616백만 원

〈표 II-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사업(2022년 기준)

사업 단위				예산 출처	2022 계획기준 (백만)	지원기관 종류	지원 대상기관 설명
학 교 문 화 예 술 교 육 지 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다각화 제외)			국고 (민간보조)	48,859	광역 단위 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단체, 지방문화원, 대학 산학협력단 등
				국고 (지자체 보조)	5,813		
				시도교육청	30,151		
				시·도	5,813		
	학교 문화 예술 교육 다각 화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국고	2,400	기관/ 민간단체	민간단체, 지방문화원, 대학 산학협력단 등
	매개자 협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범사업 '예술로 링크(Link)'		국고	400	기초 단위 기관 및 민간단체	기초 단위 지역 소재 민간단체, 문화재단 등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국고	3,070	초·중·고등학 교	농산어촌 구도심 등 전교생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사 회 문 화 예 술 교 육 지 원	문화 취약 계층 문화 예술 교육 지원 (22 신규)	복지 시설 이용 자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 *	아동보호시설	국고	1,190	전국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 법인시설
			노인복지관	국고	2,297	전국 노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국고	2,649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비	국고	424	-	-

사업 단위				예산 출처	2022 계획기준 (백만)	지원기관 종류	지원 대상기관 설명
	특수 소외 계층 중심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국고	3,105	기관/ 민간단체	-
			군장병	국고	864	기관/ 민간단체	-
			소년원 학생	국고	135	기관/ 민간단체	-
			교정시설 수용자	국고	540	기관/ 민간단체	-
			치료감호소 수용자	국고	27	기관/ 민간단체	-
			탈학교·탈가정 청소년	국고	540	기관/ 민간단체	-
			사각지대 문화취약계층	국고	270	기관/ 민간단체	-
			사업관리비 등	국고	521	-	-
		사회문화예술교육 기반 지원(연구, 교육사, 홍보, 정보)		국고	1,000	-	-
		사업관리비		국고	28	-	-
	생애 주기 별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 '22 신규	생애 주기 별 문화 예술 교육 개발 확산	후기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상상만개+)	국고	300	-	교육진흥원 기획 및 전문 운영업체 위탁 운영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로 레벨업)	국고	332	-	교육진흥원 기획 및 전문 운영업체 위탁 운영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1,000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10개소 선정 (지역센터에서 직접 운영 혹은 재교부 추진)
			사회이슈 연계 확산 시범사업	국고	568	기관/ 민간단체	-
		지역 문화 예술 교육 관리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국고	310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지방경찰청/관할경 찰서 - 지방자치단체, 기초 문화재단 및 민간예술단체 협력
				지방비	290		
			지역 기반조성+ 기초 거점구축 지원	국고	1,630	기초 단위 기관 및 민간단체	기초 단위 지역 소재 민간단체, 문화시설, 문화재단 등 ※'22년 사업종료
		기반조성 (정책연구+지식정보화+홍보+국제 교류+성과확산)		국고	2,043	-	-
		사업관리		국고	24	-	-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		국고	3,604	기관/ 민간단체	(교육부) 지정공모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공모 (치매안심센터) 일반공모

사업 단위			예산 출처	2022 계획기준 (백만)	지원기관 종류	지원 대상기관 설명
	취약 계층 아동 청소년 예술 활동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국고	3,480	거점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원,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예총 지회, 오케스트라단
		꿈의 무용단	국고	3,050	기관/민간단체	기초 문화재단, 공립(시도/군구) 무용단, 민간 무용단체, 무용관련 학과 대학 등
	토요 문화 학교 운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고(민간 보조)	1,886	기관/민간단체/대학/청소년활동시설 ****	예술단체, 교육단체,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원, 예총 지회, 대학 산학협력단 등
	융복합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국고	890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사업 수행
지방비			800			
지역 문화 예술 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꿈꾸는 예술터)		국고	4,600	지방자치단체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구축을 지원, 지역 운영기관을 설정*****
			지방비	4,40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국고	4,045	지방자치단체	지역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 협력사업 추진
			지방비	4,045		
문화 예술 교육 기반 구축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국고	2,000	-	교육진흥원 기획 및 전문 운영업체 위탁 운영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국고	1,445	-	교육진흥원 기획 및 전문 운영업체 위탁 통한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교원, 기획자, 행정인력 등 연수 제공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지원***		국고	1,445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공모: 미술관, 평생학습원, 문화원, 작은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재단 등 다양하게 참여
지방비			1,317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과 사업 통계 내부자료(2022.12.7.) 저자 재구성

주: 문화예술교육 ODA,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사업은 기초 및 거점과 거리가 멀어 생략하였음.

주*: 구,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주**: 구,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주***: 구,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지원

주****: 가족여가: 단체·기관 지원, 주말예술캠퍼스: 대학교 산학 지원, 청소년송캠프: 청소년 활동시설 지원, 순환 랩: 운영사 통한 예술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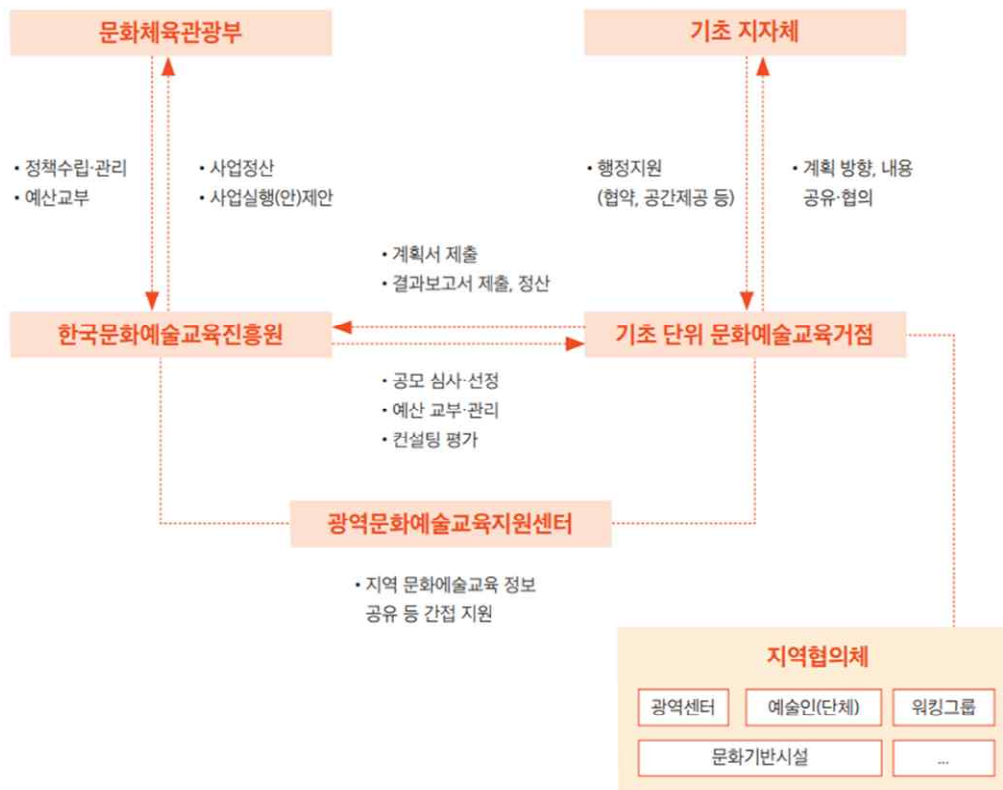
주*****: 2022년까지 전용시설 조성 개관 완료지역(운영기관)은 전주 팔복야호예술놀이터(전주문화재단), 성남 꿈꾸는 예술터(성남문화재단), 강릉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강릉문화재단), 청주 꿈꾸는 예술터(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장수 꿈꾸는 예술터(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 그중 지역 중심사업으로서 가장 규모 및 범위가 넓고 오랜 기간 운영해온 주요 사업들은 세 가지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센터 기본사업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그리고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그것임. 그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2년부터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고 소양을 키우며,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을 목표로 함. 문화예술 장르 전반을 지원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위탁하여 운영함. 2022년에는 총 1,886백만 원 예산을 바탕으로 56개 프로그램을 운영, 1,783명이 참여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n.d.; 기관내부자료, n.d.).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화예술장르 전반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역의 현황과 특성, 수요를 고려한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함. 이때 사업공모단체의 심사 선정은 17개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맡는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 과정에서 사업관리 지원을 담당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n.d.).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정부 타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을 누리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법무부와 협력하여 교정시설,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처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협력하여 상이군경 등에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참여단체나 기관은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한 운영단체-교육시설 매칭하는 지정공모와 운영단체가 교육시설을 직접 섭외하여 신청하는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하며, 프로그램당 교육운영비(인건비, 강사비, 교통비, 교육재료비, 교육기자재 임차비 등)을 지원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n.d.).

□ 거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 그 외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스스로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분권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
- 사업목적: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풀뿌리’ 문화예술교육 협력거점 조성으로 지역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지원대상: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한 기초 단위(시·군·구) 기관 및 단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n.d.)
- 사업의 필요성이 기존의 중앙, 광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넘어보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지역에 지속가능한 토대 및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기획하고 활성화하는데 지원하고자 하였음.
- 사업추진체계는 중앙부처-진흥원-기초 거점주체-기초지자체-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서로 연계되어있는 구조로 구성됨.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추진체계 도식, p.9 발췌.

[그림 II-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 추진체계

- 2022년 기준 1년차 주체 8곳, 2년차 6곳, 3년차 8곳

- 문화재단, 문화의집, 민간단체, 연합회, 협동조합, 문화원 등에서 참여
- 가장 많은 참여단체는 문화의 집

〈표 II-3〉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 연차별 현황

연차별	2020	2021	2022
운영규모	신규 8개소	기존 8개소 + 신규 6개소	기존 14개소 + 신규 8개소
예산규모(총액)	537,950천원	1,155,540천원	1,772,726천원
세부사업개수	177개	120개	55개
누적 운영회차	246	1,282	1,388
누적 참여 지역민수	4,763명	16,085명	58,990명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내용 기반으로 저자 정리

- 참여 기초주체들은 인식제고(33%), 조사연구와 아카이빙(24%)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며, 자원발굴과 지원(13%)에도 예산을 많이 배분했음. 이러한 활동들은 프로그램(26%)이나 공유회, 포럼 등(20%)의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 기초 거점 사업 참여자들 총 95명 중 54%는 성과계획 및 달성에 가장 만족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행정절차(18%)에 만족하였음.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예산규모(30%), 행정절차(28%)를 꼽아 예산규모가 작고 행정절차를 따라가는데 쉽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기초 거점 사업 참여자들은 거점 구축 사업의 역할로 40%가 발굴을 꼽았는데, 자원의 발굴 및 아카이빙 연결이 중요하다고 보았음. 그 다음으로 30%가 인력양성과 인프라 조성 등의 지원을 중요하다고 답해, 기초 단위 거점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인프라를 만들어주며, 교육활동을 하거나 그를 연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기초 거점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주요 사업은 연차별로 다른 모습을 보임. 3년차 거점은 조사연구아카이빙, 인식제고, 자원발굴지원에 예산을 많이 배분해 전체 평균과 비슷한 모습을 보임. 그러나 지역별로 예산의 배분 모습이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음. 2년차 거점들은 인식제고에 예산을 많이 배분하고 조사연구아카이빙, 콘텐츠에도 예산을 배분하는 등 3년차 거점과 다른 모습을 보임. 특히 지역의 자원조사 및 교육 인식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음. 1년차 거점은 조사연구아카이빙에 예산을 가장 많이 배분하고 인식제고, 지역특화 콘텐츠에 예산을 배분하여 지역 상황 파악과 교육인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표 II-4〉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참여 주체 및 사업내용

지역	주체	년차	사업내용
광주 북구	광주문화자치회의(북구문화의집)	3	‘가깝고 쉬운’ 북구표 생활 단위 생태계 구축
전북 완주	복합문화지구누에(nu-e)	3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거점
서울 성북	성북문화재단	3	함께 일하는 공유플랫폼 실험 및 풀뿌리 협력거점 구축
전북 전주	전주문화재단	3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자원 확산 구조 마련
전남 구례	지리산씨협동조합	3	치유·회복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충북 청주	청주시문화산업 진흥재단	3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자원 발굴
강원 춘천	춘천문화재단	3	사람과 삶을 잇는 품격있는 시민성 발현
경북 포항	포항문화재단	3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안전망 구축
충남 공주	공주문화재단	2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주민 친화적 거점 조성
광주 동구	교육문화공동체 결	2	존중과 협업으로 서로를 살리는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경남 밀양	밀양문화재단	2	일상 탈피형 문화예술교육 역할 수행 및 연계기반 마련
부산 북구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2	만개(滿開)하는 북구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경기 성남	성남문화재단	2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예술강사 네트워크 형성
전북 장수	장수문화예술 협동조합	2	자연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작은 공동체의 실현
서울 금천	금천문화재단	1	‘협력망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고민 해결
대전 대덕	대덕문화원	1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에게 교육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스스로 기획해보는 인식 개선
전남 곡성	문화공감 창	1	지역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논의
제주	순한곳 제주/상상창고 숨	1	지역 생태계를 반영한 거점의 역할 수행
인천 연수	연수문화재단	1	지역 내 주체들을 찾고 연결하며, 지역의 문제를 문화예술교육으로 해결해 보는 논의구조 형성
부산 영도	영도문화도시센터	1	공론장을 중심으로 협력주체 확장
강원 원주	원주문화재단	1	지역 내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서울 은평	은평문화재단	1	‘수요에 기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 내 의제 발굴’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 내부자료(2022.12.21.) 저자 재구성

- 기초 거점사업에 3년 참여한 주체들의 사업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가시적 형태의 네트워크 구성과 지역 내 실행자 발굴 및 타 기관 연계 혹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있음.

〈표 II-5〉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 3년 참여주체의 성과

지역	주체명	성과1	성과2		
		협의체 네트워크 구성	지역 내 실행자 발굴	프로그램 실행	지역 맞춤 콘텐츠 실험개발
광주 북구	광주문화자 치회의 (북구문화의 집)	[북구예술배움위원회] 지자체,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예술가 등 9명	옆집예술 선 생 27명 발 굴	59개 기관 연계 프로그 램 실행. 137회, 676 명 참여	
전북 완주	복합문화지 구 누에(nu-e)	[문화예술교육 공동체 협의회]교육지원청, 문화시설 등 11개 기관 16명	예 술 또 래 46명 발굴	주민 대상 프 로그램 실행. 32회, 249명 참여	
서울 성북	성북문화재 단	[성북 문화예술교육 협의체]지자체, 구의회, 교육지원청, 교사, 예술가 등 24명			‘마을로 예 술로 돌봄 학교’ 시범 운영 → ‘우 리동네키움 센터’ 연계 본격화. 48 회, 954명 참여
전북 전주	전주문화재 단	[전주시문화예술교육 실무위원회] 지자체, 교육지원청, 문화시설, 예술가 등 15명	‘교 육 하 는 예술가’ 37 명 발굴	동네공간 연 계 프로그램. 65회, 839명 참여	
전남 구례	지리산씨협 동조합	[구례교육문화자치네트워크, 조례준비단]지자체, 교육지원청, 교사, 예술가 등 25명	지속 활동 가능한 매 개 인력 36 명 발굴	고 령 화 지 역 특화 프로그 램 실행. 33 회, 441명 참여	
충북 청주	청주시문화 산업 진흥재단	[네트워크 협의체]지자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15명	‘예 술 교 육 프 로 젝 트 팀’ 참여예 술가 51명	주민 대상 프 로그램 개발. 운영. 3회, 113명 참여	
강원 춘천	춘천문화재 단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협의체]교육지원청, 춘천교사지원단,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14명		시 민 참 여 형 및 학교 연계 프로젝트. 22 회, 308명 참여	
경북 포항	포항문화재 단	[문화예술교육 공유 네트워크]교육지원청, 문화시설 관계자, 예술가 등 20명		과학자원 연 계 (예 술 + 기 술) 프로그 램. 13회, 686명 참여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 내부자료(2022.12.21.) 저자 재구성

□ 거점: 문화파출소 운영

○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지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n.d.)

- 사업목적: 지역 내 치안센터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향유 저변 확대를 도모함.
- 지원대상: 해당 지역 지역주민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협력사업으로 진행
- 치안센터장 1인 근무체제하에서 최소한의 동네 치안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서 2층 규모의 공간이 온전히 활용되지 못하여 활용의 돌파구로 문화파출소를 착안함. 문화파출소의 유휴공간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프로그램과 공간의 관계 설정으로, 공간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주체들의 활동을 잉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 문화파출소를 문화, 치안,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문화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나눔의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설정
- 특이점: 파출소 기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문화와의 접목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교육의 장소, 청소년들에게는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상담의 장소로 거듭남(영남일보, 2019.10.11).
- 2016년 서울시 강북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경기 군포, 강원 춘천, 대구 달서, 충북 청원, 울산 남부의 유휴 파출소/치안센터에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대관 프로그램을 운영함.
- 문화파출소 운영프로그램 사례는 아래 내용과 같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표 II -6〉 문화파출소 운영프로그램 사례

명칭		문화파출소 강북	문화파출소 군포	문화파출소 춘천	문화파출소 달서	문화파출소 울산남부	문화파출소 덕진
위치		서울 강북	경기 군포	강원 춘천	대구 달서	울산 남구	전북 전주
개소일		2016.6.10	2016.12.28	2017.1.13	2016.12.27	2016.12.28	2017.1.24
운영단체		내내로 (NNR)	예술의 공 협동조합	통통창의력 발전소	(사)대구그 랜드심포니 오케스트라	미디어문화 교육 도담	(재)전라북 도문화관광 재단
유아 프로그램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범죄 피해자 대상 치유 프로그램	나의 몸 이야기	놀다보면!, 뛰다보면!	범죄 피해자 와 가족, 마을주민 대상 예방 치유 프로그램	미술, 공예, 도예 등	나의 3분 필름 제작기
	문화안전망 프로그램	내 마음의 노래	꿈의 경찰학교, 웰컴 투 문화파출소	아니오, 안돼요!	유아 안전교육 및 예술체험, 힘이 되는 인권 상상한 대로!	찾아가는 문화파출소, 어린이명예 경찰연주단	튼튼한 나와 어떤 가구 이야기
	장르별 문화예술교 육	마을살림, 포토 로망,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미디어 활용, 어린이 뮤지컬 어드벤처 하모니, 미술로 발레, 한국 무용	아름다운 우리 그림 민화, 롤루랄라 신나는 우쿨렐레, 소르르 마음 읽기	천 마을을 그리다, 꿈꾸는 손수다, 꿈지락 손가락, 오감자극 꼬마요리사	음악예술교 육, 생활다도-전 통차 수업	문파아트써 클
	지역거점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기억의 드로잉, 일상 바라보기	품위 있는 그녀, 우리동네 바리스타	문화파출소 춘천에 가면	예술과 숯놀이, 울산ksns, 독서동아리	기타 선율을 전하는 아름다운 경찰관	문화예술교 육사 스터디/워크 숍
	주민 수요에 기반한 자율 제안형 프로그램	행복뜨기, 두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들고가는 판화 워크숍	하모니카 동아리, 가곡의 날(군포 남성 합창단)	학부모 독서모임, 배워서 남주자, 수요일 추억의 사진관		실버하모니 카, 중년남녀 자기 심리관리, 명상과 다도, 건강 가곡 교실	문화 누구나 덧발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사례집: 문화파출소, 동네를 지키는 힘이 바뀐다

□ 공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

○ 꿈꾸는 예술터 조성

- 사업 목적: 국민이 일상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것(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n.d.).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부한 사업예산으로 교육진흥원에서 공모심사 지원, 모니터링 등 사업운영을 지원함.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예산을 투자하거나 매칭하며, 사업을 추진관리하고 지역운영기관은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함.
- 2021년까지 조성하고 운영한 지역들은 지역거점형 1개소, 생활밀착형 10개소로, 지역거점형 경기도 성남의 공간은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
- 2022년에는 생활밀착형 3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조성할 것을 추진함.
- 아래 꿈꾸는 예술터 위탁운영기관 중 전주, 성남, 청주, 장수, 밀양, 춘천에 위치한 기관은 기초 거점사업의 거점주체로서 참여한 바 있음.

〈표 II-7〉 ‘꿈꾸는 예술터’ 조성 현황

선정연도	지역	위탁 운영기관	조성대상지/연면적(㎡)	소유상황/예산(국비)
`18	전북 전주	전주문화재단	(구)쏘렉스(카세트테이프)공장 (1,411.38㎡)	전주시/총20억(10억)
	경기 성남	성남문화재단	(구)영성여자중학교(5,005㎡)	교육청/87억(30억)
`20	강원 강릉	강릉문화재단	강릉예술창작인촌(구.경포초, 1,708㎡)	강릉시/총20억(10억)
	충북 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동부창고 37동(구.연초제조창, 1,388.43㎡)	청주시/총25억(10억)
	전북 장수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장안문화예술촌(구.장안초, 1,002.5㎡)	장수군/총20억(10억)
	경남 밀양	밀양문화재단	밀양연극촌(1,290㎡)	밀양시/총22억(10억)
`21	전남 고흥	꿈꾸는예술터사업단	(구)평생학습관(1391.7㎡)	고흥군/총20억(10억)
	강원 태백	태백시문화재단	탄광사택촌(1,156㎡)	태백시/총20억(10억)
	경기 포천	포천문화재단	(구)영평초등학교(2,662.51㎡)	교육청/총20억(10억)
	경남 창원	창원문화재단	창원터미널 공영주차장 1층(1,767㎡)	창원시/총22.5억(10억)
`22	강원 춘천	춘천문화재단	(구)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2,201㎡)	춘천시/총30.9억 (15.45억)
	대구 수성구	수성문화재단	원룸건물 2개소(1,125㎡)	수성구/총43.03억 (16억)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센터)	①(구)중문119소방파출소(618㎡), ②중문마을회 문화의집(304㎡)	제주도, 마을회/ 총24억(12억)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 내부자료(2022.12.21.)

-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 위주로 추진체계와 공간의 구성,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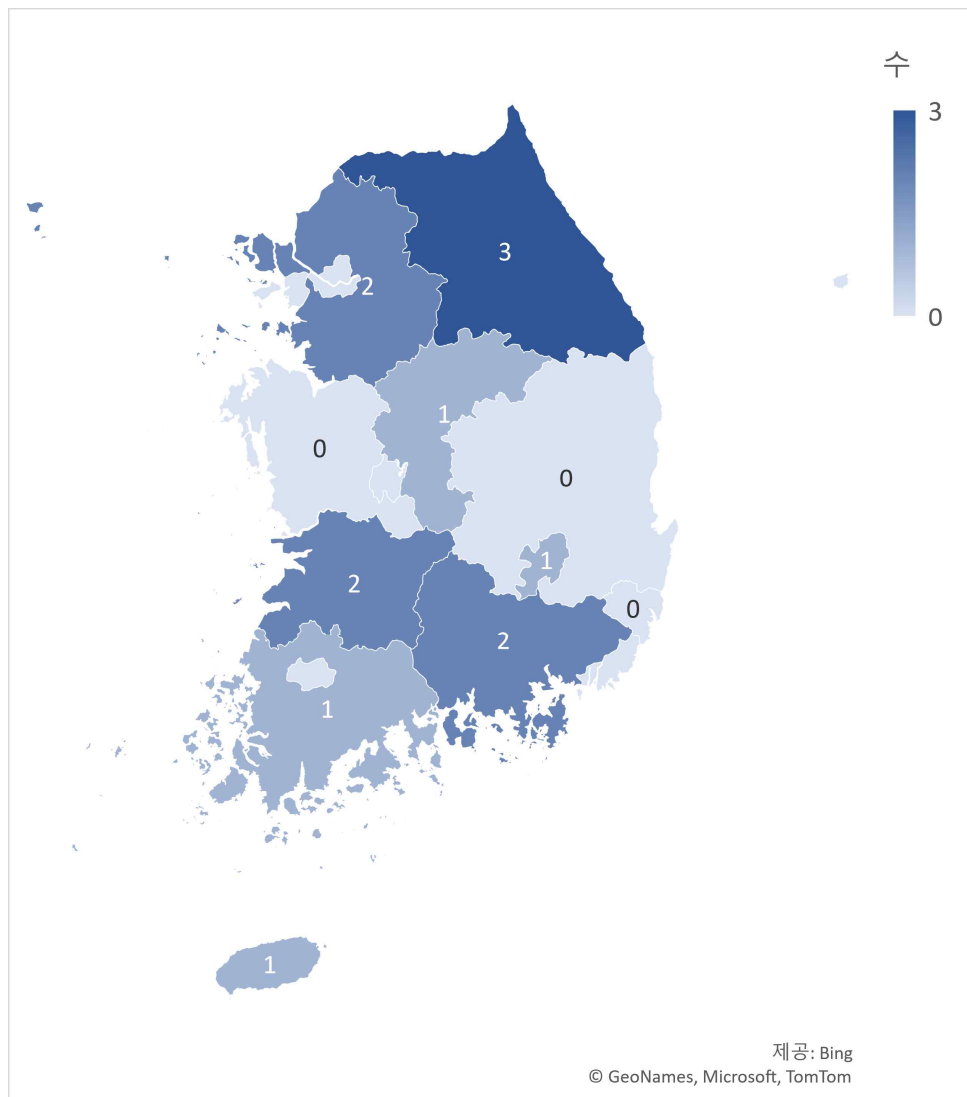
〈표 II -8〉 개관하여 운영 중인 꿈꾸는 예술터 프로그램

지역	명칭	개관일	공간구성	운영 프로그램
전북 전주	팔복야 호예술 놀이터 꿈꾸는 예술터	2019.11.5	팔복예술 공장 내 1개동 (B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강화] 문화예술교육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매개자 연수 프로그램 - 유아 예술놀이 전용공간 조성 및 예술인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협력]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예술교육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 교육지원청(초등) 및 야호학교(청소년) 협력 ⇒ 초등 정규프로그램 연간 운영 - 전주 책방네트워크(12곳) 협력 도서연계 프로그램 운영 - 민간예술단체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 ○ [보급확산]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제고 및 참여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 생활권 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참여예술인 및 단체를 통한 지역 확산체계 마련 ○ 유아예술놀이 상설 프로그램 운영
경기 성남	성남 꿈꾸는 예술터	2020.12.10	구 영성여중, 5층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초등, 중등 성인(신중년, 시니어) 생애주기별, 대상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은 5명~10명 이내, 초등학생은 1달, 성인은 2달 정도의 과정으로 운영 중임 ○ '21년 프로그램 운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유아문화예술교육, 교과연계 교육연극, 경기형 교육연극, 특수학급, 찾아가는 공연, 학교 위탁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기업연계, 경기시민예술학교, 사회 위탁교육 등
강원 강릉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2021.12.27	본관1층 (시각), 본관3층, 별관 (기술, 건축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현재예술이 융합된 창의적 예술교육을 위한 시각예술 중심의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융합) 자연, 예술, 기술이 융합된 예술교육의 과정 경험 - (건축학교) 건축·도시·예술·철학을 접목한 종합예술교육 - (메이커·미디어) 다양한 예술실험이 가능한 메이커·미디어 교육
충북 청주	청주 꿈꾸는 놀이터 동부(예 술)창고	2022.12.8	동부창고 1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프로그램 방향: 자율적 활동 공간 및 예술교육 실험의 공간. 다양한 예술활동의 경험과 예술가의 창작에 함께 몰입할 수 있는, 열린 작업장(실내작업장, 블랙박스, 야외작업장) -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수요조사, 공간조성 및 운영방안 논의, 가치공유 -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예술교육을 연구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모니터링 -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워크숍을 진행하여 향후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 - 학교연계 예술교육, 예술공간 프로젝트, 유아, 가족, 어린이 대상의 참여형 주말 프로그램 등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유아(어린이집, 유치원)·어린이(초등) 연계 프로그램, 부모예술 살롱, 주말 예술캠프 등

지역	명칭	개관일	공간구성	운영 프로그램
전북 장수	장수 꿈꾸는 예술터	2022.12.22	본관(전시·교육, 자유창작, 미디어 교육), 별관 (다목적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과 농촌문화가 문화예술로 이어지는 친환경적인 문화 예술교육 운영 - (자연예술놀이) 계절별 자연환경의 변화를 알아보고 주변의 자연물을 활용한 생태예술놀이 - (생활예술창작)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예술창작교육 - (예술치유) 나 자신과 환경을 돌아보고 돌보는 프로그램 - (자연환경생태랩) 계절별 변화하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교감하며 일상의 회복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 내부자료(2022.12.21.)

- 꿈꾸는 예술터는 강원 지역에 3곳 조성 및 조성 예정이며, 전북과 경남, 경기 지역에 2곳, 충북, 전남, 대구, 제주지역에 1곳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II-2] 꿈꾸는 예술터 조성 지역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의 수월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해 옴.
 - 2022년, 2023년 기준 교육사업으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아르코챔프아카데미, 무대예술현장전문가연수, 무대기술LAB, 인생나눔교실을 운영 중(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n.d.)
 - 주 교육사업의 대상은 예술가나 예술관련 종사자이며, 인생나눔교실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
 - 인생나눔교실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900여명이 참여하여 공존, 공생, 공유, 공감의 키워드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인문정신문화사업(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블로그, n.d.)
 - 2021년 인생나눔교실은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의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됨.
 -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선배세대인 멘토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세대인 멘티를 찾아가 멘토링을 진행하며 소통, 공감, 나눔, 배려의 인문가치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함.
 -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은 만 50세 이상인 중장년 세대가 삶의 경험에서 인문적 가치를 발견하고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지식, 재능, 지혜 등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실천하는 소규모 인문활동임.

2.2.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교육사업

-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전략을 수립하며,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역센터)가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추진함.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지역센터를 지정. 2009년 서울, 광주, 강원, 충남, 경남, 제주에 지역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2017년 세종에 설치하여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에 지역센터가 설치됨.
 - 지역센터 진행사업은 성향에 따라 기반구축, 지역연계, 지역자체추진사업의 세 종류로 구분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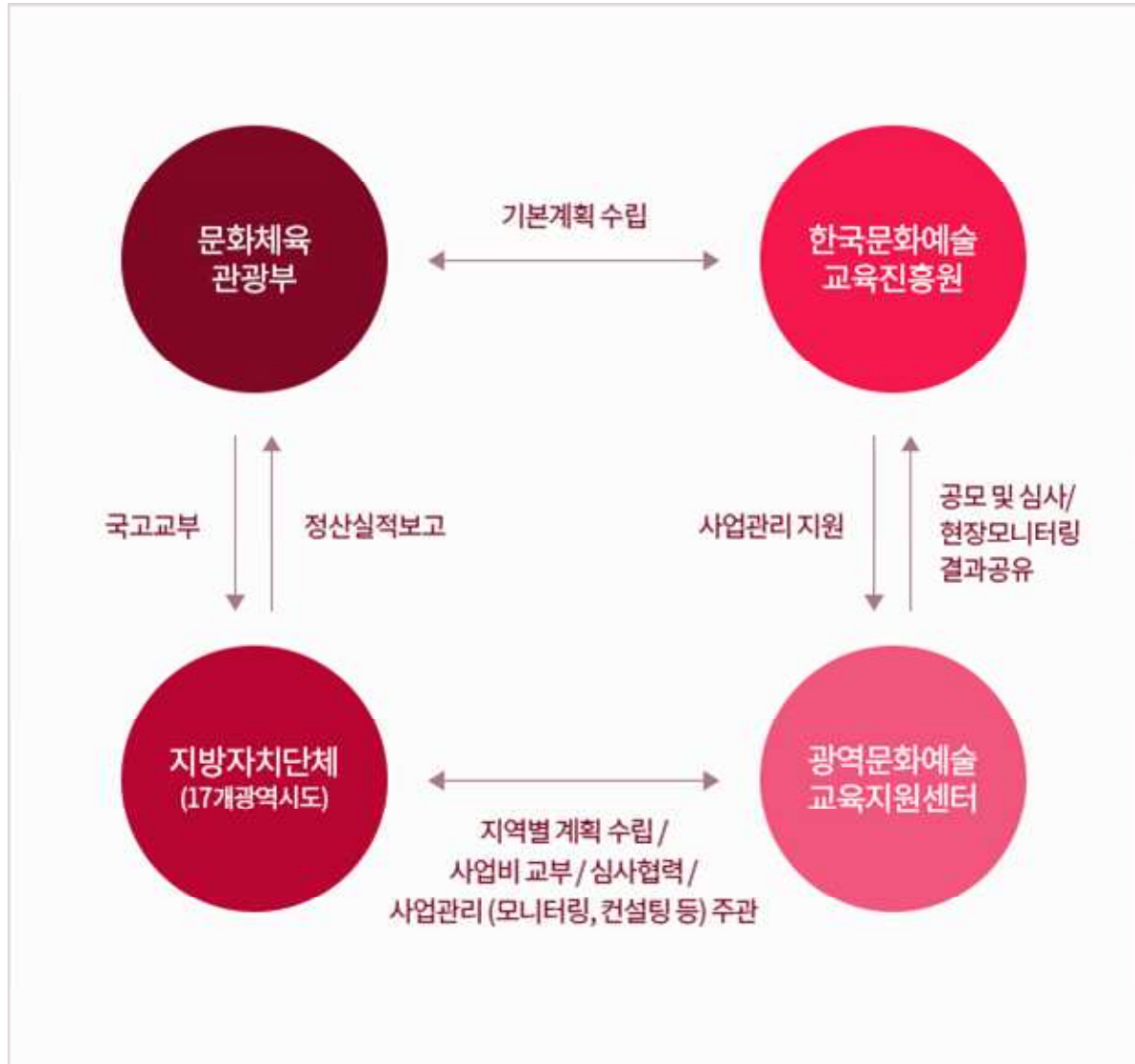
〈표 II -9〉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범주 및 현황

구분	내용	사업	예산출처
기반구축사업	지방이양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센터 운영 지역협력망 구축, 연수, 연구 등 기본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지역특성화 유아 문화예술교육* 자체기획사업 	지자체 및 지역센터
지역연계사업	문체부, 교육진흥원과 지역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꿈꾸는 예술터’ 창의예술교육 랩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문화파출소 	중앙-지역 매칭
지역자체추진사업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추진하는 사업 지역적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하거나 타 분야 공모사업과 연계 혹은 교육진흥원의 사업유형을 변형하기도 함	지역별 자체사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예술통합교과 지원사업 경기: 소외계층 문화나눔 사업, 문화 다양성 교육사업 서울: 서울시민예술대학 전북: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전남: 농산어촌 학교 교육 특화 프로그램 충북: 충북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부산: 도시철도 북하우스 	지자체, 지역센터 자체예산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최근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 2018~2022, 저자 재구성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연계사업이었으나 지방이양되었으므로 기반구축사업으로 분류함.

-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기반구축사업 중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지방이양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부한 금액을 지방이양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부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전달하나, 전반적인 사업관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수행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갖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역량을 가진 지역 단체, 기관,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역센터의 사업비 및 사업관리를 전제로 한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n.d.).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최종접속일 2023.1.18.)
<https://arte.or.kr/business/society/local/intro/index.do>

[그림 II-3]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체계

- 2018~2022년 사이 지역문화예술교육 예산이 서서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교육의 1인당 예산액은 2022년 8월 기준 제주 3.29원, 울산 1.58원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서울 0.32원, 경기 0.35원으로 수도권에서 더욱 낮음. 실제 인구수 대비 예산 비중을 볼 때 수도권 지역의 취약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음.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이 지원 중심에서 연구, 협력망, 인력양성, 아카이브, 홍보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지역별 자체 추진사업들에서 장애인, 성평등, 문화다양성, 농산어촌 등 특정 주제가 강조되는 경향으로 지역 특수성이나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

□ 광역 단위 지역센터를 통한 기초 단위 거점 발굴

- 광역지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기초 거점 발굴을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를 통한 지원사업으로 수행
 - 기초 거점 발굴 개념: ‘거점’의 용어를 사용하는 충북의 경우 거점의 개념정의를 “지역 내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의 구조를 만드는 유무형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로 봄.
- 사업 안내 및 공모자료에 나타난 지역별 기초 단위 거점 발굴 목표
 - 충북: 생활권 내의 자원과 특성 이슈 등에 대한 리서치,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함(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n.d.).
 - 충남: 지역 실정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자생적 문화예술교육을 설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역량 확대 및 강화를 목표로 함(충남문화재단 공고 제2022-60호). (아트누리 홈페이지, n.d.).
 - 인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거점 운영모델 발굴 및 활동기반 구축 지원(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2-17호)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n.d.)
 - 경남: 도내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으로 자생적 문화예술교육 제도기반 마련 및 도민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 구축 지원사업 기관시설을 공모(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2-65호) (아트누리 홈페이지, n.d.)
 - 전남: 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지소 시범 운영 및 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 실현(전라남도문화재단 홈페이지, n.d.)
- 법적 근거나 조례를 구성하기보다 각 광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사업으로 진행함.
 - 2022년 말까지 총 18개소의 기초 거점 발굴함.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도 인천과 같은 명칭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자체 운영하나, 기초 거점 구축보다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거점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음. 인천의 경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기획지원 사업을 거점구축, 프로그램 개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
- 조성 현황은 아래 표 참조

〈표 II-10〉 2022년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 기초 거점 발굴 사업 현황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단체	지원액
충북	2022 충북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사업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로 지역 주민들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거점 기반 조성 2022년은 기존형(3년차)과 신규형(2년차) 평가를 통한 연속지원	거점 공간을 보유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모나드, 문화학교 숲, 생활문화예술공간 하다, 공작플러스, 오소록, 온몸주식회사, 자계예술촌	280 백만 원
충남	2022 충남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 구축 사업, 문화예술교육 거점 운영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한 광역-기초간 역할 분담, 우호적 협력관계 형성 등	문화재단	논산문화관광재단, 홍주문화관광재단, 서산문화재단	90백 만 원
인천	202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기획협력형 사업	공통과제(기초지자체별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와 개별과제(현황조사, 의견 수렴) 및 활성화방안 제안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기초문 화재단 간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	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 강화교육지원청	24백 만 원
경남	202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지역 여건·특성 고려한 시군 협력형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 운영 지원으로 시설운영, 운영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시,군비 지원금의 20%매칭	도내 시군 공공문화 기관(시설)	진주문화관광재단, 함양용추아트밸리미 술관	172 백만 원
전남	행복전남 문화지소 지원운영	2019년부터 진행 광역-기초 문화재단 협력하여 지역특성화 기획사업으로 추진 문화지소 간 정보 공유, 의견 청취, 사업 발굴 등을 통한 기초 거점 협력 체계 강화, 인력 개발, 시군구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자생적 기초 활성화 지원	공간의 운영주체인 문화예술기 관 및 단체	담양군문화재단, (사)문화공작소, (사)라몽 지역자산함께나눔, 승달문화예술회관, 야호문화나눔센터, 예술문화협동조합 동화락 고흥사무소, 전남미술발전연구회	250 백만 원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 내부자료(2022.12.21.) 저자 재구성

- 거버넌스 체계 구성: 지방분권 및 문화예술분야 예산 지방이양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사업구조가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거쳐 광역문화재단으로 연계되었던 것이 현재는 광역지자체에서 광역문화재단을 거쳐 기초센터로 이어지는 사업구조로 변화하였다고 보고 있음(충남문화재단 공고 제2022-60호). 정책 전달 체계의 구성을 위해서 기초센터 거점이 필요하게 됨. 이에 따라 중앙에서는 국가단위 정책수립을 하고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광역 단위 조정 및 선도를 하면 기초센터에서 지역 기반한 교육생태계를 조성 및 주최함.

- 거버넌스 체계 모델: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 모델과 광역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모델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역할 분담 및 지역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경우와 공간을 보유한 단체 및 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공간에 운영단체를 매칭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기초 거점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협력기관으로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후원으로 하고 있음.

□ 기초 단위 거버넌스 이슈

- 기초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광역-기초 간 거버넌스는 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음.
- 자체 교육을 진행하거나 민간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중앙이나 광역 단위의 사업을 공모하여 함께하는 정도이기 때문임.
- 기초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에 거점이 있어 정책수행과 네트워크의 매개를 수행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2.3 중앙과 지역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 기초 단위 거점으로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교육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니지만, 생활문화센터에서 문화예술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거점으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받고 중앙과 지역에서의 협력을 통해 조성과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례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의 개념과 목표
 - 개념: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하거나 유휴공간을 탈바꿈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 플랫폼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을 생활문화센터라 이름(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n.d.).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로 정의할 수 있음.
 - 목표: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높아지는 국민들의 문화참여 욕구를 해소하고, 생활 속 문화확산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설립의 법적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센터 설립과 운영 근거를 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로 규정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간여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제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근거를 마련함(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n.d.).

○ 조성 현황과 운영 방식

- 2014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부 보조사업을 통해 건립 및 건립 예정인 생활문화센터는 모두 338개소, 지역문화진흥원이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 수는 190개소이며 이 중 개관하여 운영 중인 센터 수는 149개임(노유경, 손유진, 2021).
-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직영, 주민자율운영 혼합형: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직영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공무원 파견, 계약직원 고용하여 운영하며 44개소,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나 기관(문화원, 문화의집,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87개소, 주민자율운영은 15개소, 혼합형은 직영 혹은 주민자율운영을 함께 활용하여 운영하며 1개소(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2022.3. 기준)²⁾
- 유휴공간을 활용해 설립한 곳은 48개소, 기존 시설을 이용한 곳은 100개소이며 혼합형도 1개소 존재함. 거점형으로 시설을 구성한 경우는 58개소, 생활권형으로 구성한 생활문화센터는 76개소이며, 구분 없는 경우도 15개소 있었음(노수경, 손유진, 2021).
- 생활문화센터는 2014년 설립 시 역할에 따라 생활권형, 준거점형, 거점형으로 구분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4), 공간 형태에 따라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독립형과 기존 공간에 포함된 공동형(지역문화진흥원, 2021), 운영프로그램별로 ‘생활문화센터 첫걸음’, ‘공간 새옷 입히기’, ‘우리 동네 문화 찾기’, ‘콘텐츠 공작소’(지역문화진흥원, 2020) 등 다양하게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생활문화센터 거점형은 지역민의 생활문화활동, 동아리 형성지원,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 등의 멀티 플랫폼 역할 수행을 기대하며 전문적 시설이 필요할 시 지역민에게 공간을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할 것으로 구성하였음. 이에 따라 약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서 의무공간과 필요공간을 가짐.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가이드에 필수공간과 운영, 공용시설, 특성화 시설 확보를 제안하고 있음(지역문화진흥원, 2021).

2) 2022년 3월 기준으로는 전체 172개소 중 직영 76개소, 민간위탁 76개소, 주민자율 16개소, 직영과 주민자율을 함께 활용하는 혼합형 4개소임.

〈표 II-11〉 생활문화센터 건립 특성별 유형구분(2020.12 기준)

지역	개관 센터 수	건축물 유형			건립 유형		
		유희공간 활용	기존 시설 이용	혼합형	거점형	생활권형	구분 없음
서울	5	3	2	-	2	1	2
부산	18	5	13	-	5	9	4
대구	8	2	6	-	3	5	-
인천	10	2	8	-	3	5	2
광주	8	2	6	-	5	3	-
대전	4	-	3	1	2	1	1
울산	3	2	1	-	1	2	-
세종	2	-	2	-	-	2	-
경기	15	6	9	-	9	6	-
강원	13	5	8	-	6	5	2
충북	3	3	-	-	2	1	-
충남	9	1	8	-	4	4	1
전북	15	2	13	-	7	8	-
전남	11	5	6	-	3	7	1
경북	8	5	3	-	5	3	-
경남	11	5	6	-	1	9	1
제주	6	-	6	-	-	5	1
계	149	48	100	1	58	76	15

출처: 노수경, 손유진(2021),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운영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37. 발췌.

○ 생활문화센터의 사업

- 생활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생활문화 장르가 폭넓고 범주의 정립에 대해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어서 생활문화센터들에서 일관되게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음. 대체로 예술의 범주에 드는 미술, 문학, 음악 등 활동, 공예 및 생활기술, 생활운동 및 지식활동, 꽃꽂이나 놀이 등 취미오락, 마을활동과 장터, 미디어활용 등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장소나 기자재를 대여하거나 교육강좌를 열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사업임.
- 노수경과 손유진의 연구(2021)에서 수행한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센터 관련 설문조사에서 생활문화에 필요한 서비스로 문화예술 교육 제공(32.2%), 주민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22.5%)이 기존 생활문화센터가 주력해온 공간대여(8.7%), 악기 등 장비 대여(9.5%)보다 더 높게 나타나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및 네트워크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함.

○ 지원 정책과 거버넌스 체계

- 중앙: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작하였으나 지역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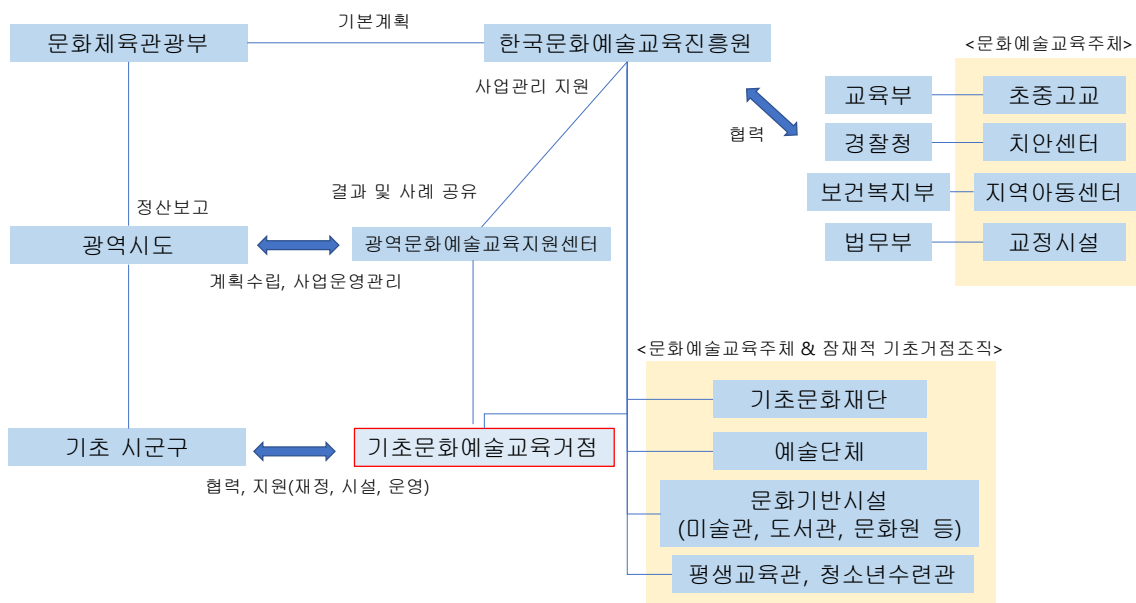
진흥원으로 이관되어 조성과 운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관리 및 지원을 수행 중. 2021년부터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공공단체나 민간단체 혹은 시설에 대하여 생활문화 주체를 발굴하거나 확장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자원 간 연계나 협력 활동에 대해 지원을 수행 중

-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센터의 건립과 조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2.4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와 기초 거점

□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의 구성

- 앞서 살펴본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의 추진체계를 통해 전반적 문화예술교육의 전반적인 협력과 운영의 거버넌스는 아래 그림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음.



[그림 II-4]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주도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자체로 직접 대민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타 중앙부처나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을 수행

하고 지원하고 있음. 특히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은 여러 사업을 통한 협력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사업추진뿐 아니라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주체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음.

□ 기초 거점의 가능성 타진


○ 기초 거점 구성 가능성

- 사업목적 및 대상별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주체가 발굴되어 왔으며, 이러한 주체들 중에는 잠재적으로 기초 거점이 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음.
- 지난 2020~2022년 교육진흥원의 기초 거점 사업에 참여했던 조직들, 꿈꾸는 예술터 조성에 참여했던 조직, 광역지역센터에서 진행한 기초 거점 사업에 참여했던 조직들이 모두 문화예술교육 주체들로서 수년간 교육진흥원의 사업에 참여하고 지역 내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해왔기 때문임.
- 기초 거점의 가능성을 보이는 조직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기초문화재단의 네트워크가 강하거나, 예술단체의 영향력이 크거나 하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기초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초문화재단의 네트워크가 공고한 지역에서는 기초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주체들 사이에서도 다른 지원 주체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거버넌스를 획일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따름.

○ 기초 거점 후보 사례


-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중 잠재적으로 기초 거점이 될 수 있는 조직들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시설을 활용 가능하고, 자체 사업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획자가 있고 예술교육 강사를 보유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항시 확보가 가능하며, 지역 내에서 다년간 활발히 타 조직 및 기관, 지역민과 소통하며 활동해오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직들 중 일부 사례를 소개함.

〈표 II-12〉 팔복예술공장

기관명	팔복예술공장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운영주체	전주문화재단	
시설규모	2개 동 각 3층, 2층 (총 6,001㎡)	
설립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산업 단지 및 폐산업 시설 문화 재생 사업'에 선정• 2018년 개관	
공간현황(개)	사무실4, 회의실3, 복합문화공간2, 식당1, 매점1, 도서관1, 창고7, 전시실1, 강연실2, 작업실8	
인력현황(명)	총계 53 (기획운영36, 행정지원6, 시설관리3, 경영관리7, 해설사1)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예술놀이터• 유아·초등·청소년·부모교육 프로그램• 예술인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민간기업 협력 유아 프로그램• 국제포럼 연계 특별 프로그램, 레지던시 운영 및 전시 기획	
문화예술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 초등, 청소년 정규프로그램• 예술인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부모교육 프로그램, 민간기업 협력 유아 프로그램• 국제포럼 연계 특별프로그램• 꿈꾸는 예술터• 예술창작학교• 시민 문화예술 교육• 팔복예술대학-팔복예술TV	


출처: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 <https://www.palbokart.kr>

〈표 II-13〉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기관명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운영주체	문화예술스튜디오 노래숲	
시설규모	1개 동 3층 (총 1,240㎡)	
설립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5년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ul style="list-style-type: none">2019년 북구청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	
공간현황(개)	사무실1, 공방1, 사랑방1, 목공실1, 놀이터2	
인력현황(명)	총계 24 (운영총괄1, 기획운영 2, 시설관리1 놀이터지기7, PM3, 예술강사14)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어린이 친환경 놀이터와 차별화된 예술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전 세대와 생애를 아우를 수 있는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활동과 지역네트워크형 모델 구현문화예술교육, 전시기획, 창의활성화공간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가 있는 날’ 생활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유아문화예술교육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놀이메이커스’ 협력프로그램꿈다락 토요문화학교우리동네 하하발전소어쩌다 어른이기획 및 협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처: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홈페이지 <https://www.ubnori.kr/>

〈표 II-14〉 복합문화지구 누에

기관명	복합문화지구 누에	
위치	전라북도 완주	
운영주체	완주문화재단	
시설규모	7개 동 1층 (총 3,790.84㎡)	
설립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 선정• 2016년 구 잠종장 일대를 공동창조공간 누에(nu-e)로 명명	
공간현황(개)	사무실2, 회의실2, 복합문화시설1, 캠핑장1, 창고1, 전시실1, 공연실1, 강연실4, 작업실4	
인력현황(명)	총계 15 (기획운영4, 행정지원2, 시설관리2, 홍보1, 경영관리1, 해설사2, 기타2)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친환경 놀이터와 차별화된 예술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전 세대와 생애를 아우를 수 있는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활동과 지역네트워크형 모델 구현	
문화예술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 거점 구축 지원사업 〈마을거점 조성 및 확장(지역특화콘텐츠)〉 〈마을거점 조성 및 확장(프로그램)〉, 〈매개자양성: 예술도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꾸는 누에 놀이터• 공예시설 활성화 사업•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영재양성•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출처: 복합문화지구 누에 홈페이지 <http://www.nu-e.or.kr>

〈표 II-15〉 대덕문화원

기관명	대덕문화원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주체	대덕구청	
시설규모	1개 동 4층 (총 1,099㎡)	
설립역사	1994년 설립	
공간현황(㎡)	사무실 1, 전시실 1, 도서실 1, 기타공간	
인력현황(명)	총계 11 (관장1, 사무국장1, 부장1, 시설과장1, 대리1, 기타5, 사회복지무원1)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을 펴자’ 독서문화캠페인 • 온라인 대덕백일장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 지역 문화제 스토리텔링 • 지역 여성 문화 뿌리 확산사업 • 고택 활용사업 • 민속보존 마을행사 • 김호연재여성회호대회 •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기획, 전시기획) • 5개구 생활문화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 거점 구축 지원사업 • 문화학교 강좌 •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문화가 있는 날 •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 	


출처: 문화포털 <https://www.culture.go.kr/>

〈표 II-16〉 광주북구문화의집

기관명	광주북구문화의집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운영주체	광주문화자치회의		
시설규모	1개 동 2층 (총 501㎡)		
설립역사	1997년 10월 개관		
공간현황(개)	책상공방 1, 바느질다락방 1, 상상카페 1, 착한목공소 1, 오타쿠전파사 1, 아이디어 거실 1, 리빙메이커룸 1, 낮은 작업장 1, 윗마당 대장간 1, 메이커교육실 1		
인력현황(명)	총계 5 (기획운영 4, 행정지원 1)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민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소규모 문화활동 지원• 리빙메이커집, 바퀴달린학교, 무릎학교, 생생문화재, 옆집예술선생 등		
문화예술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부인문학당, 주부인문학 체험학습• 창의예술학교 사무국 및 바퀴달린학교〈주말건축교실, 땅과예술, 괴짜소년단, 예술캠프, 운영진 사전워크숍 등〉• 행복학습지원센터〈무릎학교〉• 주민강사‘옆집 선생님’, 도시남자들의 시골집 이야기.• 생생문화재사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프로그램 10개• 문화가 있는날 - 숲의 별곡〈동물원 봄소풍〉• 광주 북구 숲세권 생활문화축제• 2020~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옆집예술선생〉		


출처: 문화포털 <https://www.culture.go.kr/>

〈표 II-17〉 성북 키움센터

기관명	성북 키움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운영주체	민간위탁 비영리법인	
시설규모	1개 동 1층 (총 95㎡)	
설립역사	2019년 1월 성북 키움센터 1호점 오픈	
공간현황(개)	놀이 및 교육실 2, 거실 1, 야외공간 1	
인력현황(명)	총계 4 (센터장 1, 직원 3)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만 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심·여가·놀이공간을 마련·제공함으로써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 지역연계형 프로그램 및 배움활동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연계형 프로그램 : 기본생활습관지도 숙제 및 독서지도, 텃밭 가꾸기, 신체활동 및 바깥놀이, 5대의무안전교육, 아동인권교육배움활동 : 별별재미난 우크렐레교실, 별별재미난 보드게임교실, 별별재미난 창의교실, 지역사회연계 체험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예술로 키움>	

출처: 우리동네 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표 II-18〉 지리산씨협동조합

기관명	지리산씨협동조합	
위치	전라남도 구례군	
운영주체	지리산씨협동조합	
설립역사	2014년 7월 설립	
공간현황(개)	관내공간 3 (지리산씨협동조합, 창의융합교육관, 숲놀이터)	
인력현황(명)	총계 14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재생, 순환과 지속가능성에 기여• 문화예술 및 여행사업• 지리산과 섬진강 자원을 활용한 생태레저 개발 및 운영 (트리클라밍, 카우잉, 산달리기 등)	
문화예술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 거점 구축 지원사업 <다시, 구례를 산다_삶을 잇는 문화예술교육> <구례예술친구>• 2022년 우리가치 인문동행• 길 위의 인문학• 찾아가는 문화 배달부• 봉성비경(지역도서관 협업 문화예술교육)• 구례 청소년 아트페어, '나도 예술가다'• 지리산 마을학교 지정 (전남도교육청 중심마을학교)• 2016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전남문화관광재단)	

출처: 지리산씨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www.jirisanc.com/>

3.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 참여 조직 현황

3.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참여 조직

1) 문화예술교육 수요 조직

○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문화시설의 현황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음.

〈표 II-19〉 전국 시군구 내 문화기반시설 현황

시설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현황	173개소	1,208개소	68개	267개	231개	909개	285개
이용 자 규모	전국 92만명	전국 13,893만명	전국 64만명	공연일수 17,162일 전시일수 18,845일	전국 721만명	전국 3,609만명	전국 942만명
운영 형태	위탁, 공기관위탁, 민간위탁, 직영, 주민자율	설립주체: 교육청, 사립, 지자체	위탁, 민간위탁, 직영	공공기관 위탁, 민간기관 위탁, 지자체 직영, 사단법인	거소지 지방자치단체 의 설립인가를 통해 설립발기인 및 임원에 의한 운영	설립주체: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등록:1종, 2종, 미등록	설립주체: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등록:등록, 미등록
개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 를 수집·정리 · 보존· 제 공함으로써 정보이용· 교양습득· 학습활동· 조사연구· 평생학습· 독서문화진 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문화활동 중심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으로 상호교류와 소통에 기반한 창작 및 문화체험,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해 ‘문화창조’적 활동을 직접 영위 할 수 있는 근린문화시설	지방자치단체 가 건립한 공공시설로,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복합문화 예술시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 ·민속·예술 ·동물·식물 ·광물·과학 ·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 보존·조사· 연구·전시· 교육하는 시설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 를 수집, 관리·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
주요 업무	- 생활문화 동호회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 도서관자료 를 수집·정리	생활문화 관련 상설 프로그램, 기관별	-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	-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 보존·전시	- 미술관 자료의 수집·관리· 보존·전시

시설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p>- 생활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p> <p>-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p> <p>- 구·군 생활문화센터와 연계 및 거점 사업 및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p>	<p>· 보존·제공하고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p> <p>·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p> <p>· 지식정보격차 해소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제공,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p>	<p>연계사업, 체험프로그램, 예술캠프, 각종 무료강좌 기획 및 운영</p>	<p>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p> <p>-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 기회 제공</p> <p>-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체험으로 문화감수성 증진 및 문화예술 애호가 저변 확대</p>	<p>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p> <p>-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p> <p>-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p> <p>-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p> <p>-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p> <p>-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p> <p>-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 박물관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p> <p>- 박물관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등</p>	<p>- 미술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p> <p>- 미술관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등</p>
교육 사업	<p>지역 전통 문화프로그램 운영</p> <p>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p>	<p>- 자체 및 협력 문화 강좌 운영</p> <p>- 꿈다락토요 문화학교, 길 위의 인문학,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지역특성화</p>	<p>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 운영</p> <p>- 창의예술학교, 메이커스페이스, 행복학습지원 센터, 생생문화재사</p>	<p>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우리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어른들의 예술감상 놀이터)</p>	<p>평생교육원, 꿈의 오케스트라, 주계중심 예술로 탐구생활, 유아문화예술 교육, 인생나눔교실, 문화의집과 함께하는 날마다</p>	<p>- 자체 및 협력 문화 강좌 운영</p> <p>-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길 위의 인문학,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p> <p>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p>	<p>- 자체 및 협력 문화 강좌 운영</p> <p>-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길 위의 인문학,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p> <p>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p>

시설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가 있는 날 등	업,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문화교실 등		문화가 있는 날,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문화가 있는 날 등	사업, 문화가 있는 날 등
법률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22.01.0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하여 저자 구성

- 문화예술교육은 생애주기별로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생활기반시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 점차 문화예술교육의 본격적인 수요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생활기반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음.

〈표 II-20〉 전국 시군구 내 생활기반시설 현황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관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 센터	종합사회 복지관
현황	4,217개	663개	398개	4,493개	3,151개	251개	477개
이용 자 특성	106,510명	전국 292,000명	전국 850만명 추산	평생학습관 116만명 (전국 1,600만명)	1,000만명 이상	126만명 (다문화 91만명) (센터평균 3,981명)	173만명
	미취학 1.8% 초등재 78.6% 중등재 16.2% 고등재 3.4% 탈학교 0.1%	청소년수련관 (종합수련시 설) 청소년문화의 집 (정보/문화예 술 중심 수련시설)	60세 이상 노인	아동 7.5% 청소년 1.7% 성인 76.5% 노인 0.8% 통합 13.5%	성별(여성) 74.2% 주부 58.6% 아동 14.6% 청소년 10.4% 성인남성 9.8% 노인 5.9%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가족 유학생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 일반주민 문화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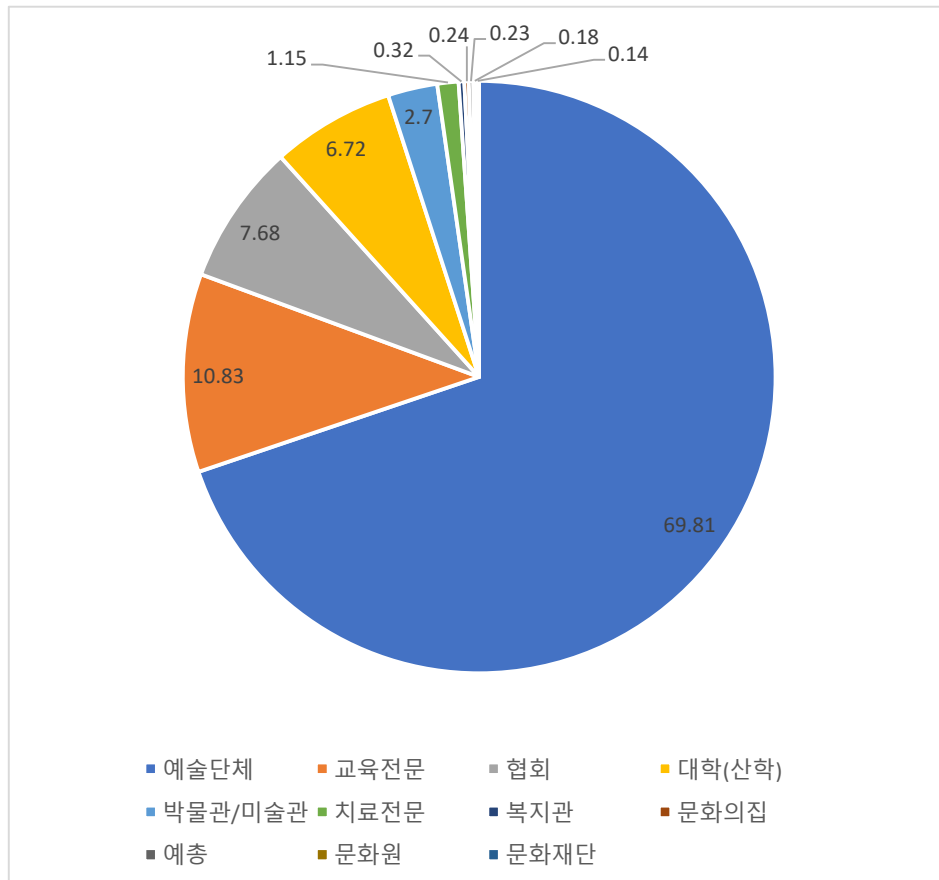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관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 센터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형태	양부모 67.8% 모자 17.3% 부자 11.3% 조손 2.7% (장애/다문화 /북한이탈 22.1%)	청소년수련관 195개 청소년문화의 집 314개 청소년수련원 154개	노인복지관 398개 경로당 67,316개 노인교실 1,291개	평생학습관 481개 시도평생진 흥원 17개 대학(원) 부설 416개 언론기관부 설 1,134개	주민자치센터 2,469개 자치회관 403개 주민자치회 225개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228개 건강가정지원 센터 23개	사회복지법인 70% 재단법인 11.7% 지자체직영 6.5%
서비 스	보호 27.1% 교육 21.7% 문화 21.3% 정서 13.2% 지역연계 16.7%	방과후아카데 미 338개 (체험역량강 화활동, 학습지원, 생활지원)	여가복지	기초문해교 육 0.4% 학력보완교 육 11.3% 직업능력교 육 41.2% 문화예술교 육 30.6% 인문교양교 육 16.4% 시민참여교 육 0.1%	주민자치 1.5% 문화여가 78.5% 지역복지 3.4% 주민편익 1% 시민교육 14.1% 지역사회진흥 1%	가족돌봄나눔 57.7% 가족통합 0.6% 가족교육 9.7% 가족상담 13.5% 가족문화 18.5% (참여자수 65,804명)	사례관리 (사례발굴/개 입) 서비스제공 (교육문화 등) 지역조직화 (주민조직화 등)
기관	복지부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여가부	복지부
	아동권리보장 원	한국청소년활 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 련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국가평생교 육진흥원 한국교육개 발원	시군구 자치회관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한국사회복지 관협회
법률 근거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노인복지법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법	건강가정기본 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사회복지사업 법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수요처 현황조사 보고서,” pp. 4-5. 참조.

2) 사업 참여조직 현황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참여조직들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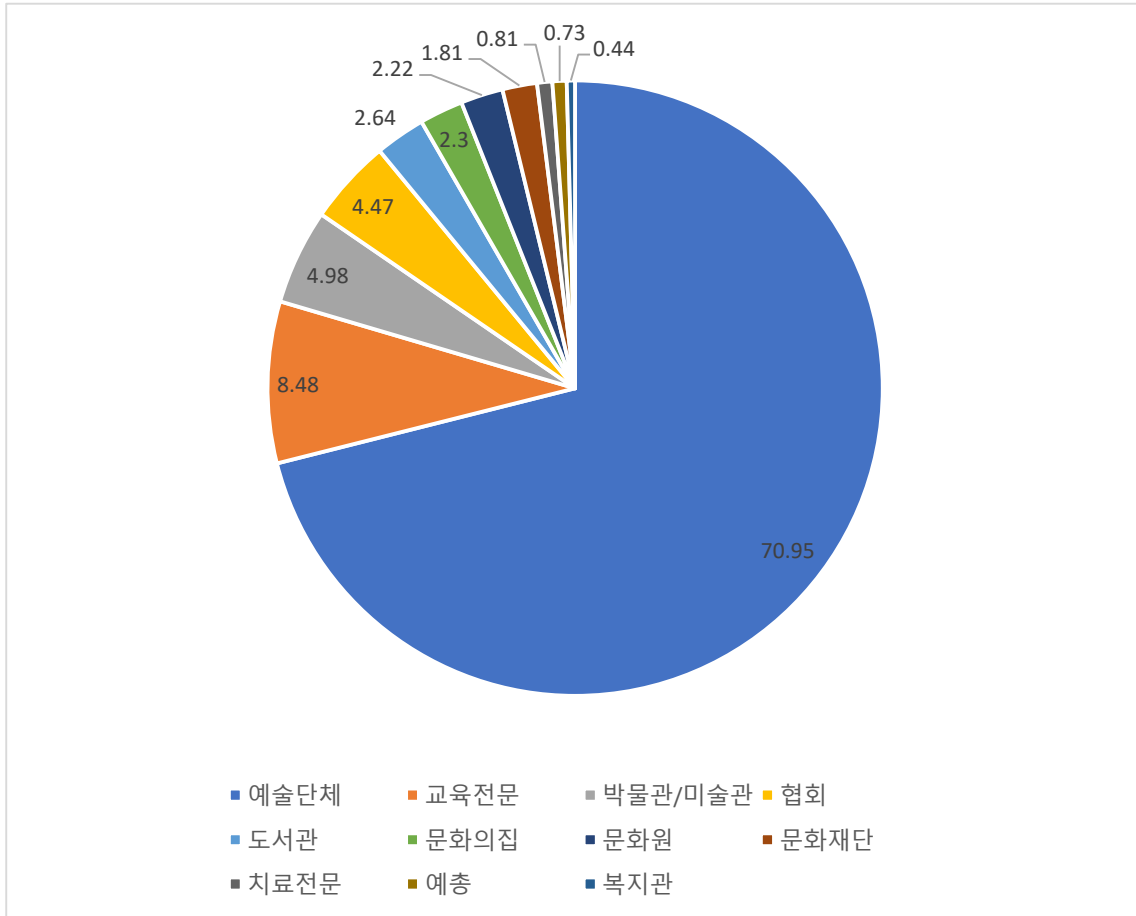
- 지금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크게 운영해 온 3가지 주요 사업인 부처간 협력, 꿈다락, 지역특성화 사업에 참여한 조직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 현황 분석
 - 부처간 협력사업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
 - 부처간 협력사업은 대체로 예술단체가 참여하나 교육전문단체, 협회 등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짐.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5]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단체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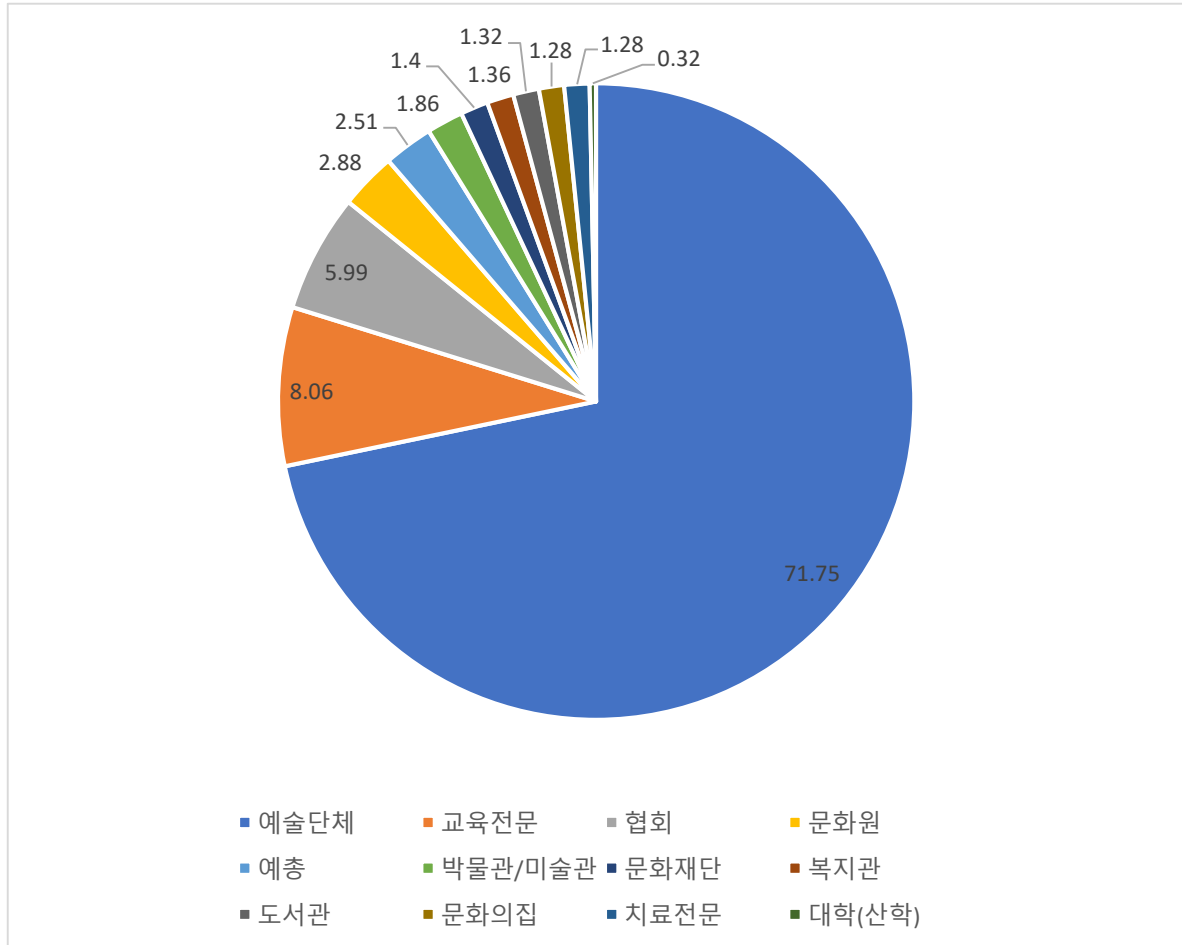
- 꿈다락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지만 자료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확보 가능
- 부처간 협력 사업과 다르게 도서관의 존재가 눈에 띈.
- 예술단체와 교육전문단체가 주도적 참여를 하고 있으나 꿈다락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의 참여가 큼. 상대적으로 대학의 참여가 없음.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6] 꿈다락 사업 참여단체 종류

- 지역특성화 사업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본 사업 참여단체 종류는 대체로 예술단체가 참여하나 교육전문, 협회 등의 참여도 활발
- 다른 사업들보다 문화원, 예총의 활동이 두드러짐.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7] 지역특성화 사업 참여단체 종류

- 사업별 선정기준이 다르고, 사업별 목적이 참여단체 운영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예술단체와 교육전문단체, 협회가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연도별 참여단체가 운영한 프로그램 수를 통해 어떤 조직이 어느 년도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분석

- 부처간 협력사업의 경우 단체종류별로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한 연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예술단체의 참여가 높으며 최근 2년간 예총, 문화의집, 복지관의 참여가 없음.

〈표 II-21〉 부처간 협력 사업의 연도별 참여조직 프로그램 수

연도	대학 산학	문화 재단	문화 원	협회	예 총	박물관 미술관	문화 의 집	교육 전문	치료 전문	복지 관	예술 단체	총계
2006	0	0	0	1	1	0	0	3	0	0	8	13
2007	0	0	0	5	1	0	0	9	2	1	29	47
2008	2	2	0	7	14	2	0	21	2	5	61	116
2009	0	2	1	9	0	2	1	9	0	7	79	110
2010	0	3	2	11	2	5	0	15	1	4	73	116
2011	2	0	1	42	2	3	0	15	3	3	96	167
2012	233	0	1	21	0	7	0	21	11	4	180	478
2013	95	0	0	21	0	3	0	105	13	2	458	697
2014	18	1	3	41	1	12	1	61	12	0	424	574
2015	90	1	3	110	0	21	5	142	16	2	810	1,200
2016	82	3	2	87	0	55	5	147	10	2	845	1,238
2017	49	0	1	75	1	24	5	150	11	0	871	1,187
2018	33	0	0	60	0	28	5	80	5	0	852	1,063
2019	29	0	1	100	0	46	1	101	6	0	861	1,145
2020	1	1	1	110	0	43	0	113	10	0	759	1,038
2021	0	0	1	24	0	4	0	29	6	0	176	240
합계	634	13	17	724	22	255	23	1,021	108	30	6,582	9,429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꿈다락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절대수가 많은 2016~2018 시기에 가장 많은 참여수가 나타났지만, 대체로 예술단체의 참여가 높으며, 최근 2년간 대학의 참여가 없었음.

〈표 II-22〉 꿈다락 사업의 연도별 참여조직 프로그램 수

연도	대학 산학	문화 재단	문화 원	협회	예 총	박물관 미술관	문화 의 집	교육 전문	치료 전문	복지 관	예술 단체	도 서 관	총계
2014	1	15	17	22	4	26	18	33	3	0	223	17	379
2015	2	4	11	21	7	26	16	33	4	5	286	17	432
2016	2	20	21	32	6	46	16	66	7	2	492	22	732
2017	0	7	15	38	4	34	13	54	4	2	496	17	684
2018	1	8	13	27	3	25	18	48	3	2	452	12	612
2019	1	8	3	18	2	17	4	37	3	2	312	8	415
2020	0	7	7	14	1	15	7	45	6	3	340	8	453
2021	0	5	4	11	3	15	2	31	3	2	303	7	386
합계	7	74	91	183	30	204	94	347	33	18	2,904	108	4,093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지역특성화 사업의 경우 단체종류별로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한 년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예술단체의 참여가 높으며 최근 2~3년내 대학, 문화의집, 복지관의 참여가 없음. 이는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최근 2년간 예총, 문화의집, 복지관의 참여가 없었던 것에서 문화의집, 복지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위 단체들은 꿈다락에서는 참여가 있어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참여단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줌.

〈표 II-23〉 지역특성화사업의 연도별 참여조직 프로그램 수

연도	대학 산학	문화 재단	문 화 원	협회	예총	박물관 미술관	문화 의집	교육 전문	치료 전문	복 지 관	예술 단체	도 서 관	총계
2006	0	0	1	3	2	0	15	10	0	3	30	1	65
2007	0	0	0	0	0	0	0	0	0	0	230	0	230
2008	1	8	0	24	15	2	0	22	9	38	172	3	294
2009	0	4	3	24	13	2	0	19	5	23	180	1	274
2010	0	4	21	21	20	10	15	33	9	0	225	5	363
2011	4	6	15	13	12	10	9	30	6	0	180	5	290
2012	2	5	11	20	18	5	7	32	5	0	225	6	336
2013	3	8	11	35	13	8	3	44	5	0	339	8	477
2014	1	10	13	24	7	5	3	25	3	1	231	5	328
2015	2	8	15	23	4	8	2	30	4	1	237	3	337
2016	1	8	9	16	4	12	3	34	7	0	247	5	346
2017	1	0	12	24	5	7	3	26	3	0	264	4	349
2018	1	1	13	22	2	9	2	26	3	1	235	6	321
2019	0	4	9	19	4	4	1	22	2	0	220	3	288
2020	0	2	5	15	2	5	0	24	1	0	260	5	319
2021	0	1	4	13	3	5	0	21	1	0	268	5	321
합계	16	69	142	296	124	92	63	398	63	67	3,543	65	4,938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참여 기간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지역특성화 사업은 다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이 사업들의 운영 기간 중 여러 연도에 참여한 조직들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성향을 가진 조직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체 사업기간의 절반 이상 참여했다면 지역에서의 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안정된 조직으로 볼 수 있음. 16년간 지속된 사업이면 7~8년, 9년간 지속된 사업이면 4년 이상 지속 활동한 조직을 구분해 보는 것에 의미가 있음.

○ 꿈다락 사업

- 꿈다락 사업이 진행된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8년 중 4년 이상 참여한 조직은 전체 276개이며, 꿈다락 사업을 통해 연도 간 중복을 제외하고 통합, 미술, 기타, 뮤지컬 순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표 II-24〉 꿈다락 사업에 7년 이상 참여한 조직이 운영한 프로그램 장르

장르	Overall		Between	
	Freq.	Percent	Freq.	Percent
통합	202	16.9	138	50
미술	283	23.68	114	41.3
기타	88	7.36	70	25.36
뮤지컬	122	10.21	63	22.83
놀이	74	6.19	49	17.75
음악	108	9.04	44	15.94
전통	110	9.21	42	15.22
미디어	50	4.18	33	11.96
무용	62	5.19	22	7.97
문학	38	3.18	22	7.97
연극	23	1.92	17	6.16
건축	11	0.92	6	2.17
국악	6	0.5	5	1.81
생태	6	0.5	5	1.81
문화	4	0.33	4	1.45
여행	5	0.42	4	1.45
기획	2	0.17	2	0.72
역사	1	0.08	1	0.36
Total	1195	100	641	232.25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4년 이상 참여한 조직들 중 71.38%는 예술단체이고 교육전문단체도 9.42%를 차지하지만, 박물관과 협회의 참여 역시 높게 나타남.

〈표 II-25〉 꿈다락 사업에 4년 이상 참여한 조직의 종류

조직 종류	Overall		Between	
	Freq.	Percent	Freq.	Percent
예술단체	988	69.87	197	71.38
교육전문	134	9.48	26	9.42
박물관	75	5.3	16	5.8
협회	59	4.17	11	3.99
문화의집	45	3.18	8	2.9
도서관	36	2.55	7	2.54
지역문화원	27	1.91	5	1.81
치료	14	0.99	4	1.45
문화재단	16	1.13	3	1.09
예총	12	0.85	2	0.72
복지관	8	0.57	2	0.72
Total	1414	100	281	101.81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꿈다락 사업에 참여한 조직들은 대체로 하나의 사업을 운영했지만, 참여 조직 중 2.28%는 둘 이상의 꿈다락 사업을 운영했음.

〈표 II-26〉 꿈다락 사업에 참여한 조직들 중 단년도에 하나 이상의 꿈다락 사업을 운영한 경우

전체 수행사업수	Freq.	Percent
1	3,906	97.72
2	86	2.15
3	5	0.13
Total	3,997	100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꿈다락 사업에 참여한 년수가 높아질수록 총 지원받은 사업예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참여가 반복되면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호와 지역 내 호응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규모가 커졌을 가능성을 보여줌.

〈표 II-27〉 꿈다락 사업에 참여한 조직들의 전체 기간 내 참여
년수 별 평균 총 지원받은 예산 규모

전체 기간 내 참여 년수	평균 총 지원받은 예산(원)
1	17,400,000
2	18,300,000
3	18,500,000
4	18,400,000
5	19,300,000
6	20,000,000
7	20,100,000
8	19,800,000
Total	18,400,000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지역특성화 사업

- 지역특성화 사업이 진행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16년 중 7년 이상 참여한 조직은 전체 53개이며, 지역특성화 사업에서 주로 통합장르, 미술, 연극의 순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표 II-28〉 지역특성화 사업에 7년 이상 참여한 조직이 운영한 프로그램 장르

장르	Overall		Between	
	Freq.	Percent	Freq.	Percent
통합	115	28.4	41	77.36
미술	72	17.78	23	43.4
연극	61	15.06	18	33.96
기타	21	5.19	17	32.08
국악	46	11.36	16	30.19
문화	21	5.19	12	22.64
문학	24	5.93	9	16.98
전통	10	2.47	6	11.32
미디어	16	3.95	5	9.43
음악	9	2.22	5	9.43
뮤지컬	5	1.23	4	7.55
무용	2	0.49	2	3.77
놀이	2	0.49	1	1.89
서예	1	0.25	1	1.89
Total	405	100	160	301.89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이는 7년 이상 참여한 조직들 중 73.58%가 예술단체로, 극단이나 미술 단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대체로 지역특성화 사업의 전반적 참여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역문화원과 문화의집의 지속적인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표 II-29〉 지역특성화 사업에 7년 이상 참여한 조직의 종류

조직 종류	Overall		Between	
	Freq.	Percent	Freq.	Percent
예술단체	318	72.77	39	73.58
교육단체	26	5.95	4	7.55
협회	24	5.49	3	5.66
예총	25	5.72	3	5.66
지역문화원	16	3.66	2	3.77
문화의집	14	3.2	2	3.77
치료단체	8	1.83	1	1.89
도서관	6	1.37	1	1.89
Total	437	100	55	103.77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그러나 통합장르의 경우 사업 참여 조직들의 주요 장르가 통합이라고 보기에는 주의가 필요함. 지역특성화 사업에 참여한 조직들 중 단년도에 2회 이상의 지역특성화 사업을 운영한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

〈표 II-30〉 지역특성화 사업에 참여한 조직들 중 단년도에 하나 이상의 지역특성화 사업을 운영한 경우

수행사업수	Freq.	Percent
1	4,446	97.18
2	123	2.69
3	4	0.09
4	1	0.02
230	1	0.02
Total	4,575	100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꿈다락 사업과 달리 지역특성화사업의 참여조직들의 전체 기간 내 참여 연수가 높아지더라도 지원받은 예산 규모가 높아지는 경향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음. 평균 지원예산 규모는 4년 참여, 7년 참여 정도에서 가장 높았고 사업참여 4년 이상이 되면 대체로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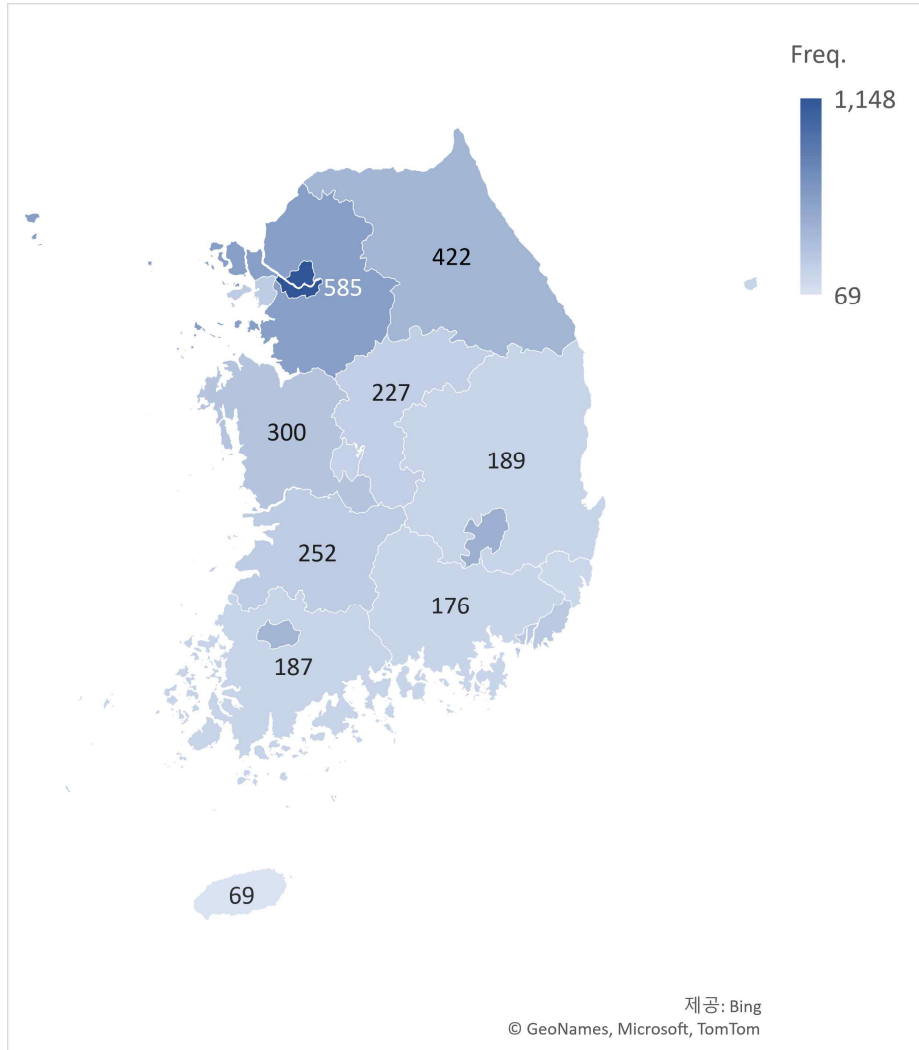
〈표 II-31〉 지역특성화사업에 참여한 조직들의 전체 기간 내
참여년수별 평균 총 지원받은 예산 규모

전체기간내참여년수	평균 총 지원받은 예산(원)
1	14,200,000
2	15,400,000
3	15,800,000
4	21,700,000
5	18,700,000
6	17,700,000
7	19,500,000
8	19,100,000
9	17,200,000
10	18,200,000
11	13,000,000
12	18,200,000
13	14,500,000
Total	16,500,000

출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참여조직의 소재지와 활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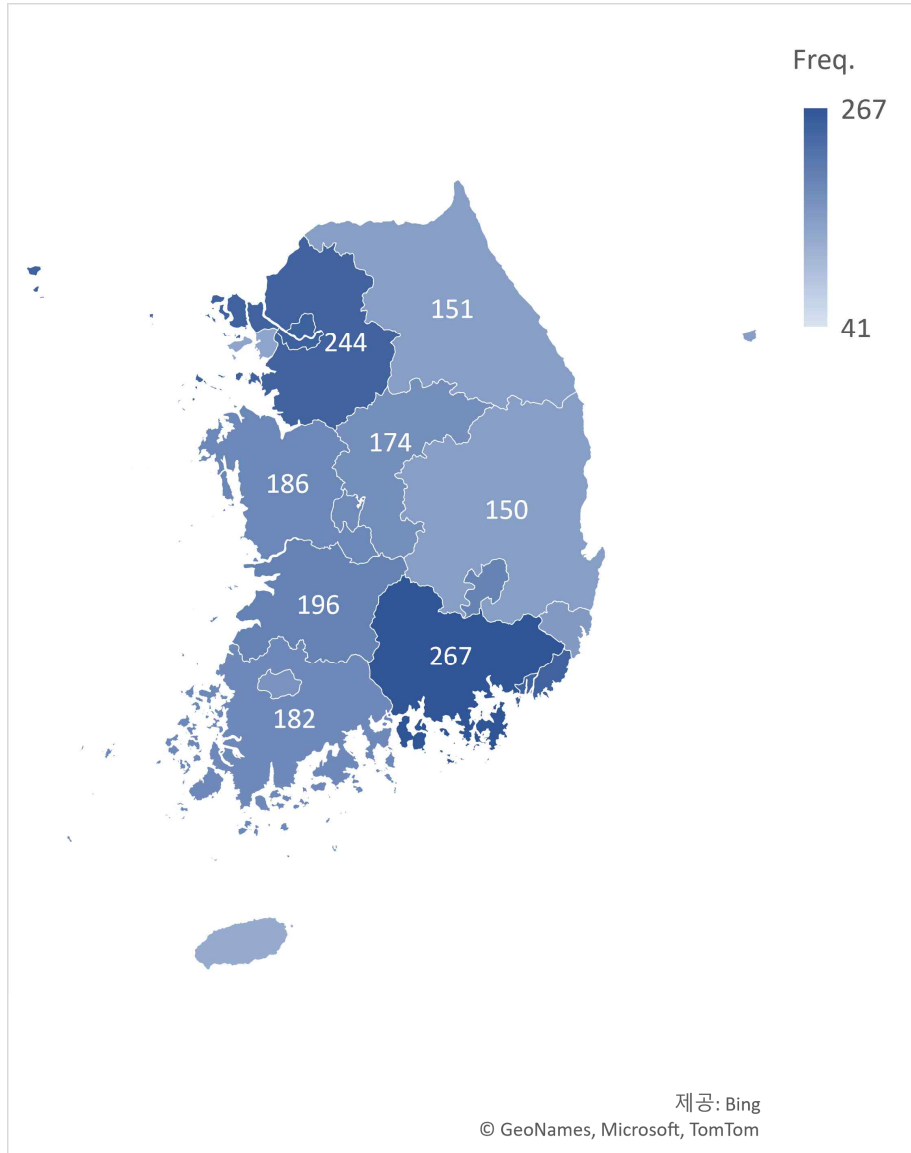
- 단체의 주소지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는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각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운영한 프로그램 수를 파악하여 지역 간 예술교육의 편중이 있지 않은지 분석함.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조직들은 서울(1,148건), 경기(585건), 대구(457건) 순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자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광역별 참여단체 운영 프로그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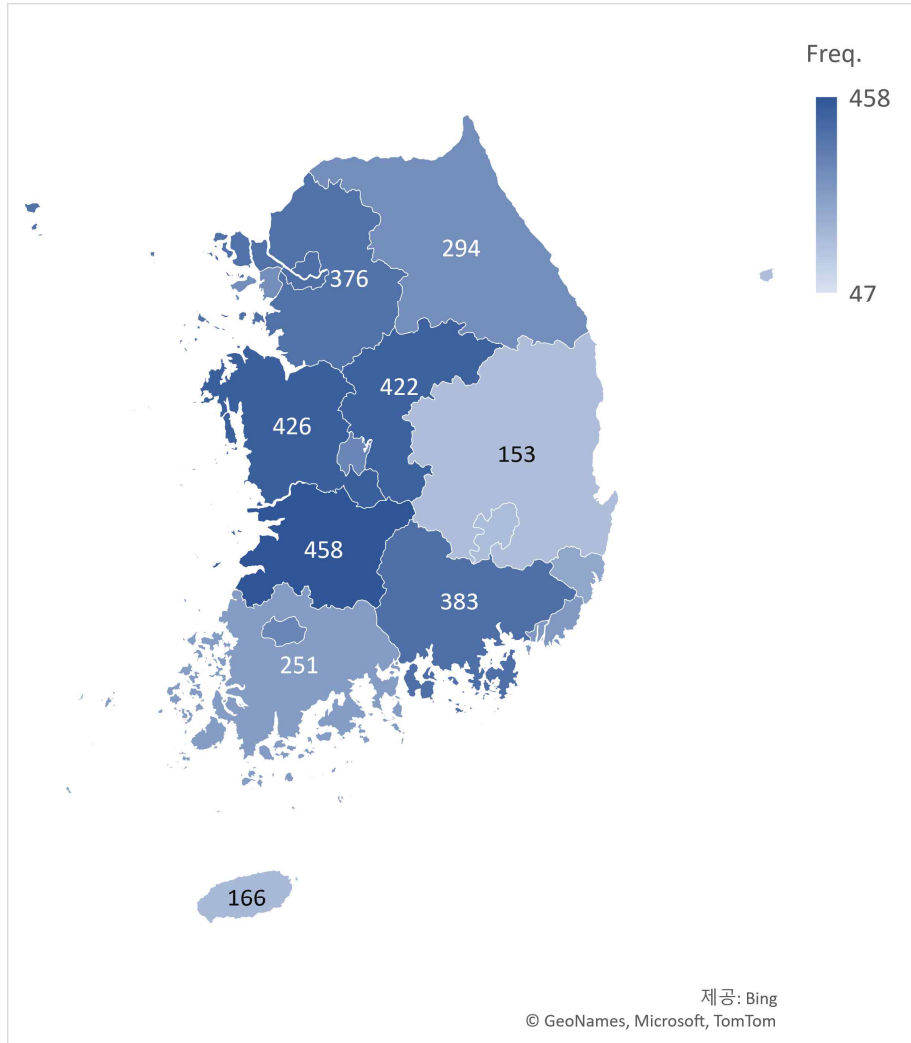
- 꿈다락 사업의 경우 참여조직 선정 시 광역교육센터가 관여하여 전국의 각 단위에서 고르게 선정하게 되었음.
-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서도 경남 267건, 서울 249건, 부산 245건, 경기 244건 등 영남지방과 서울·경기의 꿈다락 예술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었음.
- 그러나 수도권에 50%의 인구가 모여 사는 현재 배경에서, 수도권의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과대 대표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음.



자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9] 꿈다락 사업 광역별 참여단체 운영 프로그램 수

- 지역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은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한 것으로 보이나, 전북과 충남, 충북 등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꿈다락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 오지 않은 곳에서의 단체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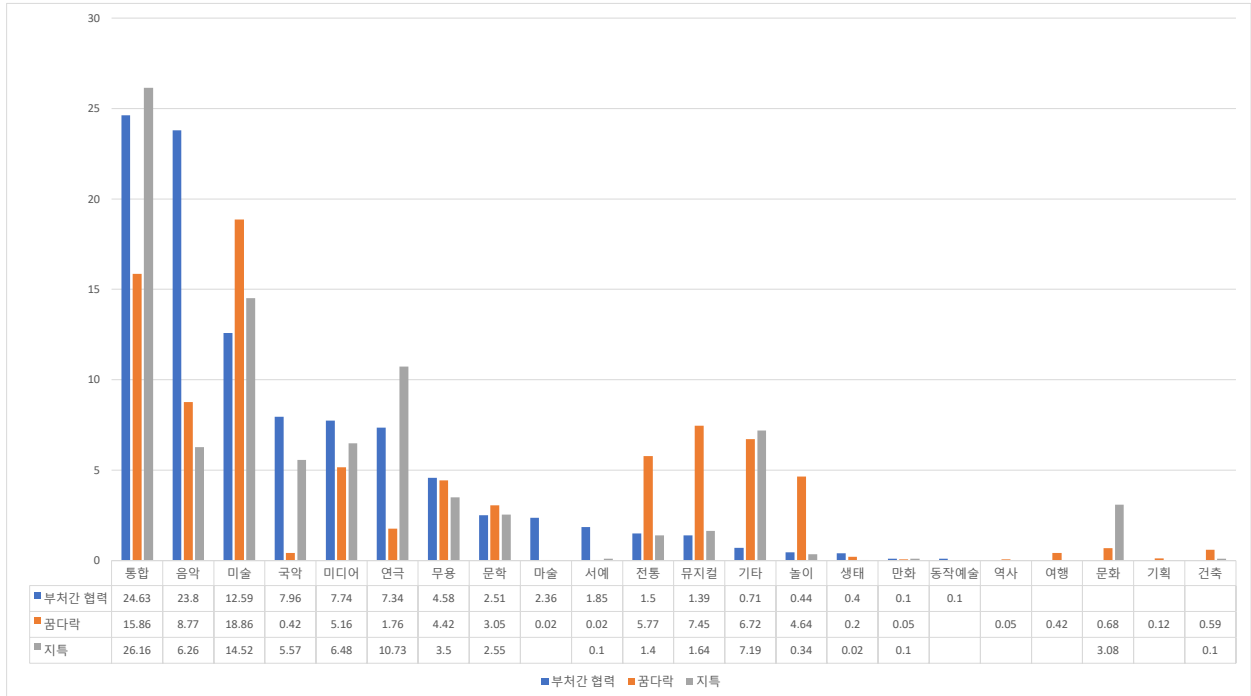


자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10] 지역특성화 사업 참여단체 운영 프로그램 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참여 조직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의 주요 장르

- 부처 간 협력, 꿈다락, 지역특성화 세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주요 분야는 대체로 통합장르, 음악, 미술이 많았으나 사업별로 차이를 보임.
 - 사업별로 주요 예술 분야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업의 특성이나 성향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
 - 부처간 협력사업에서는 통합, 음악, 미술, 국악 순
 - 꿈다락 사업에서는 미술, 통합, 음악, 뮤지컬 순. 음악과 뮤지컬을 합한다면 통합보다 많음.
 - 지역특성화 사업에서는 통합, 미술, 연극, 기타 순



자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11] 사업별 참여조직이 운영한 프로그램의 예술장르 분야 (단위:%)

3.2 소결

- 문화예술교육 수요기관인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 그리고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사업, 지역특성화 사업에 참여한 조직들 중 지역과 인구비례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거점이 될 수 있는 단체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
 - 중앙차원의 교육사업에 참여하며 지역 네트워크 및 행정적 협업능력, 지역 내 영향력을 확보한 단체들이 있다면 기초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특히 지역특성화 사업과 꿈다락 사업에 중복하여 오랫동안 참여했던 조직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예술단체 외에도 협회, 지역문화원 등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어 지역에서의 지지와 활동이 꾸준하게 이루어졌다면 기초의 거점으로서 기능할 능력이 있을 것으로 봄.
 - 다만 광역지역별로 프로그램 운영 수에 격차가 있고, 광역시도에 위치한 단체와 소도시나 군단위에 위치한 단체의 자원 확보 및 유지 능력에 차이가 날 수 있어 일관된 평가보다는 다면적 관점을 통해 유형을 구분해 거점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음.

4. 거점 관련 제도 분석

4.1 문화분야 거점 제도 운영 사례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 추진 배경

- 불안정한 주거환경, 높은 생활비로 예술인들이 서울을 떠나는 상황 발생
- 지역 연계 예술사업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예술을 활용한다는 비판
- 〈서울 예술인플랜〉에 맞는 새로운 지원정책 마련 필요

○ 진행 주체 및 목표

- 서울시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에서 진행하고 자치구청 문화관련 과에서 운영을 진행(서울특별시청 문화예술사업 페이지, n.d.)
- 서울 곳곳에 자생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예술인 활동 거점지역이 지역과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 생태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추진 방향

- 예술인의 삶과 창작이 지속가능한 터전으로서의 지역계획 도출을 목표로 함.
- 각 지역의 협의체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 수립
- 2019년은 기본계획 수립, 2020~2022년의 3개년간 사업실행 후 2023년 확산하는 중장기사업으로 추진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자문단 및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업내용

- 대상은 예술인 클러스터가 형성되었거나 형성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한 자치구
- 예술인 밀집지역 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공간운영비와 유지비, 리모델링비, 임대료, 사업비 등 지원. 즉 인프라 조성, 거버넌스 구축, 예술활동을 지원함.

○ 지원대상(공모·선정): 4개 자치구

- 중구(을지로·필·광희동), 영등포구(문래창작촌인근, 문래·영등포·당산동), 성북구(석관·월곡1·월곡2동), 마포구(서교·연남·합정동)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진행방식은 각 자치구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계획하여 추진함.
- 마포구의 경우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을 〈문화로드맵〉으로 명명하고 매년 다른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예술활동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거버넌스, 연구조사, 네트워크, 예술가지원,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간플랫폼 등 운영(마포문화재단 문화로드맵, n.d.)

- 영등포구의 경우 교류활동, 예술가 제안프로젝트, 기획공간 조성 및 운영, 예술활동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결과주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영등포문화재단, 2022)
- 성북구의 경우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술순환로>로 명명하고 거점공간활성화, 예술생태계 스터디, 동네살롱제, 온라인 플랫폼과 웹진 민미, 지역연구조사 등의 활동 진행(예술순환로 홈페이지, n.d.)

4.2 타 분야 거점 제도 운영 사례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노후거점산업단법)>은 법률명에서 직접 ‘거점’을 언급하는 2023.1 현재까지의 유일한 사례
 - 노후거점산업단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함(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8310호, 2021.7.20. 타법개정).
 - 제2조1항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고 정의하며 거점의 필요요건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장소성을 내포하고 있음.
 - 특히 제2조1항나목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중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의 정의를 통해 거점은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차원에서의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지정 가능한 정책적 기능의 수행을 내포하고 있음.
 - 제2조1의2항에서 연계지역을 정의하고 있는데, 지원을 통해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해당 지역 모두의 경쟁력강화 효과를 기대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며 거점의 역할로 연계 지역과의 네트워크 및 동반 강화를 기대하고 있음.

□ 과학문화거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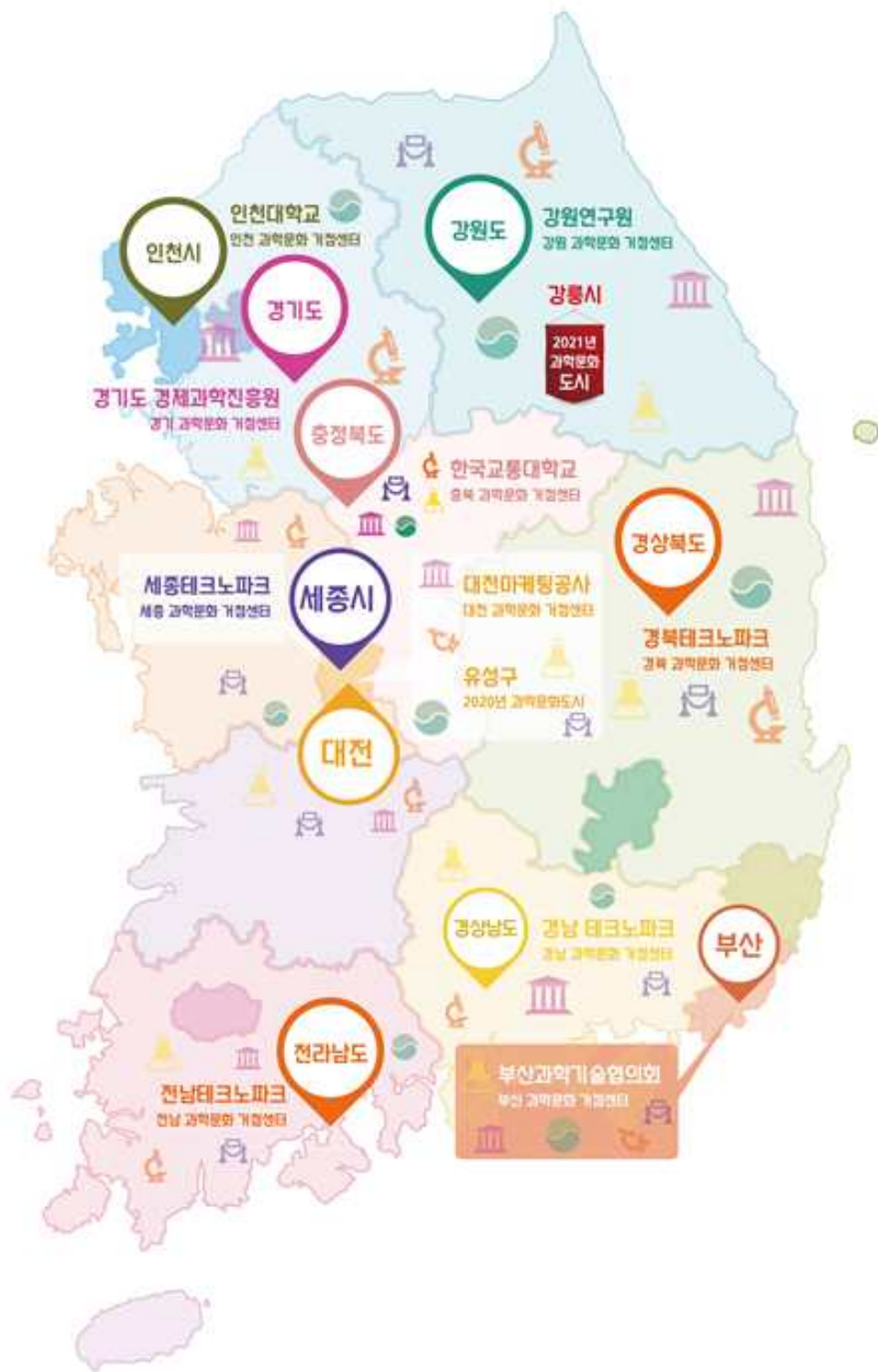
- 추진 배경
 - 지역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
- 진행 주체 및 목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
 - 전 국민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 목표
- 추진 방향
 - 2020년부터 과학문화지역거점센터, 올해의 과학문화도시를 지정하여 운영

○ 사업내용

- 지역 과학문화 정책수립, 다양한 과학문화 주체 발굴 및 지원
-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과학문화 참여를 확대, 지역의 과학문화산업을 육성
-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운영으로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과 과학축제를 연중 개최하여 주민의 과학문화 체감도를 향상하고 도시 브랜드를 제고함.

○ 지원대상(공모·선정)

- 2020년 4개 거점센터 운영은 경남, 충북, 대전, 부산
- 2020년 11월 공모하여 2021년 과학문화지역거점 신규 운영 지자체로 강원, 경기, 경북, 세종, 인천, 전남 등 6곳 선정
- 지역 내 우수한 과학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로 다른 운영을 수행
- 과학기술문화 해설사 양성(강원), 미래 과학 커뮤니케이터 발굴 프로젝트 VR 세종 폐임랩(세종), 글로벌 인재 양성 사이언스스타(경기)
- 시민 참여형 생활속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운영
- 사이언스 러닝 파크(인천), 스마트팜 메이커 리빙랩(전남), 과학과 타 분야 융합 역사와 과학의 융합, 과학문화 도슨트 프로그램(경북)
- 올해의 과학문화도시는 2020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1년 강원도 강릉시 선정
- 강릉시는 푸른 밤하늘과 바다를 활용한 해양·천문 과학문화 체험 캠프, 강릉시의 해양·바이오 자원과 서핑, 패러글라이딩 등 관광·레포츠 산업 자원을 연계한 ‘강릉 과학문화 축제’ 등을 통해 과학문화 도시로서의 브랜드 이어나가고자 함.



출처: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지원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1.1.7.조간, (최종접속일 2023.1.20)

[그림 II-12] 전국 과학문화 지역거점 현황 지도

4.3 문화분야 거점 제도 연구 사례

□ 거점형 문학관

- 2017년 <1차문학진흥기본계획>에서 제안한 거점형 지역문학관을 도입하고 활성화 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수행(조현성, 2018)
- 거점의 기준
 - 주제, 운영형태,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보나, 운영형태별 거점은 현재의 차이를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주제별 거점은 상당수의 문학관을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별 거점이 현실적 안이라고 보고 있음.
 - 다만 문학관은 광역거대권역별(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 등)로 거점형 문학관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여건
 - 거점형 문학관이 갖추어 여건으로 문학관 고유의 기능에 충실한 문학관일 것, 국립문학관과 개별문학관들과의 연계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운영역량과 행정역량을 갖춘 곳일 것, 문학관 고유의 기능과 함께 지역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주문했음(조현성, 2018:76).
 - 특히 강조한 것은 문학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넓지 못하고 문학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도 널리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문학진흥정책이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기능이며(Ibid.) 이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정책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정 방식

거점을 구성하기 위해 거점형 문학관의 지정은 공모 방식을 취하며 거점형 문학관의 개체 수 확정에는 중앙정부와 각급 지자체, 문학관이 협의하여 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서울권, 인천경기강원권, 대전충남충북의 중부권, 광주전남전북제주의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6개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함. 6개 거대 권역별로 1개의 거점문학관을 지정하면 공모사업 참여주체는 기초지자체와 사립 문학관이 될 것으로 봄.
- 선정기준
 - 공동수장고 및 인력교육, 창작공간(레지던시)사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공간의 확보가 전제됨.
 - 단기적으로 중앙정부 재원을 많이 사용하겠지만 점차 지자체의 예산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적절하며, 거대 권역에 속하는 지자체에서의 예산분담을 계획하도록 할 것이 요구됨. 이런 예산 계획이 선정에 반영됨.
 - 거점형 문학관에서는 문학관 자료수집 및 보존,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므로 인력운영계획이 중요

- 운영주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로, 인식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난 지점임.

5. 미래 거점 조직의 요건 및 유형 분류

5.1 기존 법령에 따른 문화예술조직의 구성

□ 문화예술교육시설과 문화예술교육단체

-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1월 20일)의 관련 조항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시설과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정의
- 문화예술교육시설(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참조)
 -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3항)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표 II-32〉 문화예술교육 시설 기준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의 시설 기준	사회 문화예술교육시설의 시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또는 교육 자료 • 문화예술교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교육단체
 -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문화예술교육 단체 요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1항 및 2항)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평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
 - 교육과정의 기획, 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영의 적절성
 -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 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 문화예술교육사 확보, 관리의 체계성
 -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 수행 능력

-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 장비 구비의 적합성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대상

-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박물관, 공립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5.2 광역 단위 거점기관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지정 요건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가 상근할 것.

○ 신청서

-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5.3 기초 단위 문화예술거점의 개념과 역할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개념

- 법령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기존 문화예술교육참여조직의 현황,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개념을 정돈하면 아래와 같음.
 - [개념]생활권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건과 역량을 갖추고,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로부터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인증받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를 의미함.

□ 거점의 역할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철학과 지향점을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함. 개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거점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결정함.

- 정책 활동은 필수 활동은 아님. 다만 기초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정책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중요한 요소로 포함될 수 있음.
- 거점기관의 활동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거점기관의 주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비문화예술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는 거점기관인 경우에도 특성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표 II-33〉 거점의 역할 유형

유형	세부 활동 유형	활동 내용
핵심 활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교육 조사 연구 •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기획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 자원 (인력, 공간, 교육자료, 재정 등) 확보 •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관계 형성
연관 활동	협력 네트워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공동 개발 및 운영 협력 • 인적 자원의 발굴, 연결, 역량 강화, 활용 • 공유와 협력 촉진 활동 (협의체 운영 등)
	정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정책 파트너십

5.4 거점의 요건

□ 4대 요건

- 거점의 역할을 통해 도출한 거점의 요건으로 프로그램, 시설, 문화예술교육인력, 조직 역량을 꼽을 수 있음.

〈표 II-34〉 거점의 4대 요건

요건	내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을 것 (최근 3년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시설, 공간을 갖추고 실제로 활용된 실적이 있을 것 (최근 3년간) • 자체 공간 외에도 지역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함.

요건	내용
문화예술교육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양성 및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 인력의 범위: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갖춘 지역예술가
조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

5.5 유형 분류 의의와 기준

□ 의의와 기준

○ 유형 분류의 의의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유형을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제시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에 대한 인식, 참여, 협력 가능성을 제고 함.

○ 주요 기준

- 관할 범위 (기초 단위 전체 - 생활권 단위)
- 시설 중심-단체 중심 (문화예술교육시설 기반, 문화예술교육단체 기반)
- 지역 특성 (취약지역, 일반지역)
- 사업 범위 (종합성-특수성)
- 목적과 기능 (정책 주도형-활동 주도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유형의 분류

○ 앞서 분류한 다섯 가지 기준에 따른 유형 구분

- 관할 범위에 따라 행정권기반, 생활권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영 시 시설에 강점이 있는지 혹은 단체에 강점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구분 가능
- 지역 특성의 문화향유 및 인프라가 취약한 경우와 그 반대인 경우도 유형을 구분해야 하며 사업의 범위가 다양하거나 특성 수요가 있는 경우를 나누고 거점의 목적이 정책주도인지 혹은 활동 주도인지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

〈표 II-35〉 미래 거점 조직의 분류기준별 유형 구분

분류 기준	유형	내용
관할 범위	행정권 기반형	기초 자치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거점 유형 (예시, 기초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점 유형)
	생활권 기반형	읍, 면, 동, 마을 단위 등 일상 생활권역에 초점을 둔 문화예술교육 거점 유형 (예시, 공동체 기반 문화예술교육 거점 유형, 마을 기반 문화예술교육 거점 유형 등)
시설 vs. 단체	시설 기반형	공간, 시설, 장소 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거점 활동을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유형
	단체 기반형	지역을 기반으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를 기초 지역 거점으로 인증
지역 특성	취약지역 유형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교육 자원이 부족하거나, 인구 소멸 등 취약지역에 문화예술교육 거점을 형성하는 경우. 소규모 거점 유형
	인프라-수요가 높은 지역 유형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교육 자원이 풍부하고,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 유형.
사업 범위	종합형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거점 유형
	특수형	취약지역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유형
목적과 기능	정책 주도형	정책 거점 유형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 구축
	활동 주도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활동에 초점을 둔 거점 유형

6. 유관 사례 조사

6.1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CFC) 인증제도³⁾

□ 사업의 목적

-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와 관점을 변화시키고, 아동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아동의 목소리가 보이고 들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제도’를 시행함.
 - ‘아동’이 지칭하는 대상은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의 모습이자 비전은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온전히 누리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명시됨.
- 해당 비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적시된 ‘아동의 권리’를 반영한 것임. 이는 곧 모든 지방 정부가 달성해야 할 내용이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5대 목표이기도 함.
 -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임.
 - ①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습니다.
 - ②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과 공공 정책,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존중받습니다.
 - ③ 모든 아동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위생, 영양, 교육, 사법제도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누립니다.
 - ④ 모든 아동 이 안전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폭력·학대·착취·방임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거리를 다닙니다.
 - ⑤ 모든 아동이 가정생활, 문화 및 여가생활에 참여할 기회, 친구를 만나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습니다.

□ 단계별 인증 절차

- 1단계: 인증 신청
 -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인증 신청
 - 관련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음.
- 2단계: MOU 체결
 -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전달한 자가평가지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3단계: 심의자료 준비 및 제출

3)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n.d).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웹사이트 참조.
<http://childfriendlycities.kr/index.html> (최종접속일: 2023.1.24.)

-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인정하는 평가위원회가 지자체 제출 자료를 심사
- 4단계: 심의
 -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해당 지자체를 Child Friendly City로 인증
 - 인증 후 4년간 전략사업 수행 및 상시적 모니터링 진행
- 5단계: 인증 완료
 -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전달한 자가평가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출처: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n.d.).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 발췌.

[그림 II-1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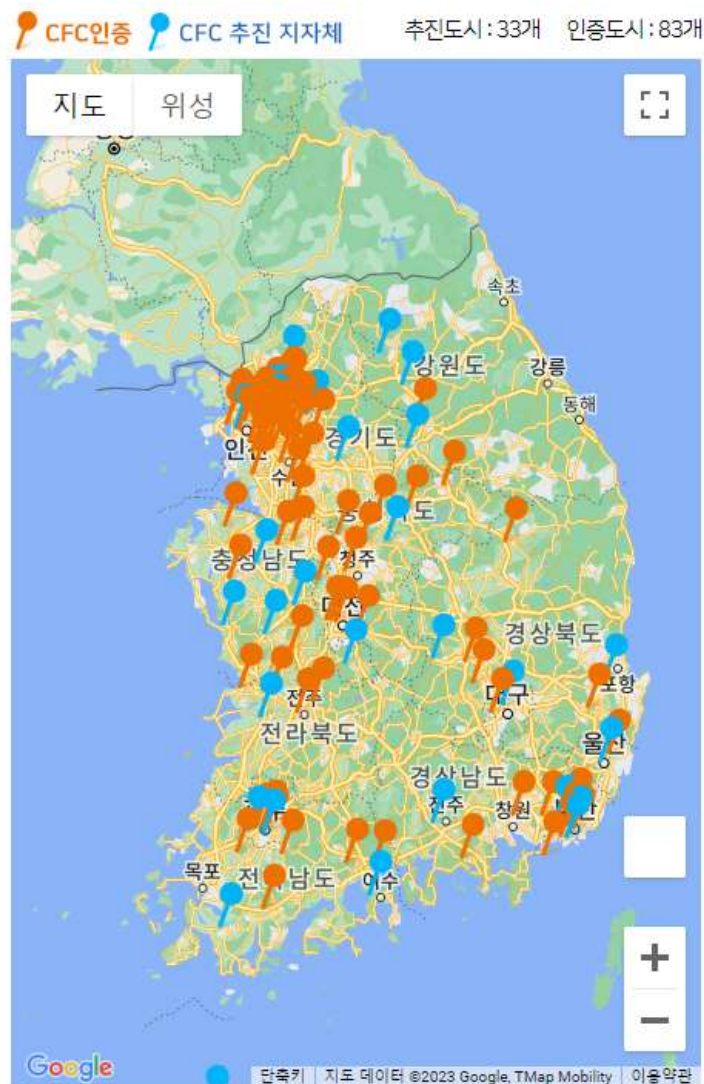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 하나, 아동권리 전담조직
 - 아동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전담부서,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마련
- 둘,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조례 및 규정 수립
- 셋, 아동의 참여체계
 - 아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이 참여하여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및 창구 마련
- 넷, 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여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마련
- 다섯,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내 아동과 성인, 관련기관 종사자,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널리 홍보
- 여섯,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 아동을 위한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사용
- 일곱,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 아동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
- 여덟,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 아동권리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4개년 간의 추진전략과 과제를 개발
- 아홉, 아동영향평가
 - 조례, 정책 및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가 실제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
- 열,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 추진

□ 한국 지역사회 참여 동향 (2023.1. 조사일 기준)

- 현재 한국의 경우, 11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출처: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n.d.).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 발췌.

[그림 II-1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한국 지도

〈표 II-3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한국 지자체 참여 현황

행정단위 (17개 시·도)	인증도시 (지자체 수)	추진도시 (지자체 수)	합계
강원도	횡성군 (1)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3)	4
경기도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화성시 (13)	과천시, 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4)	17
경상남도	고성군, 김해시, 창원시 (3)	진주시 (1)	4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시, 영주시, 칠곡군 (4)	김천시, 포항시 (2)	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북구, 서구 (4)	광산구, 남구 (2)	6
대구광역시	달서구 (1)	대구광역시 (1)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서구, 유성구 (3)	—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7)	남구, 북구, 영도구 (3)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21)	동작구, 마포구, 서울특별시, 중구 (4)	2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	—	1
울산광역시	북구 (1)	울산광역시 (1)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구, 서구 (3)	인천광역시 (1)	4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장흥군, 화순군 (5)	목포시, 여수시, 해남군 (3)	8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4)	김제시 (1)	5
충청남도	논산시,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5)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부여군, 예산군 (5)	10
충청북도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7)	괴산군 (1)	8
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 (1)	1
전국 총계	116개		

□ 시사점

- 전담조직 설립, 법체계 수립, 정책제안 기구 설립으로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이라는 목표의 토대를 마련함. 이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과 근거 법령, 조례, 규칙,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와 정책 개선을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주체의 필요성을 확인시킴.

- 인증의 기간이 4년 동안 유지되는 동안, 상시적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 그리고 10대 구성요소 중 아동권리 실태조사에 근거한 4개년 추진전략과 과제의 개발, 정기적 아동권리 현황조사, 아동영향평가 수행을 포함하여 인증받은 이후 활동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
- 또한, 인증의 마지막 단계로 유니세프에서 제공하는 ‘자가평가지’를 활용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예산 확보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10대 구성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1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에 대한 파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특히, 중앙에서 유인정책으로 활용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어떻게 적용 가능할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음.

6.2 평생교육 사례

□ 기초 단위 평생교육 체계

〈표 II-37〉 기초 단위 평생교육 체계 사례

요소	주요 내용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전달체계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 평생학습관 - 읍·면·동 평생교육학습센터
평생학습관의 설치,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감 :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재원 확보 및 지원, 사업, 관장, 직원, 수강료 징수 등)
평생학습관의 사업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② 평생교육 상담 ③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④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평생학습관 현황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01개: 교육감 설치 및 지정 338개, 지자체 설치 163개 · 운영 주체: 국가 지자체 운영 419개, 법인 58개, 개인 15개, 기타 9개 · 운영 형태: 직접 운영 433개, 위탁 운영 68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 ·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전담 직원 배치, 재정 지원 근거 등)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되는 평생학습센터 유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국 실태조사 자료가 미흡함. · 주요 지정된 기관 유형: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등 ·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대해 조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평생교육기관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학교 부설, 대학(원) 부설,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형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재정지원 주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① 지원 없음 (80.87%) ② 국고 지원 (8.69%) ③ 교육청 지원 (3.26%) ④ 지방자치단체 지원 (4.61%) ⑤ 기업 지원 (2.32%) ⑥ 기타 (0.24%)
주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율	① 직업능력 향상 (39.97%) ② 문화예술 (25.51%) ③ 인문교양 (23.98%)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도시 (180개) · 평생학습 박람회 · 평생학습대상

6.3 세종학당 지정제도⁴⁾

□ 사업목적

-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한국문화 국외 보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세종학당재단에서 본부로서 지원 총괄 업무를 맡고 있음.
-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2년 10월 설립되었고, 2013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사업 체계

- 지정 고려 대상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수요가 높은 지역
 - 세종학당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국가 여부와 현지 교육 환경 고려
- 운영 유형
 - 일반 세종학당: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 대학(원), 비영리법인 등이 지원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세종학당으로, 독립형(현지기관 단독운영)과 연계형(현지기관과 국내기관 공동 운영)이 있음.
 - 협업형 세종학당: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고 운영하는 세종학당
 - **거점 세종학당**
 - 모범이 될 수 있는 표준을 정립하고 운영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재단이 직접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세종학당
 - 문화원·교육원 세종학당: 기존 한국문화원 및 한국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국어강좌(교육)를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일

□ 심사체계

- 심사 절차
 - 서류심사 → 현지심사 → 최종심사 → 결과 발표
 - 심사 방법: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
 - 구성: 신청지역 전문가,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관련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 (※ 단, 지정 신청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함.)
 - 기능과 역할: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심사 및 기타 심의 등

4) 세종학당재단(2022.11.). “2023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안내.” 참조.

○ 심사기준

- 서류심사

-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체계성, 운영 인력 구성의 전문성
- 교육역량: 한국어/문화 교육 전문성
- 입지여건: 한국어/문화 수요 및 지역 파급효과

- 현지실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의지, 운영인력의 전문성, 교육 및 예산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최종심사

- 현지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선정여부 결정

○ 지정 방식 구분

- 일반(독립형, 연계형) 세종학당

- 지원: 지원금 지급과 교원 파견
- 운영기간: 지정 후, 6개월 시범운영 → 이후 3년 단위로 업무위탁계약 체결
- 참여기관: 재외공관, 비영리단체, 법인 등
- 계약형태: 업무위탁계약 체결

- 협업형 세종학당

- 지원: 교원 파견, 교재 지원 (지원금 없음)
- 운영기간: 지정 후, 협약 종료 시까지
- 참여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 공익법인
- 계약형태: 업무협약 체결

□ 사업추진 절차

○ 지정 이후

- 사업계획서 심의, 지원금 확정
- 업무위탁계약 체결
- 세종학당 지원금 교부
- 운영, 예산 계획서 제출 (최종본)

○ 세종학당 시범 운영 시작

○ 신규 세종학당 지정서 교부 및 운영자 교육

○ 세종학당 운영 분기별 보고

○ 세종학당 시범 운영 점검 결과 제출

- 세종학당 정산 및 결과 보고

□ 지원내용

- 세종학당 운영 지원
- 세종학당 기본교육과정 및 교재, 지침서, 단계별 성취도 평가 문항 제공(학습자용 교재는 개별 구입)
- 한국어교육 전문가 파견(대상기관은 추후 별도 결정)
- 한국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세종문화아카데미 등) 및 문화 전문인력 파견
-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통한 국제 협력망 구축 지원
- 우수 학습자 국내 초청 한국문화 연수 프로그램, 장학 사업 지원
- 한국어교원 재교육, 자격 향상을 위한 교원양성과정 제공
- 통합업무관리시스템(NBMS) 제공, 누리-세종학당(nuri.iksi.or.kr), 온라인 세종학당(www.iksi.or.kr)의 온라인 강좌 및 교육자료 제공

□ 시사점

- 세종학당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국외 현지 한국문화원 등에서 기 운영되던 한국어 교육사업을 포함, 국내외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정의 형태를 통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지정의 형태로 세종학당 운영단체 또는 기관이 선정되기는 하나, 재정지원은 유형(일반, 협업)에 따라 구분되어 일반형에만 지원되고 있음.
- 재정지원이 수반된 지정 사업으로서 ‘세종학당’은 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밖에도 전문인력 파견과 교재, 지침서 등에 함께 지원, 제공되고 있음.
- 심사의 과정에서 현지 문화와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요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심사위원이 선정되어 참여하며, 현장 실사가 심사과정에 포함되어 있음.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동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다양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세종학당의 심사과정 내용이 참고 및 적용될 수 있음.

6.4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⁵⁾

□ 사업목적

-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예술후원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 분야 후원 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 해당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후원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 지원임.

□ 인증제도 개관

-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누적 규모는 현재(2022.12.02. 기준) 각각 8곳과 53곳으로 집계됨.
- 인증대상과 기준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인증대상은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의 인증대상은 회사, 사업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명시됨.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인증은 아래 표에 기술된 인증기준에 대하여 평가결과 총점 80점 이상을 득점할 경우 취득 가능함.
 -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의 경우, 아래 표에 기술된 인증기준에 대하여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면 취득할 수 있음.

〈표 II-38〉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대상과 기준

구분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근거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n.d.). “문화예술후원 인증사업”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supp/content/4098> 참조.

구분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춘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 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춘 것 •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것 • 문화예술후원의 횡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춘 것 ※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근거

○ 인증 절차

- 사업홍보 및 공고 (4-7월)
- 신청접수 (8-9월)
- 현장평가 (10월): 서류심사, 인증 평가단 구성, 현장평가 실시
- 인증심의 (11월): 인증심의위원회 상정 인증 여부 최종 결정
- 결과발표 및 인증식 (12월)

○ 인증 기간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임.
- 유효기간 연장은 재인증과 같은 것임. 단,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를 진행함.
- 사후관리로서 모니터링이 매년 1회 시행되며, 심사 당시 문화예술후원 업무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인증 혜택

- [공통] 문체부장관 명의 인증서, 인증패 제공, 인증마크 활용, 언론홍보,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 문화향유 지원,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 [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 매개사업 비용 지원 가능
- [우수기관] KB 금리우대 혜택(중소, 중견기업 대상), ‘여가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 인증 로고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n.d.). <https://www.arko.or.kr/supp/content/4098> 발췌.

[그림 II-15] 문화예술후원 인증 로고

□ 시사점

-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매년 신청과 심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임. 재인증을 받고자 할 때, 약식이 아닌 처음 인증 심사과정을 동일하게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사후관리로서 매년 1회 인증제도 신청 당시와 동일한 후원 업무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시행됨.
 - 문화예술후원의 사후관리는 제도의 목적과 특성상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협력관계 형성 및 유지,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등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요구되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의 경우와 달리 다소 간소화된 과정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재정지원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대상 문화예술후원 매개사업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됨.
 - 간접지원 형태의 재정지원으로서 중소, 중견기업 대상 KB 금리우대 인증제도 혜택이 제공됨.
- 재정지원보다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활용한 홍보 기회와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예술 인파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등 간접지원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음.

6.5 지역아동센터 사례

□ 지역아동센터 개관

-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시행함.
- 시설의 목적은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음.
- 2018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수는 총 4,211개소로 집계되며, 이용 아동수는 109,610명으로 확인됨.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표 II-39〉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영역 (대분류)	세부 영역 (중분류)	세부 프로그램 (소분류)
보호	생활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안전	생활 안전지도, 안전귀가 지도, 안전의무 교육
교육	학습	숙제 지도, 교과학습지도
	특기적성	예체능 활동, 적성 교육
	성장과 권리	인성, 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문화	체험 활동	관람, 견학, 캠프, 여행
	참여 활동	공연, 행사 (문화, 체육 등)
정서지원	상담	연고지 상담, 아동 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가족 지원	보호자 교육, 행사 모임
지역사회 연계	홍보	기관 홍보
	연계	인적 연계, 기관 연계

□ 지원체계

-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원
 - 지역 아동 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 아동 관련 교육 및 훈련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 종사자 및 센터 운영역량 강화 사업
 -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 지역아동센터 조사 연구 사업

□ 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

- 지역아동센터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설치가 허락되며, 그 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설치 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과 사전협의 진행.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와 관련 서류 구비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 구비서류: 정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재산의 평가 조사 및 재산 수익 조사, 시설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 설치 기준
 -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설비 및 면적 규정: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포함한 면적인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 이상
 -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및 이전시설은 이용 아동 1인당 최소 3.3 제곱미터 이상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화장실은 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권장사항).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함.
- 집단 급식소
 - 1회 50인 이상 (종사자 포함)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 군, 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해야 함.
- 종사자 배치 기준
 - 아동 30인 이상: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아동 50인 초과 시 1인 추가), 영양사 1명(아동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영양사 배치)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시설장 1인

6.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⁶⁾

□ 사업 개요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있음.
- 사업정의
 -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 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임.
- 사업목적
 -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 사업 특징
 - 사전 인증: 프로그램 실시 전, 또는 참가자 모집 전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여부가 결정됨.
 - 서면 인증: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 프로그램 인증: 운영하고자 하는 수련활동을 개별 인증하고 관리함.

□ 인증신청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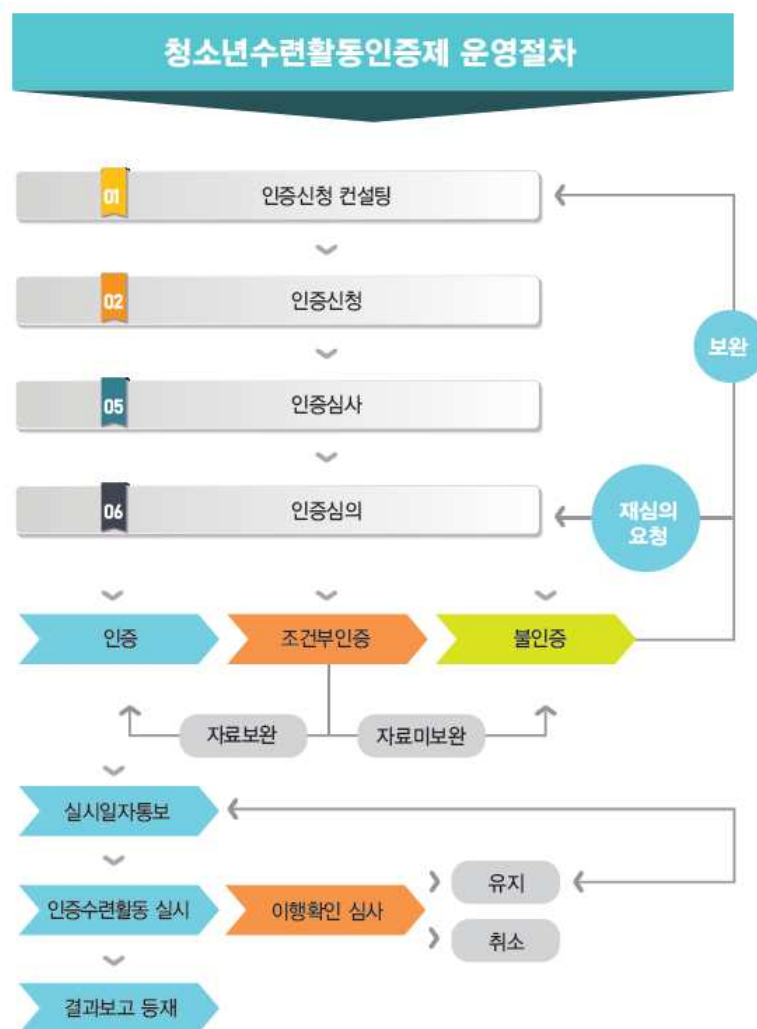
- 인증신청 대상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②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
 - ③ 청소년이용시설
 - ④ 개인·법인·단체 등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자
 -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위탁·재위탁 포함)
 - ①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 ②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 인증신청 제외 대상
 - ①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 내지 강좌
 - ② 운영시간 최소기준 미 충족 활동

6)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202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인증신청 매뉴얼,” 참조.

- ③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 ④ 그 밖에 인증위원회가 심의를 통하여 판단하는 경우

□ 인증제 운영 절차

- 인증신청 과정에서 컨설팅이 제공됨.
- 조건부 인증을 두어 자료보완의 기회를 제공함.
- 신청 기관 또는 단체가 불인증을 받았을 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음.
-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행확인 심사를 시행하며, 평가를 통해 유지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음.



출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202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인증신청 매뉴얼,” p.13. 발췌.

[그림 II-1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절차 도식

□ 인증신청 과정

○ 인증신청 시기

- 참가자 모집 혹은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기준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신청 접수

○ 인증신청 단계

- 1단계: 신청대상 및 기준 등 확인

- ①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인증신청 가능 대상인지를 확인
- ②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신청을 위해 인증기준을 확인하고, 인증신청 양식 확인
- ③ 활동 유형 확인: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단체 숙박형

- 2단계: 인증신청을 위한 시스템 등록여부 확인(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www.youth.go.kr)

- 3단계: 인증신청서 및 (통합)기준별 확인요소 작성

○ 인증기준의 구성

- 인증기준 영역구분: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 영역별 인증기준은 공통기준, 개별기준, 특별기준으로 구성
 - 공통기준: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 개별기준: 숙박·식사, 프로그램 이동
 - 특별기준: 위험도가 높은 활동, 학교단체 숙박형

□ 인증 심사

○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사원이 심사하는 것임.
-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 서류상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이때 운영기관에서는 답변을 제출하여 원활한 인증심사 진행을 지원하여야 함.

○ 현장확인

- 인증심사 진행 시, 제출된 인증신청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 최초신청기관,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포함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
- 인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자료, 인증신청서류와 증빙자료의 오류 여부 검토, 인증신청 서류에 표현하기 불가능한 것 등을 확인함.

○ 추가심사

- 서류심사나 현장확인을 완료했음에도 추가적 확인사항이 있거나, 심사 조율이 필요한

경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제3심사원을 배정하여 2차 서류심사를 진행

□ 인증기준 적용과 평점

○ 인증요소별 평점 적용 기준

- 0(자료 없음):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 1(미흡): 해당 자료는 있으나 인증기준 충족에 미흡한 경우
- 2(충족): 해당 자료가 있고, 인증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 단, 인증신청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모든 인증 확인요소에 대해 1점 이하를 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불인증으로 결정함.

○ 점수체계

- 3단계 평점 방식으로 인증을 위해 신청된 프로그램 자료는 최하 0점에서 최고 2점까지 인증 요소별로 평점 부여
- 점수체계는 항목별로 인증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였는가를 확인하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에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요소에 대한 판단을 점수로 표현하여 객관성을 담보함.

6.7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심의 제도

□ 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

- 본 제도의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가 문화예술법인과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지정하고,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음. 또한, 문화예술법인, 단체의 자생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함.
-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서 찾을 수 있음.

□ 지정에 따른 혜택

-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6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 기부자 세제 혜택(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 전문예술법인, 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일정 한도 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별도 신청 및 지정 필요
- 출연재산 상속세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전문예술법인,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단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별도 신청 및 지정 필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법인세법 제29조, 전문예술법인만 가능)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 18조에 따른 경기도 지원
 - 도립 문예시설 사용료 감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정기/기획 공연 및 전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 경기도 후원을 명시할 수 있음.

□ 지정 요건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지정대상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면서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임.
 - 도 또는 도내 시 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도 또는 도내 시, 군이 설립한 경우

○ 공통요건

-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법인인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재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분야별 요건

- 공연(무대예술공연장 포함) 분야의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 또는 기획 공연실적이 있어야 함. 다만, 예술단 또는 공연장 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 적용
- 미술, 전시 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 실적이 있어야 함.
- 단, 도 또는 시군이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분야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심의 방법

○ 최근 2년 활동 실적을 토대로 신청 법인, 단체의 능력을 심사

- 공연, 전시 분야의 경우,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 및 전시 실적, 공연 및 전시시설 운영 분야의 경우에는 시설 운영 실적, 전문예술인 또는 기획자의 공연 프로그램 참여, 전임 다원 및 객원 단원의 전문예술인 참여 확보 여부

○ 수준 있고 능력 있는 단체를 발굴, 육성

- 작품의 완성도, 운영의 전문성 등 평가를 위해 공연, 전시 실적 및 수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대표자의 역량 및 단원 구성 등 조직력, 제반 여건 심사로 잠재 능력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단체 지정

○ 평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대로 판정

- 지정 요건을 토대로 신청 서류 및 실무 검토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

○ 위원별 심사표를 집계하여 지정 대상 확정

- 평가 기준(조직과 인력, 재정 건전성, 실적과 능력, 예술성, 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라 심의

□ 지정 결과

○ 결과 공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교부

6.8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제도⁷⁾

□ (예비)사회적기업의 목적과 근거

- 사회적기업은 크게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지역형)과 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을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아 육성 및 지원받음.

〈표 II-40〉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자격부여 주체	고용노동부	자치구/관련 부처
인증(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③ 사회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을 갖출것	해당없음
	⑦ (상법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④ (상법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신청	상시접수	연중 1~2차 일정공고 (기초자치단체 접수)
자격기관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최대 3년

출처: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n.d.). “사회적기업이란.”
https://www.songpase.org/bbs/content.php?co_id=eas_com 발췌.

□ 사회적기업의 종류

-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함.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에 신설)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그리고 고용노동부(2022). “2022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참조.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목적(고용노동부, 2022:20)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및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반 절차를 말함.

〈표 II-41〉 사회적기업 인증 세부절차

절차	주관기관	내용
1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 연간 인증계획 수립 및 공고
2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진흥원	• 인증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
3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 진흥원에 신청서 제출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현장실사 계획 수립
5 현장실사	진흥원, 지원기관	• 인증신청기업 현장실사 • 현장조사서 작성(지원기관)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 중에서 추천 가능
7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 → 고용노동부	• 진흥원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심사의견 제시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인증 여부 심의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결과 공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를 통해 인증서 교부(20년부터 전산발급)

출처: 고용노동부(2022). “2022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p.30. 발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목적(고용노동부, 2022: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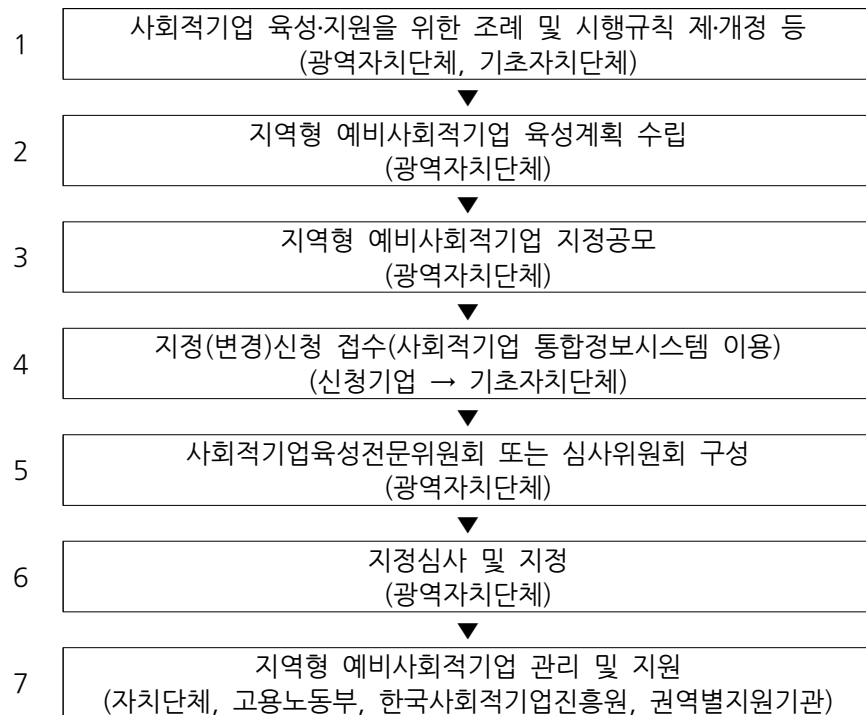
- 지역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및 지정하고자 함.
 -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 및 육성하여,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지역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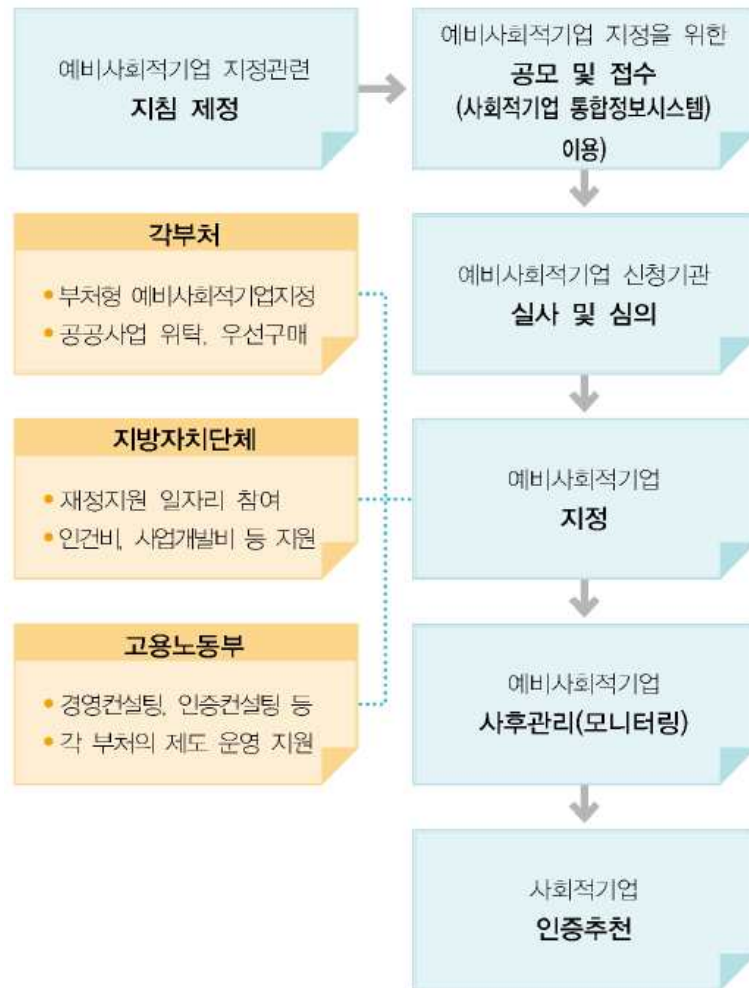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총괄
-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정책 추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육성정책 업무 지원

〈표 II-4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출처: 고용노동부(2022). “2022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p.206. 발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을 부처별로 수립함.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 수행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여 브랜드화할 수 있는 모델 발굴
 - 각 부처장의 명의로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을 공모 및 선정, 선정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관리 및 운영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우수기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인증 추천함.
 -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적용에 더하여 각 부처의 소관 사업과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



[그림 II-17]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 대상 제공되는 지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II-43〉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1천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형: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년) 	-	○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시설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세제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사회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
재정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지원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지원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사업 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	○
모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20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

출처: 고용노동부(2022). “2022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pp.16-17. 발췌.

6.9 유관 국내 사례 유형별 분석

〈표 II-44〉 지정, 설치, 인증, 지원 기반의 단체 및 기관 육성 사례

유형	사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문화예술진흥법) : 지정 혜택 부여
지정 ·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학당 (국어기본법) : 지정된 세종학당에 대해 운영지원, 전문가 파견 등 정책지원
설치 또는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관 설치, 지정, 운영 (평생교육법) : 시, 도 교육감의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의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 평생학습센터 설치, 지정, 운영 (평생교육법) :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의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아동복지법) :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신청, 설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서비스, 품질, 시설, 시스템) 및 인증 혜택 지원 •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청소년활동진흥법) • 생활체육 활동 및 활동에 대한 인증 (국민체육진흥법)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문화재보호법) • 한국관광품질 인증 (관광진흥법) • 전승공예품 인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Ⅲ. 인증제도 현황과 유관 법률

1. 인증제도의 개념과 특성
2. 국내 인증제도 현황
3. 국내 인증제도 평가체계 현황
4. 인증제도와 지원정책의 연계 현황
5. 소결 및 시사점

Ⅲ. 인증제도 현황과 유관 법률

1. 인증제도의 개념과 특성

1.1 인증제도의 개념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부처별 소관 법률에서 다수의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을 규정한 개별 법률은 없음. 다만, 행정안전부 고시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르면 인증을 행정전자서명 생성기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해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제3조제3호), 방위사업청훈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인증을 검증 및 확인된 결과를 정부의 인증기관이 검토하여 최종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음(제3조제7항).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증제도는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를 말함(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n.d.).

1.2 인증제도의 특성

□ 법률 규정상 인증제도의 유형

- 각 인증부여 주체에 따른 분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하는 법정 인증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민간 영역에서의 민간인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인증 목적에 따른 분류: 품질을 확보하려는 품질인증, 제품의 사용상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안전 인증,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안전인증은 품질인증 중 한 분야이며, 정책추진인증도 품질인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나채준 외, 2021).
- 법적 강제성 유무에 따른 분류: 민간 영역에서의 민간인증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법적 강제성의 여부에 따른 구분은 실정법에서 근거한 법정 인증제도에 한하여 인증 강제 여부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음. 법정 의무인증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출시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판매사용이 금지되며, 형벌의 부과 등을 통해 인증이 강제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실시와 관련하여 안전

보장이 필요한 대상의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인증이 강제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 사전 신고제와 법정 의무인증제도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 대표적으로 청소년활동법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제9조의2),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6조)⁸⁾.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상 의무인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카지노 기구 검사(관광진흥법 시행령), 유기사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관광진흥법), 무대시설안전진단(공연법),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임.

□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해 개선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가 도입됨.
-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7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였고, 2020년 7개 인증제도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함. 2121년에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폐지 2개, 통합 1개, 개선 30개)하기로 결정함.

〈표 III-1〉 인증제도 적용 사례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소관부처	최초시행일
전승공예품 인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제42조(인증의 취소),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법정임의	문화재청	2016.5.3

8) 그러나 이러한 사전 의무제와 의무 인증제 대상 활동 이원화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제와 의무 인증제를 사전 신고제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신고·인증제의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여성가족부, pp.110-112 참조.)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소관부처	최초시행일
한국관광 품질인증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시행령]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41조의1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1조의1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법정임의	문화체육관광부	2018.6.14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시행규칙] 제29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법정의무	문화체육관광부	1996.1.1
유기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법정의무	문화체육관광부	1998.8.1
우수문화상품 지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유통활성화)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폐지가 결정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2019.11)	법정임의	문화체육관광부	2002.1.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시행령]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시행규칙] 제27조의4(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고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정임의	문화체육관광부	2015.5.29

□ 인증제도와 지정제도의 구분

-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다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유형도 다양함.
- 지정제도의 취지는 행정권한의 민간위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인증제도와 다름.
- 현행법상 지정 제도는 ①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②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③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④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① 유형의 경우 지정이 영업규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특허·허가·인가 등의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임.

- 지정 제도를 규정하더라도 인허가로서의 지정은 인허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허가에 대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지정기준, 절차, 취소 기준과 제재 등은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해야 함. 또한 지정기준 등이 복잡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위임규정을 두도록 함.

○ ② 유형의 지정의 경우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일정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써, 각종 검사나 인증을 위해 전문적인 검사기관이나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함.

- 행정업무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지정’하는 표현만을 두는 입법례도 있으나, 기관의 지정과 함께 해당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표현까지 두는 입법례도 많음.

- 이러한 유형의 지정은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 주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지정 요건, 취소 요건, 비용 부담, 감독 규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규정해야 하며, 지정 요건 등이 복잡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위임규정을 두도록 함.

○ ③ 유형의 지정의 경우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자생적인 영업능력이 부족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특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이 활동을 계속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해당하며,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지정이라는 명칭을 도입하는 것은 다른 지정제도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표현하여 다른 지정제도와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법제처, 2020:151).

- 이러한 지정의 경우 대부분 지정 및 지정 취소 근거만을 법률에 두고,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게 되지만, 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률의 경우 지정 및 지원 근거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별도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⁹⁾

- 학교밖청소년법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9) 이 경우 지정이라는 명칭을 도입하는 것은 다른 지정제도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표현하여 다른 지정 제도와 구분하는 것이 적절함. (법제처, 2020, p.151. ‘법령입안심사기준’ 참조)

지정기간, 지정절차,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제12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사업계획서, 시설 명세서, 전문인력 보유 현황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함(제6조). 또한 학교밖청소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제13조).

- 국어기본법의 경우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는 국어기본법 및 하위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세종학당재단은 내부 기준에 따라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합 기관을 선정하여 세종학당으로 지정함. 세종학당은 일반형(독립형, 연계형) 세종학당과 협업형 세종학당으로 구분되며, 일반형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교원이 파견되고, 협업형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교원 파견과 교재가 지원됨.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는 학당 선정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역전문가,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관련 학계로 구성되었으며,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됨.

○ ④ 유형의 지정은 공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대해 국가가 특별한 규제를 하는 경우임.

- 공공기관운영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인증 또는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양 제도의 특성을 비교하고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지원방식 및 추진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지원·육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인증제도 현황

2.1 인증제도 운영현황

□ 부처별 인증제도 운영현황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한국에서 현재(2022.10.03. 기준) 운영 중인 등록인증제도 현황은 아래 <표 Ⅲ-2>와 같음.

<표 Ⅲ-2> 운영 중인 인증제도 현황

연번	담당 부처명	등록인증 수	유형	
			법정의무	법정임의
1	고용노동부	5	2	3
2	공정거래위원회	2	0	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2	10
4	관세청	1	0	1
5	교육부	3	0	3
6	국토교통부	34	17	17
7	기상청	4	3	1
8	농림축산식품부	20	2	18
9	문화재청	1	0	1
10	문화체육관광부	10	4	6
11	방위사업청	4	2	2
12	보건복지부	11	3	8
13	산림청	10	2	8
14	산업통상자원부	26	15	11
15	소방청	7	4	3
16	식품의약품안전처	5	4	1
17	여성가족부	2	0	2
18	중소벤처기업부	1	0	1
19	특허청	1	0	1
20	해양경찰청	2	1	1
21	해양수산부	22	11	11
22	행정안전부	10	3	7
23	환경부	19	11	8
합계		212	86	126

출처: 한국 e나라표준인증 종합정보시스템(2022.10.1 기준)

- 인증제도를 부처별로 관리하는 것은 인증제가 국가 단위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전체 212건의 인증제도 중, 법정 의무 인증은 총 86개로 주로 안전과 품질, 환경 관련임.
- 교육과 관련한 인증은 그중 5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모두 교육 프로그램 인증임.

□ 문화예술교육 유관 분야 인증제도 운영사례

- 유관 분야 인증제도 사례를 통한 기초 단위 거점 문화예술교육 거점인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유사 사례를 통해 도출함.
- 문화예술교육 유관 분야 인증제도 중 대표적인 예는 문화예술후원 인증,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임.
- 위의 인증제도의 대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주관 주체는 각 부처, 수행 주체는 부처소속 공공기관
 - 법적 근거를 통해 인증제 수행함.
 - 교육은 대체로 임의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강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비슷하게 나타남.
 - 인증 절차: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인증심의위원회 → 결과발표, 인증 수여
 -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기 상이함.
 - 대상이 법인, 단체, 기업, 미술관 등인 경우: 목적사업/조직과 재정관리
 - 대상이 프로그램인 경우: 과목/시간/시설/운영관리
 - 인증 기간은 대체로 3년이지만,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은 2년,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은 4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은 5년임.
 - 인증 혜택으로 제공되는 정부 지원방식은 간접지원 방식과 직접지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간접지원: 우수사례 견학 및 네트워킹, 워크숍 및 컨설팅 지원, 언론보도와 홍보 지원, 타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 직접지원: 현금 예산 투입, 행정/재정 지원 시 인증 결과 활용

〈표 III-3〉 유관 분야 인증제도 운영사례

제도명	문화예술후원 인증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분야	문화예술 후원 서비스	박물관/미술관 품질	문화재 교육 서비스	서비스/디자인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수련활동 실시	시스템
목적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업을 지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 이후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	우수한 프로그램 인증을 통하여 문화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확산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보급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수준의 향상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수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단	지자체장 (2012년 법령개정으로 인증권한 이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근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제22조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고등교육법 제11조2
유형	법정임의	법정의무	법정임의	법정임의	법정의무	법정임의
시작연도	2015	2017	2022	2009	2005 *위험한 수련활동 인증의무화는 2014년부터 시행	2009

제도명	문화예술후원 인증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대상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문화예술후원 촉진위해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록 후 3년 경과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운영하는 자인 유치원, 학교(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행단체, 개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문화재교육프로그램	도농교류또는농어촌지역 개발전문인력양성프로그 램, 농어촌체험지도사교육과 정, 농어촌마을해설가교육과 정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	임의: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 의무: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절차	공고 및 접수/서류심사/ 현장평가/인증심의위원회 / 결과발표 및 인증 수여	사업설명회/서면평가/현 장평가/평가인증심사위원 회/결과발표	공고/신청/심사(발표심사 포함)/결과통보/프로그램 공개/인증서 발급 및 인증패 제작	시도지사에 신청/해수부령/농림부 인증기준에 맞춰 시도지사가 심사 및 인증	인증위원회에 신청/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결과 통지	신청/인정기관지정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인정기관의 평가(서면,현장심사)/인 증 결과통보 및 공개

제도명	문화예술후원 인증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인증기준	<p>*매개단체: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춘 것. 2.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관련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3. 문화예술후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p> <p>*우수기관: 1.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춘 것. 2.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것. 3. 문화예술의 횡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4.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춘 것.</p>	<p>1. 설립목적의 달성도 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정성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4. 전시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실적 5. 그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인증가능</p>	<p>1. 교육내용및교육과목: 가. 프로그램목표 나. 프로그램내용 다. 프로그램구성 라. 프로그램운영관리 2. 교육시설등: 가. 교육장소 나. 교재및교구 다. 안전관리</p>	<p>1. 도농교류또는농어촌지역개발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2. 농어촌체험지도사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시설 3. 농어촌마을해설가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시설</p>	<p>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력(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p>	<p>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p>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인증유효기간 중 연1회 사후관리	인증일로부터 2년	인증일로부터 3년	인증일로부터 3년	인증일로부터 4년	인증일로부터 5년, 만료 전 재인증

제도명	문화예술후원 인증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인증혜택	문체부장관 명의 인증서, 인증패 제공, 출입국 우대카드, 인증마크 활용, KB금리우대,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킹(우수사례 견학), 언론홍보(기획기사), 문화향유지원(공연관람 등), 여가친화인증기업 가점부여 및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시 우선선정	유효기간 2년의 인증서 및 인증마크 수여 인증기관 우수사례홍보 및 담당자연수지원, 워크숍 및 컨설팅지원	인증표시 사용권한, 언론보도와 홍보책자 지원 등	인증표시 사용권한	인증표시 사용권한, 경비 지원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평가/인증 결과 활용
기타				교육인증 장소는 교육기관에서 추가인증 요청시 현지실사하여 승인여부 결정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시기·목적·대상 ·내용·진행방법·평가 ·자원조달·청소년지도 자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해 개선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가 도입됨.
-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7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였고, 2020년 7개 인증제도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함. 2121년에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폐지 2개, 통합 1개, 개선 30개)하기로 결정함.

〈표 III-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요 인증제도 적용 사례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소관부처	최초시행일
전승공예품 인증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제42조(인증의 취소),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법정임의	문화재청	2016.5.3
한국관광 품질인증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시행령]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41조의1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1조의1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법정임의	문화체육관광부	2018.6.14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시행규칙] 제29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법정의무	문화체육관광부	1996.1.1
유기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정성검사 등)	법정의무	문화체육관광부	1998.8.1
우수문화상품 지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유통활성화)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폐지가 결정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2019.11)	법정임의	문화체육관광부	2002.1.1.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소관부처	최초시행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시행령]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시행규칙] 제27조의4(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고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정임의	문화체육관광부	2015.5.29

3. 국내 인증제도 평가체계 현황

3.1 인증제도 심사 및 평가 절차

□ 개요

-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인증을 부여하는 주관 주체를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 담당부처가 인증 주관 주체이나 시·도지사가 인증 주관 주체인 경우도 있음. 다만, 담당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인증 주관 주체인 경우도 있음.
 - 문화예술후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5조 및 제12조).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이를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2조의6).
 - 가족친화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5조).
 - 도농교류법은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7조).
 - 청소년활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설치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6조).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인증신청을 하면 이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인증 여부가 결정되므로 인증 절차에는 인증을 부여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증 주관 주체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통해 별도의 수행 기관에서 이를 수행함.
 -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인증 및 인증 취소 근거 규정을 두고 하위 법령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증신청의 방법과 절차, 인증기준의 범위, 인증 취소 절차,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절차, 각종 서식, 사후관리 방법과 절차, 인증 업무의 위탁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인증 대상을 사전에 고시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도 있

음.

- 박물관미술관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박물관미술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 인증요건 및 인증기준

-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증대상 및 일반적인 인증요건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증기준의 평가방법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반면, 특정 인증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음.
 - 문화예술후원법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요건 및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인증 방법 및 절차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문화예술후원법 제5조 및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반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요건과 인증방법 및 절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문화예술후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근거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인증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가족친화법은 가족친화인증 근거를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가족친화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7호).
 - 사회적기업법은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제8조).
 - 도농교류법은 시·도지사는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근거를 규정하면서,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도농교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 청소년활동법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자 및 소정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에 대한 인증 근거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해당 인증제도의 취지에 따라 다양함.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기준은 조직 형태, 문화예술후원 사업 수행, 정관이나 규약 등의 구비,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 전담 조직 및 인력,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인 반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기준은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문화예술후원의 횟수 및 지속성,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임.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정 기준으로 교육내용 및 교육과목(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운영·관리), 교육시설(교육장소, 교재 및 교구,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가족친화법은 가족친화 인증조건으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실행(자녀출산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배점이 상이함.
- 도농교류법은 인증조건으로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인증기준이 적용됨. 이에 따라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과목이 도농교류 관련법령, 마을경영, 지역자원발굴·활용, 홍보·마케팅,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교육시간은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이며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과목은 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 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 농어촌지역 자원의 가치 창출, 농어촌지역개발 전략계획 및 기획서 작성,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 지역경영 및 장소 마케팅 기법, 혁신과 리더십, 농어촌지역개발 현장교육 및 실습,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교육시간은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10시간 이상임. 또한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목은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농어촌체험교육교재개발, 농어촌체험 지도기법, 안전교육,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교육시간은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 구비,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목은 농어촌마을의 이해, 마을해설기법,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 농어촌전통문화 해설,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교육시간은 이론·현장학습·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 구비임.
- 청소년활동법 및 하위 법령은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청소년지도자와 전문인력을 구비할 것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청소년활동법 제3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또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

소·시기·목적·대상·내용·진행방법·평가·자원조달·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청소년활동법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박물관미술관법은 평가인증 기준으로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박물관미술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 법률에서 인증 대상을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로 제한하거나 규모나 성격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 문화예술후원법은 인증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반면, 인증 문화예술후원기관에 대해서는 상법상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소득세법 또는 부가 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도 포함함.
- 박물관미술관법은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인증 대상을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정하고 있음.
- 가족친화법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가족친화인증 대상으로 규정함.
- 청소년활동법은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로 의무 인증 대상을 제한하면서,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등 소정의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

□ 인증의 취소

○ 일반적으로 인증 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 취소 대신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 청소년활동법은 인증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인증위원회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청소년활동법 제36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증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서 규정함. 그러나 인증의 취소 사유만을 규정하고 별도로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문화예술후원법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문화예술후원법 제7조 및 제13조). 다만,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한 인증 취소 절차에 대해 별도의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제22조의7) 인증의 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88조), 별도로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
- 인증제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에서 인증의 취소에 있어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 도농교류법은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제19조).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제88조).
- 인증의 취소 사유는 해당 인증제도 취지에 따라 다양함.
 - 일반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필수적 취소 사유로,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박물관 미술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를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함.
 -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인증 취소 사유로 규정함(제36조의3)
- 인증제도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서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인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 가족친화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제18조).

- 청소년활동법은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인증수련활동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함(제37조).

□ 인증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여부 및 방식을 규정하면서, 연장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문화예술후원법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5조).
 - 가족친화법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7조).
 - 청소년활동법시행규칙은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제15조의5).

□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업무 위탁

-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는 인증신청자에 대한 현장 실사업무, 인증기준 충족 여부 평가임.
 - 가족친화법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를 인증신청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현장 실사업무(實查業務),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로 규정함(가족친화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문화예술후원법은 인증기관의 업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로 규정함(문화예술후원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인증의 심사 및 평가는 전문성과 공신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인증제도를 규정한 개별 법률은 인증 주관 주체 또는 별도로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인증기관의 설치나 지정 이외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음.
 - 가족친화법은 가족친화 인증과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의 설치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법 시행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준 등 검토,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증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제12조).

- 법률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 설치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인증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음.
 - 청소년활동법은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를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위원회 구성 및 인증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청소년활동법 제35조). 또한 인증위원회는 인증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원의 선발과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청소년활동법 시행령 제22조).
-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인증 주관 주체가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법률에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가족친화법은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와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6조).
 - 식품산업진흥법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 지정의 유효기간 및 재지정을 규정하는 한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4조).
- 인증제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에서 인증 주관기관이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인증 업무와 인증 취소 권한을 구분하여 위탁 및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문화예술후원법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인증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인증 취소는 위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제12조).
 -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반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의 취소 및 청문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인증제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인증기관 지정이나 업무 위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별도로 인증기관 지정이나 업무 위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박물관미술관법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별도로 인증기관 지정이나 업무 위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인증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을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명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인증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유는 다양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필수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함.

3.2 인증제도 사후관리 및 평가

□ 인증제도 사후관리 절차

- 인증 이후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증 대상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 등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취지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증을 부여한 이후의 사후관리 역시 인증제도 운영에 중요한 절차에 해당함.
-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증 후 유효기간 내 조사나 검사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인증 후 일정한 기한 경과 후 정기적으로 인증을 받은 대상 및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인증 대상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 등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증 이후에도 인증을 취소하거나 지속적인 인증 유지를 위해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이 사후관리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의무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후 평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박물관미술관법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의무적 평가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사후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인증제도 사후 평가

- 법정 의무인증 대상에 대한 인증사항 실시 여부 확인 및 인증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청소년활동법은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외에도 청소년동법은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6조의2 및 제37조).
- 법정 임의인증 대상에 대한 조사, 보고 및 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가족친화법상 가족친화기업 인증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7조의2),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20조).
- 법정 임의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심사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은 임의인증 대상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대해서는 정기심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또다른 임의인증 대상인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정기심사를 규정하고 있음(제20조 및 제22조).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는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를 할 수도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정기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6조).
- 법정 임의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심사를 규정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은 제품인증 및 서비스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심사를 규정하고 있음(제19조).
- 법정 임의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심사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증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문화예술활성화법은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 박물관미술관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 박물관·미술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27조). 문화재보호법은 인증받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22조의7).

4. 인증제도와 지원정책의 연계 현황

4.1 인증 대상에 대한 지원

□ 개요

-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인증제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에서 인증 대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의 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지원방식은 지원 형태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 우선 구매, 인증표시 및 홍보 허용 등의 간접 지원 방식과 재정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지원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박물관미술관법상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청소년활동법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지원방식

- 인증표시나 홍보 허용: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입법 형식(의무 인증 또는 임의 인증)에 무관하게 인증표시나 홍보를 허용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인증표시를 금지하면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함.
 - 문화예술후원법은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5조).
 - 가족친화법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제15조 및 제25조).
 - 문화재보호법은 인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제22조의6 및 제103조).
 - 청소년활동법은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제38조 및 제72조).

- 산업표준화법은 제품인증 또는 서비스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인증표시 또는 서비스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15조).
- 인증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일부 법률의 경우 인증표시나 홍보 허용 이외에 국가나 지방단체 등이 인증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표준화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이나 인증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제25조).
- 인증제품의 검사 등의 면제: 일부 법률의 경우 인증제품에 대한 검사, 신고 등의 의무 면제를 규정함.
 - 산업표준화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소정의 경우 검사·검정·시험·인증·증명·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26조).
- 자금 지원: 인증제도를 규정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인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예산이나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법률의 경우 인증사업자, 인증제도 관련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품 등의 인증사업자, 인증제도 관련 교육과정 운영자, 인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관련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체제 구축 또는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19조).
 - 문화예술후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8조), 경비 지원 대상을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 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의 활용: 일부 법률의 경우 인증 대상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활용하고 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도농교류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이나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나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20조).
- 인센티브: 법률에 근거한 인증 대상에 대한 지원 이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있어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가족친화인증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의 인증마크 부여, 가족친화우수기

업 정부표창,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에 있어서 사회기여도 항목 평가 시 반영 및 보증료 감면(0.1%),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술인파견기업 선정 시 인증기업 우대,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있어서 가점(3점 이내), 해외전시 지원사업에 있어서 가점(3점 이내),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공모사업)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

4.2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 개요

-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의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의 지정이 필요함.
-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방식은 지원 형태에 따라 인증표시 및 홍보 허용 등의 간접지원 방식과 재정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원방식

-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 중 일부는 인증 대상에 대한 예산지원은 규정하지 않는 반면,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가족친화법은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16조).
 - 식품산업진흥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24조).

5. 소결 및 시사점

- 법률에 인증 대상(제품이나 서비스, 기관이나 단체,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확정이 우선되어야 함. 아울러 인증의 취지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증 대상을 비영리 목적 또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인증의 목적(품질인증, 안전 인증, 정책추진 인증)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인증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의무인증인지 임의인증인지 여부(법적 성격)가 검토되어야 함.
 - 인증제도를 규정한 개별 법률들은 법적 성격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유형별 입법 형식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을 검토할 때 제품 관련 인증, 특히 품질인증이나 안전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적 성격이 강한 반면, 시설이나 서비스 관련 인증의 경우에는 정책추진 및 활성화 수단으로 인증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임의인증이 다수임. 대표적으로 청소년활동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법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 이후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정책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의 인증의 경우에도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및 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대표적으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논의 관련하여 각 시설들의 활동성을 자극하고 생활문화활동의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최자혜 외, 2017), 이미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인증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현이 가능한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음(추미경 외, 2018).
 - 따라서 인증 대상(제품이나 서비스, 시설, 프로그램)과 인증 목적을 감안하여 인증의 법적 성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허가와 유사한 성격과 효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경우 다른 인증제도보다 인증기준, 인증기관, 인증 효과 등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반면, 시설이나 서비스의 경우 단순한 품질 확인에 그치는 경우에는 임의인증의 형태가 적절함.
- 인증의 법적 성격을 감안하여 법률에 규정할 사항과 하위 법령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인증 주관 주체, 인증기관의 설치나 지정 및 인증기관의 업무, 인증대상의 법적 형태, 인증 유효기간, 사후 관리 및 평가, 인증 정지 명령 및 인증 취소, 재인증 금지 기간, 경비 지원은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인증 절차 및 기준, 취소 절차는 하위 법률에 위임함.
- 인증의 목적, 운영방식 등을 감안하여 주관 주체를 담당 부처로 할지 또는 시·도지사로 할지 여부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① 인증 주관 주체 내에 별도의 인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② 인증 주관 주체가 인증 업무를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③ 인증 주관 주체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인증 주관 주체가 인증 업무를 해당 법률에 근거가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나 사업에 인증 업무를 규정하고 위탁 근거를 해당 법률의 위탁 규정이나 해당 법률의 하위 법령에 규정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의 설치나 지정 또는 업무 위탁 이외에 인증 관련 주요 사항들에 관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인증위원회 설치가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규정될 수 있음. 대표적으로 가족친화법은 가족친화 인증과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의 설치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법 시행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준 등 검토,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증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제12조).
 -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취소 절차는 하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일반적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법률은 인증 대상에 대한 예산지원은 규정하지 않는 반면,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인증기준은 인증의 취지를 감안하여 사업내용, 구성, 및 운영·관리, 시설, 전담 조직 및 인력 구비, 재정 운영의 건전성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인증 대상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책추진 수단으로서 인증제도를 규정한 개별 법률들이 일반적으로 인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증표시 및 홍보 허용이 일반적인 지원방식임. 교육, 인적 교류와 같은 간접 지원 또는 인증 대상에 국한하지 않는 일반적인 지원을 규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함께 고

려될 수 있음.

- 인증 중지 명령 또는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필수적 취소 사유로,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인증의 목적, 운영상 특수성을 감안하여 취소 사유를 규정할 수 있음.
 - 인증제도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서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인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인증 주관 주체가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라도 인증 취소의 경우에는 인증기관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아닌 인증 주관 주체가 직접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인증 이후에 정기조사나 결과보고 등의 사후관리를 통한 인증의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의무인증 중 안정성 확보가 목적인 경우에는 인증사항 실시 여부 확인 및 인증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 의무를 법률에 규정할 수 있음. 임의인증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정기 심사를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다만,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인증의 목적(품질인증, 안전 인증, 정책추진 인증)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특정 사업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다수의 법률에서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양 제도의 특성을 비교하고 지원방식 및 추진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지원·육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IV. 자료 수집과 분석

1. 설문조사
2. 표적집단면접조사(FGI)
3. 델파이조사
4. 소결 및 시사점

IV. 자료 수집과 분석

1. 설문조사

1.1 설문개요

- 지역 전문가 인식 설문 수행
 - 2023.1.4.~2023.1.14. 동안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수행하였음.
 - 지역전문가 총 208명이 답변

2.2. 설문결과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참여 경험
 - ‘2020~2022년 현재까지 최근 3년 동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의 질문에서 62.02%의 응답자가 진흥원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참여 경험

Answer Choices	Responses	
	Percent(%)	Freq.
있다. [응답 후 (Q2) 로]	62.02	129
없다. [응답 후 (Q3) 으로]	37.98	79
Total	100	208

- ‘최근 3년간 진흥원 사업에 몇 건 참여하셨나요? 참여한 사업명과 참여 연도도 함께 작성해주세요.’의 질문에서 가장 많게는 6건,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참여자들은 대체로 2020년 이후 사업인 예술로탐구생활, 꿈꾸는 예술터,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사업, 문화예술교육사현장역량강화 등에 다양하게 참여하였음.

- 인증제도 인식
 - ‘귀하는 ‘인증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의 질문에서 38.46%의 응답자가 잘 모른다, 29.81%의 응답자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증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13.46%의 응답자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이 인증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

로 드러남.

〈표 IV-2〉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Answer Choices	Responses	
	Percent(%)	Freq.
전혀 모른다.	29.81	62
잘 모른다.	38.46	80
보통이다. (들어본 적이 있다.)	13.46	28
조금 안다. [응답 후 (Q4)로]	16.83	35
잘 안다. [응답 후 (Q4)로]	1.44	3
Total	100	208

- ‘귀하가 알고 계신 대표적인 인증제도(사례)는 무엇입니까?’ 의 질문에서 모른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사회적 기업 인증, 여성기업인증, 친환경인증, HACCP, 품질인증 등을 통해 인증을 알고 있었음.
- 예술활동증명, 문화예술교육사를 인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인증에 대한 법적, 정책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

○ 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

- ‘인증제도 시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65%가 넘는 응답자들이 긍정적이거나 찬성하였음.
- 이 문항에서는 응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질문 하단에 병기하였음.

* 참고, 문화예술교육 인증제도의 경우, 기초 단위 지역을 기반으로 지속적인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조직(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칭 “문화예술교육센터” 등의 공식 명칭과 로고를 부여하여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부여,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조직들이 사업 형태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조직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IV-3〉 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

Answer Choices	Responses	
	Percent(%)	Freq.
반대한다. [응답 후 (Q7)로]	1.44	3
약간 부정적이다. [응답 후 (Q7)로]	10.58	22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	22.12	46
약간 긍정적이다. [응답 후 (Q6)로]	33.65	70
찬성한다. [응답 후 (Q6)로]	32.21	67
Total	100	208

- 인증제 시행에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들의 응답 이유는 대체로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한 정체성 해결 및 전문성, 공신력, 신뢰도 확보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봄.
- 인증제 시행에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들의 응답 이유는 예술교육의 획일화, 인증제 자체의 경쟁력과 지속성 문제, 인증받은 기관의 관리계획이 중요하고 중복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인증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기능

- ‘기초 단위에서 우선되어야 할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에 대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가장 높은 선택률을 보인 선택 응답은 아래와 같음.
- 1순위로 25.77%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인력 자원 발굴, 역량 강화, 참여환경 조성을 선택
- 2순위로 24.72%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인력 자원 발굴, 역량 강화, 참여환경 조성을 선택함. 즉, 1순위와 2순위에서 모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인력 자원 발굴, 역량 강화, 참여환경 조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임.
- 1순위에서 이 응답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들도 2순위에서는 이 응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복으로 115명에게 선택되어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기능으로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인력자원 발굴과 역량강화, 참여환경 조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3순위로 15.34%가 지역 내 다양한 영역 및 문제들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협업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을 선택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기대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에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선택 결과

는 아래와 같음.

- 1순위로 23.56%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 2순위에 대한 응답자 중 12.29%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의 문제(이슈)에 대한 해결 기여를 선택함.
- 3순위에 대한 응답자 중 12.99%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격차 해소를 선택하여 3순위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보임.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시, 우려되는 (잠재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에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선택 결과는 아래와 같음.

- 1순위 응답자의 52.38%가 예산 확보의 불안정성 및 예산 부족
- 2순위 응답자의 27.22%가 거점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 확보 한계
- 3순위 응답자의 18.64%가 거점기관의 독립성 확보 한계 (예: 정치적, 행정적 영향)

○ ‘위 문항(Q10)에서 선택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점의 주요 역량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에 대해 38.25%의 응답자가 예산 확보 역량이 보완책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음. 이에 이어 27.87%의 응답자는 전담인력 확보 및 인적 자원 네트워킹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았음.

〈표 IV-4〉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주요 역량

Answer Choices	Responses	
	Percent(%)	Freq.
예산 확보 역량	38.25	70
전담 인력 확보 및 인적 자원 네트워킹 역량	27.87	51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12.57	23
지역특성에 적합한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 역량	8.20	15
지역주민과의 소통 역량	4.92	9
문화예술교육 공간, 시설 자원 확보 역량	4.92	9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28	6
Total	100	183
Skipped		25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에 대한 간접지원방안과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및 간접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세요.’의 질문에 ‘잘 모른다’, ‘없다’

등 외 구체적 제안을 147명이 작성하였음.

- 설문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설명을 질문에 추가하였음(이것은 인증받은 거점기관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기초 단위별로 최소 1개 이상)을 고려하여, 거점으로 인증된 기관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3-2])
- 응답자들은 지속적이고 장기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특히 전담인력의 지속성 및 역량강화를 강조하며 예산과 인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음.
- 지역학교나 광역과의 관계 등을 형성해야 한다거나, 인증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등 지역 내외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고 보아,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항목들에 대해서 지역 내 영향력과 관계 등도 언급되었음.

○ 인증 지표 구성에 대한 의견

- 인증제도에 대한 평가지표 구성안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이 50% 이상이었지만, 응답자들은 그 중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전문기획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음. 가장 중요성이 작게 강조된 지표는 ‘평가대상 시설에 대해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임.

〈표 IV-5〉 인증제도 평가지표 구성안에 대한 의견

문항 내용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Total	평균
	1		2		3		4		5			
	%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2.78	5	1.67	3	21.11	38	17.78	32	56.67	102	180	4.24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3.89	7	2.78	5	15.00	27	18.89	34	59.44	107	180	4.2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0.56	1	1.67	3	12.22	22	18.89	34	66.67	120	180	4.49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자체 소유 또는 협력/계약 등을 통한 활용 공간 확보 포함)	0.56	1	2.22	4	21.67	39	21.11	38	54.44	98	180	4.27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7.22	13	7.78	14	28.33	51	18.89	34	37.78	68	180	3.72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1.11	2	1.11	2	15.00	27	26.11	47	56.67	102	180	4.36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예: 문화예술교육사 1인)	11.67	21	5.56	10	22.78	41	15.00	27	45.00	81	180	3.76
문화예술교육 교육 및 기획 전문인력 양성 역량	1.11	2	2.22	4	16.11	29	20.56	37	60.00	108	180	4.36
문화예술교육 교육 및 기획 전문인력 지역 내 네트워크 활용 범위 역량	0.00	0	1.67	3	11.11	20	27.78	50	59.44	107	180	4.45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0.00	0	0.56	1	17.22	31	24.44	44	57.78	104	180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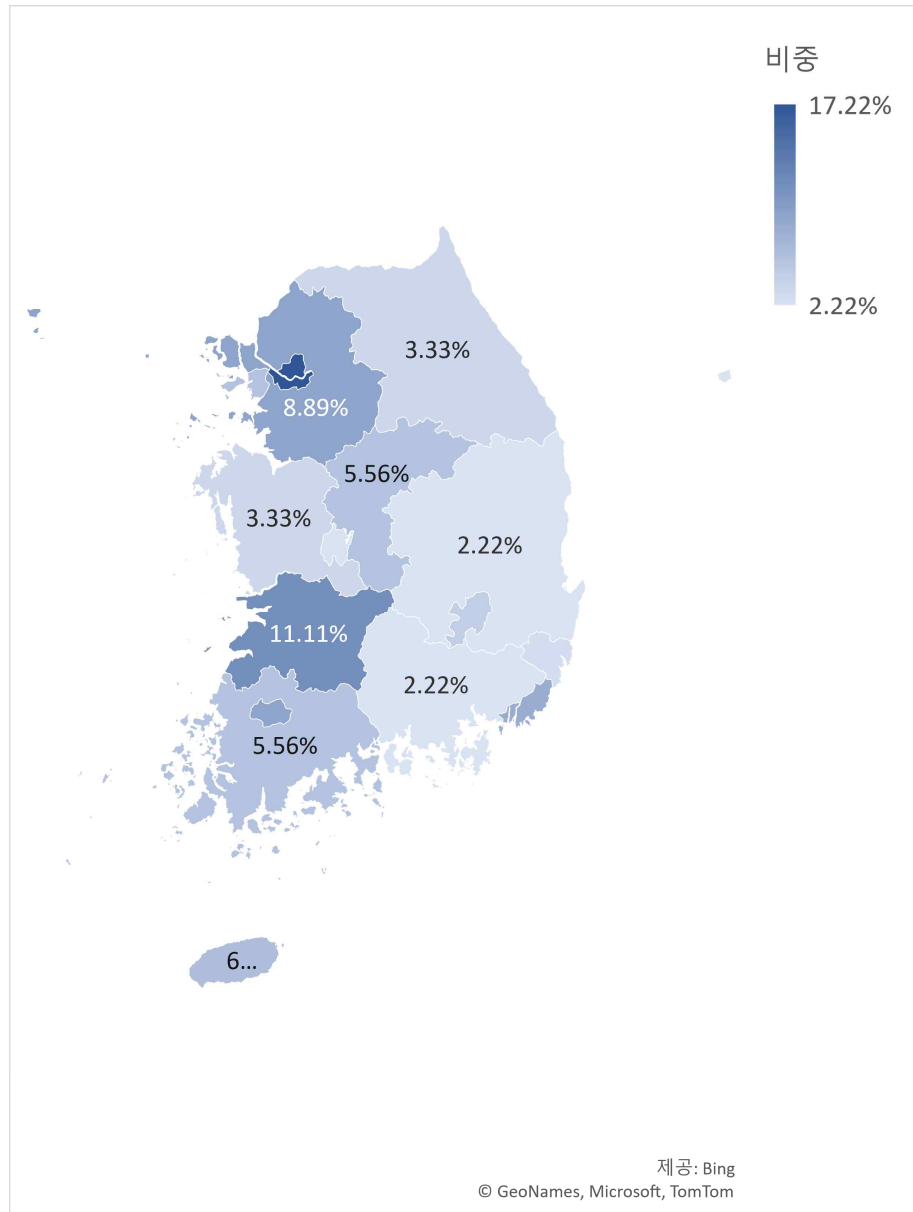
*응답=180, 미응답 28

- ‘이 밖에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의 질문에 응답자들은 지속성 높은 운영, 예산지원, 교육 철학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음.

○ 인구통계학적 정보

-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다음 중 택1 해주세요.’ 의 질문에서, 가장 많은 17.22%의 응답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음. 그 다음으로 전북 11.11%, 광주와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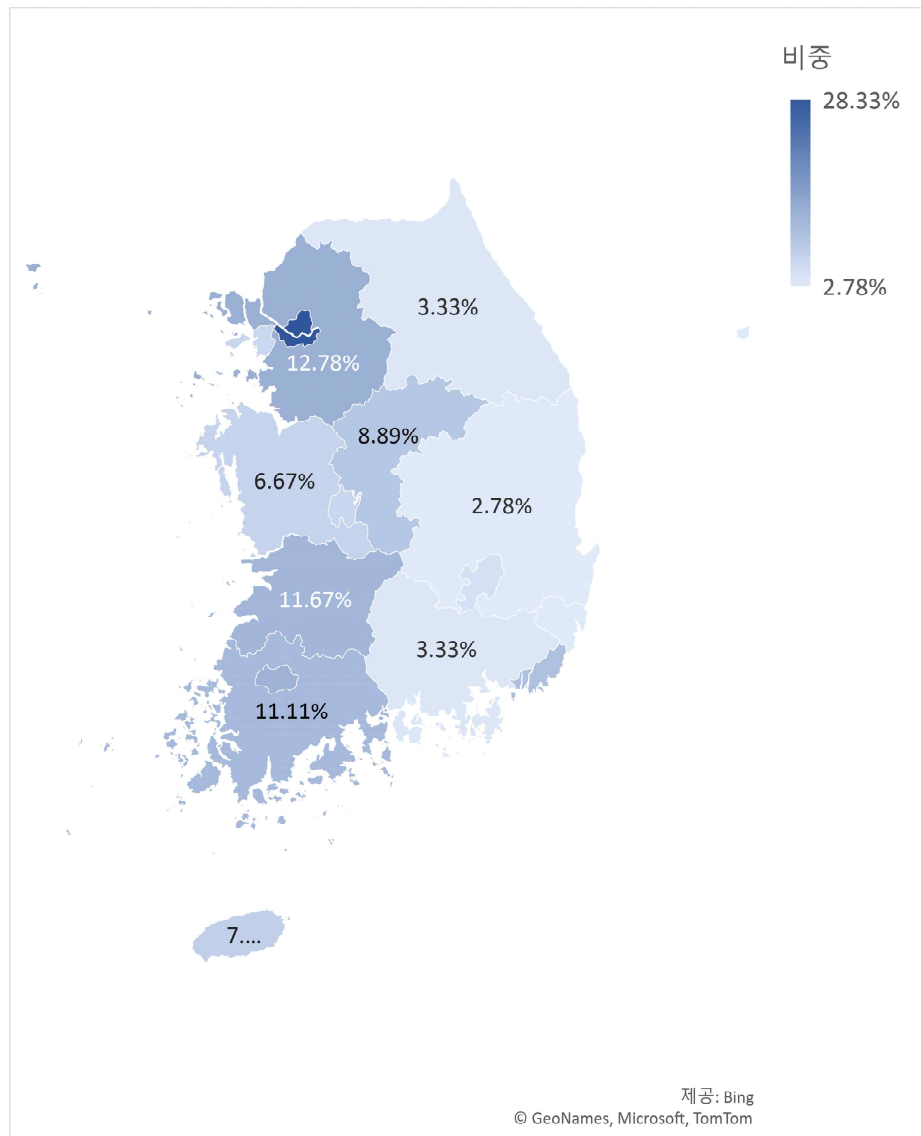
8.89%로 나타남.



[그림 IV-1] 응답자의 거주 지역

- ‘귀하의 주요 문화예술교육 활동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해당 지역을 모두 표시해주세요.’의 질문에서, 앞서 거주지역과 달리 활동하는 지역을 모두 선택하여 거의 모든 지역의 응답수가 거주지역보다 높아진 모습을 보였음. 다만 대구와 울산, 강원도의 경우 응답 수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위 지역들에 들어와 활동하거나 반대로 이 지역을 벗어나 활동하는 경우가 적은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활동지역으로 지목된 광역지역들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인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응답이 집중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 지역들에서의 문화예술교육활동

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음.



[그림 IV-2] 응답자의 주요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역

- 응답자들의 연령(만나이)은 30대가 34.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가 많아 경력과 연차가 있는 지역전문가들이 많이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IV-6〉 응답자 연령대

Answer Choices	Responses	
	Percent(%)	Freq.
20대	12.22	22
30대	34.44	62
40대	28.89	52
50대	23.89	43
60대 이상	0.56	1
Total	100	180
Skipped		28

- 응답자들의 성별은 64.44%가 여성으로, 문화예술분야 중 특히 교육 부분의 여초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IV-7〉 응답자 성별

Answer Choices	Responses	
	Percent(%)	Freq.
남	35.56	64
여	64.44	116
Total	100	180
Skipped		28

- 응답자들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형태는 41.67%가 지역문화재단이었음.

〈표 IV-8〉 응답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형태

Answer Choices	Responses	
	Percent(%)	Freq.
지역문화재단	41.67	75
예술단체법인	15.56	28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5.56	28
지자체(광역/기초)	10.56	19
교육전문단체/협회	6.11	11
대학(산학/산하연구소)	4.44	8
지역문화원	3.33	6
박물관/미술관	2.78	5
예총	0.00	0
복지관	0.00	0
치료전문단체법인	0.00	0
Total	100	180
Skipped		28

-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이 17.22%, 전북이 11.67%, 경기 8.33% 순으로 많았음

〈표 IV-9〉 응답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위치 지역

Answer Choices	Responses	
	Percent(%)	Freq.
서울	17.22	31
부산	7.78	14
대구	3.89	7
인천	5.56	10
광주	7.78	14
울산	2.78	5
세종	1.67	3
대전	2.78	5
경기	8.33	15
강원	2.78	5
충북	6.11	11
충남	3.33	6
전북	11.67	21
전남	7.78	14
경북	2.22	4
경남	2.22	4
제주	6.11	11
Total	100	180
Skipped		28

- 응답자들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이 많음에 따라, 재단 또는 센터 등의 행정가가 많이 응답하였으며, 기획자도 26.67% 응답함.

〈표 IV-10〉 응답자의 직무

Answer Choices	Responses	
	Percent(%)	Freq.
교육 강사 또는 문화예술교육사	7.22	13
기획자	26.67	48
교사	1.11	2
예술가	5.00	9
행정가(재단 또는 센터 등)	42.22	76
행정가(지자체)	7.78	14
교수 및 연구자	10.00	18
Total	100	180
Skipped		28

2. 표적집단면접조사(FGI)

2.1 조사 방법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실효성 있는 간접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과 논의를 청취하고자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방법을 채택함.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현장이 갖는 환경과 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행정단위와 지역, 조사 참여자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법적 위상 등을 염두하여 인터뷰 참여자를 선별함.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도심(수도권, 비수도권), 산업지구, 산촌 등 지역에서 7차에 걸친 FGI를 시행함.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 모두 FGI 참여자 대상에 포함함. 또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일반, 사회복지(아동·청소년), 지역주민 거버넌스(사회적 경제) 등 분야의 공공기관(직접 운영, 위탁운영), 민간단체, 주민자치회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인터뷰를 진행함. 이처럼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FGI 참여자를 구성함.
 - FGI 참여 대상자 선별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구성하였으며, 추가로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FGI 진행 과정에서 스노우볼(snowball) 기법을 활용하여 모집함.

〈표 IV-11〉 FGI 참여자 구성 및 부여 코드

행정단위	지역	소속기관	기관/단체 유형	부여 코드
광역시	광주	문화기반시설	(공공) 위탁운영	A1
				A2
		문화예술교육단체	민간	A3
	대전 (천안 포함)	문화기반시설	공공	B1
		사회복지단체	민간	B2
		주민자치회	-	B3
	울산	문화기반시설	위탁운영	C1
		문화예술교육단체	민간	C2

행정단위	지역	소속기관	기관/단체 유형	부여 코드
시·군·구	구례	문화예술단체	민간	D1
		문화기반시설	공공	D2
		문화기반시설	공공	D3
	성북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공	E1
		사회복지단체	민간	E2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독립	E3
		사회복지기관	공공/거점	E4
	전주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공	F1
		사회복지단체	민간	F2
		문화예술단체	민간	F3
		사회복지기관	공공	F4
	완주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공	G1
		문화예술 공공기관	위탁운영	G2
		지역주민 거버넌스	민간	G3

2.2 문항 구성

- 본 면접조사에서는 선행된 문헌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반구조화 문항을 설계하여 현장 전문가 FGI 조사 문항으로 활용함. 면접조사 문항은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필요성과 방향성, 거점 구축 환경과 기대효과, 간접지원 방안과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중심으로 구성함.
 - 면접조사 문항 설계를 위해 활용한 문헌으로 거점 구축 및 인증제도 사례와 법적 근거,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가이드북과 성과보고회 자료 등을 반영함.
- 문항의 구성은 크게 다음과 같음.
 - 기초 거점 구축 사업의 방향성: 기초 단위 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역량 격차 감축, 문화예술교육 단체로서의 정체성 구축 또는 강화, 문화예술교육 확산,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 조성
 - 기초 거점 구축을 위한 환경: 문화예술교육 거점 주체 및 협력 단체를 포함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동향, 기초 거점 구축에 대한 인식, 기대 또는 우려
 - 기초 거점 구축에 대한 기대효과 또는 사회적 영향: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예: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제공 및 활성화, 시민 중심 거버넌스, 사회적 영향 또는 가치 등)
 - 간접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과 수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과 활성화 즉,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간접지원 수요와 실효성에 대한 현장 인식

-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현장 적합성: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 협력기관 대상 인증제도 활용 시, 기대 및 우려 지점
- 인증제도 평가지표: 인증 수여와 갱신 등을 위한 인증기관 및 단체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 평가항목

〈표 IV-12〉 표적집단면접조사(FGI) 질문 체계

정책 분야	주제/이슈	세부 질문 문항
정책 방향	목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단위 거점 구축이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기초 거점 구축 및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기초 단위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정체성 또는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기대하는가? (또는 정책 결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정책 환경 (지역)	활동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할 인력 및 자원(공간, 재원 등)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가? • 아니면, 어떠한 보완 및 지원이 요구되는가?
	수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거점의 구축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 또는 활동가의 기대는 어떠한가? • 기초 거점 구축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 및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기초 단위 거점 구축	기초 거점 구축 관련 기대 및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으로 인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기대 내용은 무엇인가? • 거점 구축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기초 거점 구축 관련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과정 또는 운영 활성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 해당 우려 지점에 대한 예방/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간접지원	우선 지원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과정 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비금전적 지원내용은 무엇인가?
	인증제도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도를 통해 공식 명칭과 로고를 부여하고,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안의 현장 적합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인증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대상기관의 혜택은 무엇인가?
인증제도 운영 방향	인증제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인증제도 대상 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가?
	평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허가 및 유지를 위한 평가 지표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 (세부항목 예시: 프로그램, 시설, 인력, 조직 역량) • 평가 지표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지양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제언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도 시행 시, 기대되는 효과 또는 영향은 무엇인가?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도 시행 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2.3 FGI 분석 결과

〈표 IV-13〉 FGI 분석 결과표

주제	상위 분류	하위 분류	분석 내용 요약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환경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전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사업 중심 생태계에 대한 높은 피로도와 한계 체감도 문화예술교육 유료화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의 태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문화예술교육 환경은 생태계 악화에 영향을 미침. 이에 자생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유료화, 기획/행정 인력 인건비 인정, 민간지원 활성화 방안 등의 필요성이 제시됨. 문화예술교육 경험자가 축적됨에 따라 수요 및 인식이 높아져, 식상한 프로그램이나 자기 계발이 없는 예술강사의 경우, 시장에서 도태됨. 이를 시장 형성의 태동으로 해석함.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정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으로서 낮은 매력도로 인한 인력 유출 타 부처 및 분야로 전향 확대 기획자 양성의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사업 의존도가 높고, 시장 형성이 미비한 문화예술교육의 환경에서, 기획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되지 않아 경제활동으로서의 매력도는 낮게 평가됨. 반면, 문화예술교육 기획 역량 수요가 있는 타 부처 및 영역(도시재생, 복지, 평생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 등)의 경우, 기획 및 행정 인건비가 제공되어 인력과 단체의 분산 및 흡수가 관찰됨. 지역 분권화 이후, 광역 단위의 공모사업 중심 운영이 강화되어 기획자 양성이 약화됨.
	광역센터 역할 개선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단위 현장 이해도 증진 필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 단위 활동에 필요한 인력 자원 발굴 목적이 중심되기보다, 기초 단위 생활권 밀착 사업 발굴 및 활성화 지원 필요 중앙의 지원사업 전달역할은 지양하고, 기초 단위 중심 단체 간 연계, 협력 촉진 역할의 확대 필요. 기초 단위 지역 내 ‘토론의 장’ 제공 필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기초 거점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 주도로 지역 정체성 발견 경험 지역 내 분야/영역별 협력 주체 발굴·연계·소통 및 협의 가능 구조 거점 플랫폼의 유용성 인식과 참여 주체 간 신뢰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공모사업의 주어진 틀에 따른 기획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 기획, 탐색, 참여자 모집, 지역의 이슈 논의하는 사업 운영이 가능하여 지역 정체성 발견 기회 생성 거점/허브라는 기초 단위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가능해짐. 문화예술교육 단체, 타 분야 협력 주체, 거점기관 간 소통 및 협의가 가능하여 상호 이해도 신장과 신뢰관계 형성을 경험
	향후 기초 단위 거점센터의 역할과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개 및 자원 연결 중심의 중간 지원조직 역할 중요 생활권(예: 읍, 면, 동) 단위 소외지역에 ‘위성 거점/분점’을 조성하여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정책 목표 탐색 및 설정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인력, 예산, 수요를 연계하는 매개 기능 이행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연결, 유통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 농촌생활권과 같은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경우, 생활권 밀착 활동 체계 조성 및 지원 필요 기초 단위 자원조사, 협의체 구성, 정책기반 시범 프로그램 설계, 중장기 방안 세부 내용 전달 등이 기초 거점의 주요 역할로 인식 기초 단위 네트워크 활성화 촉진 및 생태계 조성 역할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이때, 각기 다른 환경(인력, 예산, 사회문화적 자본 등)을 고려한 실행 및 연구기능 강조 필요

주제	상위 분류	하위 분류	분석 내용 요약
	거점센터의 효과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발굴 및 상시 운영 공간 확보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기회 제공 신뢰도와 공신력 축적 다양한 협력관계 형성 및 타 영역/분야 단체 유입 및 연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운영 가능 공간이 확보될 경우,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공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릴 수 있음. 또한, 주민, 예술가, 강사 등 만남의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교육의 실험실 기능의 강화 가능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진행 가능 공간 발굴 및 협력 수월 협력과 네트워크 운영을 토대로 형성된 신뢰도와 공신력을 바탕으로 협력 저변 확대 및 파급력 기 대할 수 있음.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분야 인증제도 도입	인식과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자율성과 장기적인 사업 운영 보장 가능성 중요 프로그램 위주 지원사업 탈피가 필 요한 시기, 현장 생태계 조성 지원방 안 기대 인증제도를 통한 단체의 위상, 소속 감, 정체성 증진 기대 간접지원 고려 시, 민간지원 활성화 방안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에 부여하는 자율성은 문화예술 인프라 취약지역을 포함한 지역별 편차와 특성을 고려하는 측 면에서 매우 중요 인증제도를 통해 현장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지향점을 두어야 함.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앙차원의 전문성 및 역량 인정을 통해 기초지자체를 설득하고자 하는 전략에 대해 일면 이해 가능 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문화예술교육의 위상 신장 기대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현재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간접지원 방안을 고려한다면, 수익사업을 통 한 단체의 예산 확보가 함께 열려야 지속가능성이 가능할 것
	인증제도에 대한 우려와 간접지원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어떤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인지 불명확함 우려 지역 내 서로 협력이 아닌 경쟁하는 구조 발생에 대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의 명확한 혜택이 없다면, 참여 동기가 미약함. 오히려 지표에 따른 정량적 평가로 자율성 보 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고, 타 지원사업과 차별성 없는 지원책 양산 우려가 있음. 인증제도로 기 시행된 '기초 거점 구축' 지원사업 성과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는 소규모 지자체 행정구조와 기금의 지방이양으로 인증제도가 기초 단위 현장에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방향성에 대한 딜레마 인지 필요.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확산이 목적인지, '거점' 기관을 인증하고자 하는 것인지 인증제 도입의 목적이 불명확한 것이 우려됨.
	선정 요건과 평가 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정 중심의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통합된 지표개발 필요 심사에 '인증 후 사업계획(안)' 포함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따른 유형별 평가지표 필요 인증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의무 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보유한 프로그램 수, 네트워킹 진흥 등 실제 이행한 실적 등 평 가에 포함 제시. 협력 수행 이력 평가 시, 네트워크 소속 단체의 역할 구분의 체계적 구성도 심사 필요 인력의 전문성 외에도,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파악하여 지역 내 사회 네트워크 역량도 평가 고려 인증 후, 사업계획을 통해 실행 가능성과 기획력 등 평가. 이후 인증의 갱신 또는 재평가 시, 제출 계획서 기반 평가 가능 인증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필요조건을 제시하여 인증의 가치와 상징성을 공표할 필요 있음.
	인증 기관 및 단체를 위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에 따른 혜택의 중요성 강조 인증 유지 적정 기간으로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 혜택이 즉각적으로 인증기관 및 단체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 공모사업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컨설팅 및 재교육 기회 제공 인증기관 및 단체 교류 네트워크 운영 대국민 홍보 시, 인증기관 및 단체 활용

2.3.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환경

□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전환기

- 공모사업 중심 생태계에 대한 높은 피로도와 한계 체감도
 - 공모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문화예술교육 환경은 생태계 악화에 영향을 미침.
- 문화예술교육 유료화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자생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유료화, 기획/행정 인력 인건비 인정, 민간지원 활성화 방안 등의 필요성이 제시됨.
- 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의 태동 관찰
 - 문화예술교육 경험자가 축적됨에 따라 수요 및 인식이 높아져, 식상한 프로그램이나 자기 계발이 없는 예술강사의 경우, 시장에서 도태됨. 이를 시장 형성의 태동으로 해석함.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정체기

- 경제활동으로서 낮은 매력도로 인한 인력 유출
 - 공모사업 의존도가 높고, 시장 형성이 미비한 문화예술교육의 환경에서, 기획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되지 않아 경제활동으로서의 매력도는 낮게 평가됨.
- 타 부처 및 분야로 전향 확대
 - 반면, 문화예술교육 기획 역량 수요가 있는 타 부처 및 영역(도시재생, 복지, 평생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 등)의 경우, 기획 및 행정 인건비가 제공되어 인력과 단체의 분산 및 흡수가 관찰됨.
- 기획자 양성의 약화
 - 지역 분권화 이후, 광역 단위의 공모사업 중심 운영이 강화되어 기획자 양성이 약화됨.

□ 광역센터 역할 개선 기대

- 기초 단위 현장 이해도 증진 필요
 - 광역 단위 활동에 필요한 인력 자원 발굴 목적이 중심되기보다, 기초 단위 생활권 밀착사업 발굴 및 활성화 지원 필요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중앙의 지원사업 전달역할은 지양하고, 기초 단위 중심 단체 간 연계, 협력 촉진 역할의 확대 필요. 기초 단위 지역 내 ‘토론의 장’ 제공 필요

2.3.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 기초 거점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경험

○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 주도로 지역 정체성 발견 경험

- ‘기초 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공모사업의 주어진 틀에 따른 기획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 기획, 탐색, 참여자 모집, 지역의 이슈 논의하는 사업 운영이 가능하여 지역 정체성 발견 기회 생성
- 기초 거점 구축 지원사업이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보편화 되어 있는 공모 지원사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생활권 중심 지역이 주축이 되어 그 과정이 현장에 밀착하여 과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탐색, 함께할 사람을 모으는 일, 그리고 기획부터 실행 전 과정에서 지역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경험을 갖게됨. (G1)

○ 지역 내 분야 및 영역별 협력 주체 발굴, 연계, 소통 및 협의 가능 구조

- 거점/허브라는 기초 단위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가능해짐.
- 기초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성인 등 영역 및 대상별 단체를 연계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맡은 허브(hub)가 있다는 것에 대한 편의성,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됨.
- 예를 들어, 미디어센터, 시민 사회적경제 단체, 문화의 집, 생활문화단체 등과 문화예술교육 활동 주체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이 유용함.

○ 거점 플랫폼의 유용성 인식과 참여 주체 간 신뢰관계 형성

- 문화예술교육 단체, 타 분야 협력 주체, 거점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이 가능하여 상호 이해도 신장과 신뢰관계 형성을 경험

‘부처 간’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의 기관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짝 뜨고 원하는 그 분야 장르를 선택을 하고 저희가 낸 기획안이 훌륭하면, 그게 아르페에서 오케이가 되면 매칭이 되는 구조고 그러면 그다음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 기관과 강사의 합이 좋으면 그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지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빼격거릴 수도 있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주고 ‘두 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기초 단위 [거점 구축사업]에서 했을 때 가능했던 점은 제가 센터장님 만나서 어떡세요. 어떤 게 필요하세요. 선생님은 어떡세요. 그럼 어떤 선생님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예산이 지금 여기에 요만큼 남았는데 이걸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이 소통이 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 개개별 소통이 가능하고 어떤 컨디션인지 알고.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하면서 이 기초 거점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허브로서 했던 역할은 이 거버넌스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센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지도와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하는 곳이 허브인 거고 그거를 끝없이 연결을 해 주고 상태를 파악하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거점의 역할로] 자원과 공존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E3)

끄덕거리거나 실수를 하고 서툴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향후 하는 결과를 도출해가는 그 과정들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거라는 느낌이 '아, 이게 기초 거점이 해야 할 일이구나,' 뭔가 정답을 찾아가는 느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이 기초 거점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색깔이 드러났다는 거. 저는 다른 [공모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을 했을 때는 거의 비슷했거든요. (G1)

□ 향후 기초 단위 거점센터의 역할과 기능

- 기초 거점의 주요 역할로 지역 자원조사, 협의체 구성, 사후 정책기반 시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그리고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정책 수립 필요내용 전달 등을 꼽을 수 있음.
- 매개 및 자원 연결 중심의 중간 지원조직 역할 중요
 - 지역의 인력, 예산, 수요를 연계하는 매개 기능 이행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연결, 유통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
 - 기초 단위 자원조사, 협의체 구성, 정책기반 시범 프로그램 설계, 중장기 방안 세부 내용 전달 등이 기초 거점의 주요 역할로 인식
- 다양성을 지향하며, 기초 거점의 핵심은 지역별로 인력, 예산, 자원환경, 사회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결과물을 통해 각각의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 단위 네트워크 활성화를 촉진시키는데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기초 거점의 역할 중, 예술가와 예술 강사를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에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더욱 의미 있었던 점은 예술가와 예술 강사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고민의 기회와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한 것이었음. (F3)
- 생활권(예: 읍, 면, 동) 단위 소외지역에 '위성 거점/분점'을 조성하여 네트워크 형성
 - 농촌생활권과 같은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경우, 생활권 밀착 활동 체계 조성 및 지원 필요
-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정책 목표 탐색 및 설정에 기여
 - 기초 단위 네트워크 활성화 촉진 및 생태계 조성 역할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이때, 각기 다른 환경(인력, 예산, 사회·문화적 자본 등)을 고려한 실험 및 연구기능 강조 필요
- 더불어 자원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조성 및 확대 이 두 가지 역학의 상호연결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기초 거점 기능에서 정보의 수집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저희가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는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을 찾자고 하니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찾기도 너무 어렵고, 대신 [...]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이 아닌 지역의 문화예술 유관 기관들이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도 그들을 필요로 하고 해서 서로의 요구 조건들을 좀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기초 거점] 센터가 해야 될 일이지...

[...] 정보만 모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이 정보들이 좀 효과적으로 모이고 실제 실효성 있는 정보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3년 동안 했어도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계속 움직이는 정보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시작할 수 있는 발화점을 만드는 게 이제 센터에서 거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가 생긴다 [...] 한다면 그 공룡이라는 표현이, 그 센터가 다 디자인하고 다 기획하고 이 프로그램 여기에 이 프로그램 저기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잘하고 있네, 그럼 여기 이런 지원이 더 필요할까를 볼 수 있는 곳이 센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역량이 있는 곳을 어떻게 변별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행정상의 유연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 단위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수정이나 바로 투입이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상 절차가 엄청 많다 보면 그게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 그런 유연함이 있어야 하는 곳이 [기초 거점] 센터여야 하는 것 같아요. (E3)

□ 거점센터의 효과와 필요성

○ 공간 발굴 및 상시운영 공간 확보

- 공간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실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교육자의 역량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또한, 주민, 예술가, 강사 등 만남의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교육의 실험실 기능의 강화 가능
- 상시운영 가능 공간이 확보될 경우,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공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릴 수 있음. 그만큼 공간의 중요성은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이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시민들의 눈에 쉽게 보이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다만, 전용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마다 차이가 있을 것임. 예를 들어, 도서관이 많은 지역, 또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문화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진행이 가능한 곳을 발굴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접근이라고 사료됨. (F1)

○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기회 제공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진행 가능 공간 발굴 및 협력 수월

○ 거점센터의 기능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공신력 축적 용이

○ 다양한 협력관계 형성 및 타 영역 및 분야 단체 유입 및 연계 가능

- 협력과 네트워크 운영을 토대로 형성된 신뢰도와 공신력을 바탕으로 협력 지면 확대 및

파급력 기대할 수 있음.

이제 [협력기관] 센터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데 했던 것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좋다는 건 알겠고 그리고 좋은 거를 찾고 싶을 때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여기서 연결돼서 그걸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 허브[거점]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E3)

저는 그 거점이라는 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결과값이 어떤 참여자 수, 프로그램 수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키워나가는 센터이기보다는, 거점이기보다는,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역할로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들을 수집을 하고 실험을 하게 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

거기에서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연대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하면서 그게 이제 네트워크로 확장이 되고... (E1)

2.3.3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분야 인증제도 도입

□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과 기대하는 정책 방향성

○ 현장 자율성과 장기적인 사업 운영 보장 가능성 중요

- 현장에 부여하는 자율성은 문화예술 인프라 취약지역을 포함한 지역별 편차와 특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소규모 지자체나 농촌지역과 같이 문화예술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면 인증하는 방안으로 시행할 필요 있음. (G3) 즉, 지역별 편차와 특성을 고려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있어 프로그램 위주 지원사업 탈피가 필요한 시기로 판단되어, 현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함.

- 프로그램 중심 지원제도의 경우, 현장에 건강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적음. 현장에 축적되는 것이 있도록 젊은 문화예술교육가들과 기성 인력들이 함께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수립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함. (B1, C2)
- 인증제도를 통해 현장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지향점을 두어야 함.

공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사례 개발, 공유]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1년 차 공모로 해서 따오고 그 예산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술 단체들은 지역에 공모해 주는 지원 기관에 목 매야 되고, 그게 지원이, 공모가 생태계 죽이는 거였더라고요, 한참 지나고 보니. (B1)

○ 인증제도를 통한 단체의 위상, 소속감, 정체성 증진 기대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앙차원의 전문성 및 역량 인정을 통해 기초지자체를 설득하고자 하는 전략에 대해 일면 이해 가능
- 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문화예술교육의 위상 신장 기대

사람이나 단체 자체가 지역 안에서, [...] 좀 인정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라도 '야,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 주면 확실히 다르긴 하겠죠.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그다음 단계로서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 이제 이런 정도는 충분히 생각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가점 부여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근데, 다만 약간 고민이 되는 것은 아까 그 조례라든지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쨌든 정치적 코드로 계속 움직이는 힘이 [소규모 지방행정에서는] 원체 강하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좀 이제 끌고 가줄 수 있는 어딘가의 힘에 대한 어떤 갈구가 되게 큰 거예요. (D1)

○ 간접지원 고려 시, 민간지원 활성화 방안도 필요

-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현재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간접지원 방안을 고려한다면, 수익사업을 통한 단체의 예산 확보가 함께 열려야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 인증제도의 브랜드화로 거버넌스 구성과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통한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가능성
- 일례로 전주의 경우, 교육관련 조직명 앞에 '야호'를 붙임으로써 교육 네트워크 조직을 시도함. 이는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다른 접경 영역 또는 분야(예: 예술교육)와 협력에도 적용되는 브랜딩 전략으로 분야 간 거버넌스 구성과 브랜드 이미지 확장에도 적용됨.

○ 인증 유지 기간은 2년, 3년이 가장 많이 나타남. 단, 매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취합됨.

이제 뭔가 인증 이렇게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도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어떤 위상이 확 올라가 부여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지역에 문화예술교육 하려면 그냥 여기에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모이게 하는 그런 큰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어쨌든 평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그 평가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디테일하고 어렵고 또 불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과다하게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 오히려 그런 기준이나 자격을 맞추기에 급급해서 뭔가 더 어려워지는, 실제로 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E1)

□ 인증제도에 대한 우려와 간접지원의 한계

○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및 현장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존재

- 인증의 명확한 혜택이 없다면, 참여 동기가 미약함. 오히려 지표에 따른 정량적 평가로 자율성 보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고, 타 지원사업과 차별성 없는 지원책 양산 우려가 있음.

- 인증제도로 지난 3년간 시행됐던 ‘기초 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성과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오히려 종전 사업(거점 구축 지원)의 정착 후, 인증제도로 넘어가는 것이 더욱 안정적일 것으로 사료됨. (A1, D2)
-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는 소규모 지자체 행정구조와 기금의 지방이양으로 인증제도가 기초 단위 현장에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명확한 혜택이 없다면 인증을 받아야 할 동기가 미약함. 특히, 인증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에 대비 혜택이 미약할 것이 우려됨.

...인력 개발, 워크숍, 각 [지역]별 인증받은 기관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이 정도인데 그것이 과연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이후로 계속해서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그게 원동력이든, 어떤 일말의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으로는 힘들다 그렇게 되려면 차라리 메리트가 있는 이런 [...] 인증을 받은 기관만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확보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타의 프로그램 딱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발동하고 또 혹은 발굴하고 인력들을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형들이, 기획자들이 재미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안 된다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 인증제도만으로 과연 목적하던 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점이 하나가 있고... (C1)

현장 입장에서는 뭔가를 인증하고 평가한다는 게, 우선 현장에서 ‘저걸 하는 목적이 뭐지?’가 되게 고민이 되고, 그런데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걸 순수하게 평가하고 그걸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 인증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또 창조를 해야되는 구조더라고요. 지금까지 평가들이, 그런 의미들을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피로도도 들어와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구조가 그냥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4)

기존의 기획자들이 떠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획자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없어지는 거죠. 계속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야지 기획이 풍성해지고 아이디어가 풍성해지고 훨씬 더 실행도 풍성해지는데 사실 기획이 있어야지 실행이 가능한 건데 기획 없이 실행만 하라는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움직여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 생각하는 단계에 어떻게 가치를 주고 어떻게 인증을 하고 이게 될 건가 이거는 대단히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도 엄청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 문화예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역인 그러니까 기획 단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문화예술의 본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근에는 공모사업이나 서울문화재단이든 또 다른 데에서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행 단계에 대한 예산지원도 되지만 기획단계에 대한 일종의 연구단계에 대한 예산지원도 지금은 하고 있는 걸로, [...] 조금씩 인식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문화예술교육 기획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무슨 무슨 중이 크게 의미는 없는 거 같아요.(E2)

○ 인증제도가 어떤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 고려되는 것인지 그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큼.

- 방향성에 대한 딜레마를 인지할 필요가 있음.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확산이 목적인지, ‘거점’ 기관을 인증하고자 하는 것인지 인증제 도입의 목적이 불명확한 것이 우려됨.
- 문화예술교육 생활권 보급의 지속성과 안정화가 문제라면, 기존에 시행됐던 거점 사업의 정착된 후에 인증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욱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함.

-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인증은 받은 곳만 사업이 가능함. 이러한 경우, 직접 지원보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심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만약, 심사요건을 강화하여 이행할 경우, 소수의 문화예술교육 기관과 단체가 인증을 받게 됨. 그렇다면 소수 인증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같은 직접지원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지원하여 어떤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불명확함.

...만약에 여러 단체들 실질적으로 이걸 좀 더 확장 시키고 기초 거점이라는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문턱을 낮추고 많은 단체들에게도 이걸 주겠다? 그러면 과연 이 인증제도에 대한 아까 말했던 그 메리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을 때의 위상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 [단위 인증제] 사업이 결국 누구한테 좀 가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A3)

...기초 단위의 거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개가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거점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초 단위 안에서 중심을 잡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거점이라는 개념이 [인증제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기초 단위에서 이런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한 멤버로서 인증을 하는 건지. (A2)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단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필요하고...' 그 [제도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너무 지엽적인 질문이 저는 약간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몇 년 후 요건 대한, 사람은 몇 명, 인력은 몇 명이 갖춰져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맞나 싶어서. (A1)

○ 지역 내 서로 협력이 아닌 경쟁하는 구조 발생에 대한 우려

-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가 이행될 경우, 기초 단위 소규모 민간단체 등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음. (A3, E2)
- 인증을 얻기 위해 지역 내 협력보다 상호 경쟁이 확산될 것이 우려됨.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그래서 결국은 못하는 사람을 패배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까지도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함께 나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자 [...] 근데 외부에서 인증이 되거나 이런 메커니즘이 만들지면 그게 작동이 되면 지역 안에서는 계속 서로 경쟁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광역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기초] 단위의 기반을 인정하는 게, 우리 모두 나중에 모두 [...]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만드는 거다 라고 하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은데 결국은 계속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인정에서 도태돼야, 배제되어야 되는 이 구조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초 단위] 지역은 좀 더 황폐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이 황폐화되지 않는, 지역 생태계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계속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해서 함께 협력하고 협의하고 그런 구조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이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E2)

□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관점에 본 간접지원의 한계

-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와 단체 운영을 위한 기초 급여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함께 마련되거나 수익 제한이 해제될 필요가 있음. 이로써 간접지원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인증제도 도입만으로 위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움.

- 공모지원사업을 통한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재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자율성이 신장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수익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비영리성을 갖춘, 다시 말해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예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환류되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갖춘 사업체와 법인에서 문화예술교육 수강료를 적정 수준에서 받는다면, 다양한 간접지원 방안의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음.

- 바우처, 답례품으로 문화예술교육 수강 패스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시행 초기인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참여에 소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D2)

-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볼 때, 민간지원 활성화 방안 필요

-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기관 대상 민간지원 또는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나무운동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부족은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와 단체가 다른 영역으로 흡수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 도시재생, 복지, 교육부, 농식품부 등 예산지원이 있는 곳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요가 있을 경우, 더불어 이러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예산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생을 위한 새로운 활로 모색 차원에서 타부처 사업으로 흡수되어 활동하게 됨.

- 이는 중앙부처에서 그간 투자 및 지원해온 내용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현재 한계와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인증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유형

- 인증 단체 및 기관의 규모에 따른 딜레마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다시 말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및 돌봄기관 등 비문화예술 주체에도 인증을 확대 수여한다는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인증의 신뢰도와 권위, 수혜 주체의 자부심 등을 고려할 때, 인증을 받기 위한 문턱은 오히려 높을 필요가 있음. (D3, G1, G2, F1)

- 유사하게 지역별 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을 주는 방식이 더 유의하지 않을까 생각함.

- 모범 음식점처럼 다건으로 수여하는 방식은 평가방식이나 사후관리 규모,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G2, D2)

저는 지원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인증이라는 것이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뭔가 권위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은 넓게 해주되, 인증은 받기 어려워야지 뭔가 인증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인증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나름대로 이제 인증을 받고 그것이 그 단체든 어디의 기반이든 어떤 자부심이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뭔가가 있으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G2)

- 제시된 인증 유형으로 공간형, 콘텐츠(프로그램)형, 네트워크형, 문화예술 취약지역(농촌)형임. 단, 네트워크의 경우, 거점 기능을 염두에 둔 인증제도라면 공통요건 또는 필수요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론으로 제기됨.
- 문화예술교육 “협력기관”을 별도로 인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F4)
 - 비문화예술시설, 타부처 소속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인증 유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자 배치를 지원해줄 수 있음. 이는 해당 기관의 수요와도 부합함.
 -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사업과 연계하여 “협력기관” 인증 시설 우선 배치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실무자의 수요나 공감대는 있으나, 기관장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특히 예산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이 실익이 가시적이지 않다면 한계가 예상됨.

□ 선정 요건과 평가 내용 제시

- 통합적인 역량 증명이 필요함. 즉, 과정 중심의 평가가 중요하며, 동시에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요건들이 포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면, 네트워킹 진행,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진행, 소외지역 방문 등에 대한 횟수를 중심으로 실제 이행한 것이 심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 회의에 모인 인원이 몇 명인지는 중요도가 비교적 낮을 수 있음.
 - 네트워크 및 협력 수행 이력 평가 시, 네트워크 소속 단체에 대한 것과 함께, 참여 조직과 주체의 역할 구분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평가대상이 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 성인, 장애인 등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 등도 심사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인력의 전문성 외에도,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파악하여 지역 내 사회 네트워크 역량도 평가 고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공간들을 보유한 이런 다양한 시설들과의 거버넌스가 있고 혹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과의 거버넌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MOU라든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의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경험의 축적이다 보니까... (F1)

- 인증 후 사업계획서가 심사에 포함되어야 함.
 - 인증 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기획력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또한, 인증의 갱신 또는 재평가 시, 계획서 이행 수준이 평가의 대상이나 기준으로 활용 가능함.
 - 유사하게 인증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의 업력을 기재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따른 유형별 평가지표가 필요함.
- 신청 단체 또는 기관에 속한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의 요건으로 일정 기간(예: 5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또는 거주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사만을 포함시킬 경우, 전문인력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인증제도에 서 소외될 수 있음.
 - 거주 기간이나 지역 내 활동 기간을 심사하는 것은 지역 내 사회적 네트워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 가능함.
- 인증제도의 평가지표가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이 활용하는 활동 기준 기능을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표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형식적으로라도 회의나 네트워크를 진행하여 이 것이 추후 체화되어 거버넌스의 실제적 기반 조성의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지표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가이드 제작이 가능함.
- 인증을 위해 확고한 기준이나 필요조건들이 명시되어야 함.
 - 인증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필요조건을 제시하여 인증의 가치와 상징성을 공표할 필요 있음.
 - 인증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의무 명시가 중요한 이유는 인증하는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인증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기 때문임. 또한, 인증의 가치와 상징 성과도 연관성이 있음.

저희가 어떻게 서울의 ○○구하고 ○○하고 똑같은 지표를 놓고 인원, 실적, 몇 번 모였나요, 이거 갖고 평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가 낼 수 있는 건 우리는 그냥 촌스러운데 맨날 모여가지고 투닥투닥 하는 게 회의록이야... [...]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게 우습겠지만 그분들이 6개월, 7개월 동안 기획 회의를 매주 했어요. 그리고 12월에 한다는 퍼포먼스가 '펼치 똥 까기'였어요.

[...] 그분들은 계속 그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서의 두려움, 그리고 사회와 단절되고 뭔가 뒤처지는 거에 대한, 독박 육아에 대한 그런 여성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걸 이제 문화예술교육이나 치유나 돌봄에 관한 얘기들을 막 해요. 하고 나서 맨 마지막 퍼포먼스를 펼치 똥을 까다니깐요. [...]

거점은 아까 센터장님 얘기한 것처럼 결국 현장에 있는 기획자들이 제일 잘 알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MOU를 체결을 하고 그 횟수나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사실은 저희 같은 작은 시골의 거점들에서는 깊게 들어가고 넓게 퍼져가는 그거를, 아직은 저희가 수치나 그런 부분을 그럴싸하게 표현을 못 하지만 그거를 인정해주는,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는,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후자라고 그러지 않는 그 각각의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만들어주자 같아요. (G1)

○ 인증제도 도입 시, 거점 기능을 수반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초 단위 거점 활동에 대한 역할 내용을 실천 내용으로 명시하여 신청 시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제안함.

- 예를 들어 지역 내 네트워킹, 인력 재교육 및 워크숍 진행 등을 필수 이행 요소로 배치하면, 실행 시 참여자 설득의 과정이 수월할 수 있음.
- 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조항을 참조할 수 있음.

□ 인증 기관 및 단체를 위한 혜택

○ 인증에 따른 혜택의 중요성 강조

- 이는 인증 신청에 큰 동기로 작동할 것이고, 비문화예술단체의 경우 단체장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제공 혜택이 즉각적으로 인증기관 및 단체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함.

○ 인증 유지 적정 기간으로 3년

○ 인증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공모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 컨설팅 제공과 재교육 기회 제공

○ 수익계약 한도 등을 상향하거나, 인증 기관/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됨.

○ 타지역 인증 단체/기관 인력과 교류 및 네트워크 기회 제공, 인증기관 간 교류 정례화

- 객관화된 시각으로 운영사업을 볼 수 있으며, 예술강사 간 프로그램 교류 가능함. 또한, 소속감 형성으로 활동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 있음.

○ 대국민 문화예술교육 홍보 시, 인증 단체 또는 기관 활용

- 진흥원 홈페이지에 인증기관, 인증단체 리스트와 링크 포스팅

이제 자기 성장이라든지 밖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지원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 비슷한 데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갇혀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아까 교류나 이런 자리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그거 외에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 쉬면서 연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지역에 가서 교류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 그래서 자꾸 좀 자극도 받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D1)

○○○처럼 이렇게 요즘 [정책]동향을 막 공부를 해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지만, 최근에 신생 단체들의 경우는 자기 사업하기가 되게 바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교류하려고 하거나 그게 약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내 사업하기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유인책으로 [...] 현장에 있는 단체들끼리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이 인증제도 안에서의 간접지원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거를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냥 누가 이렇게 끌어주지 않으면 단체들끼리 그냥 모여서 뭘 하는 거 자체를 아예 그냥 시도조차 안 하더라고요. (A1)

3. 델파이조사(Delphi Method)¹⁰⁾

3.1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계

3.1.1 전문가 델파이조사 수행(연구) 방법

- 본 과업은 델파이 분석기법 중, 전통적인 정책 델파이 기법중, 수정 델파이 기법(modified Delphi technique)을 이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표별 가중치(중요도)는 계층화 분석(이하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수행함.
- 구체적으로 본 델파이조사는 2회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회차별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차 조사에서는 평가지표(안)에 대한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집행 및 수행기관 종사자, 연구 종사자)의 수렴함.
 -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수렴된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간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도출을 위한 AHP 분석을 실시함.
- 2차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각 평가지표의 적절성(타당성)을 가늠하고, 최종적으로 평가지표(범주)에 대한 AHP 분석을 수행해 가중치를 도출하여 지표를 체계화(지표별 중요도 반영)함.

3.1.2 조사 참여자(전문가)의 선정

- 조사 참여자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함.
- 조사 기간은 '23년 1월 31일~2월 10일(약 2주) 동안 총 2회에 걸쳐 조사·수행함.
-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5명임. 1차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54명이었으나 불성실한 응답 및 미응답 4건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50건으로 종결됨.
- 델파이조사에서 설정한 평가지표(안)는 기 조사된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도출된 지표로 구성함.

3.1.3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 구성

□ 1차 설문지 구성

- 기 추진된 설문조사(인식조사) 및 FGI를 토대로 설정된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한 적

10) 본 델파이조사 설계 및 분석은 김진웅 박사님(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학과 강사)의 참여로 함께 진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절성(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델파이 기법은 수정 델파이 기법(modified Delphi technique)으로
 앞선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충분한 전문가의 정성/정량 의견을 취합했기 때문임.

- 더불어 평가지표(안)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 설명과 이유를 청취하기 위해
 12개의 평가지표별 평가 이유에 대한 열린 문항을 배치함.

□ 2차 설문지 구성

- 1차 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평가지표(안)에 대한 적절성(타당성)을 조율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함.
- 2차 설문에서도 적절성(타당성) 합의 도출과정을 위해 제시된 항목별 1차 평균값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그리고 미래 중요도 평가 이유 및 추가 의견을 정성 문항으로
 설계하여 질문함.
- 평가지표별 가중치 산출을 위해 12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상위 범주 및 각 범주별 세부 평
 가지표별 쌍대비교를 통한 중요도를 산출함.

〈표 IV-14〉 델파이조사 개요

회차	수집 기간	문항 구성
1차 조사	2023.01.31. ~ 2023.0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안)의 적절성(타당성) • 정량문항 응답에 대한 이유와 개선 제안 의견
2차 조사	2023.02.07. ~ 2023.0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한 중요도에 대한 동의 정도 • 정량문항 응답에 대한 이유와 미래 중요도 추가 의견 •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범주 간, 각 범주 내 평가지표별 중요도

3.2. 전문가 델파이조사 분석

3.2.1 델파이조사 참여자 현황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으로서 인증제도에 활용 가능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관계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총 15명의 의견을 대상으로 분석함.
- 집단별로 집행 및 수행기관 종사자 11명(43.8%), 연구 종사자 4명(34.0%), 상위 정책기관 종사자 6명(12.0%)으로 집계됨.
- 전문가들의 평균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 기간은 13.2년으로 나타남

〈표 IV-15〉 델파이조사 참여자 현황

구분		항목	퍼센트
집단(15명)	집행 및 수행기관 종사자	11	73.3%
	연구 종사자	4	26.7%
성별(15명)	남	6	40.0%
	여	9	60.0%
연령대(15명)	30대	4	26.7%
	40대	6	40.0%
	50대	5	33.3%
	60대 이상	0	—
평균 종사 기간(15명)			13.2년

3.2.2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1) 델파이조사 1차 분석 결과

□ 델파이조사 1차 정량분석 결과

- 1차 델파이조사에 따른 평가지표별 적절성(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16〉과 같음.
 - 1차 델파이조사 결과는 2차 조사에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 이용되므로 1차 델파이조사의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는 2차 델파이 정량분석 결과 부분에서 후술함.
- 평가지표별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내용 타당도(C.V.R.; Content Validity Ratio)¹¹⁾를 살펴본 결과, 2개의 항목이 기준 수렴치(15명 기준, 0.49)¹²⁾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남.

- 평가지표 중, [Ⅱ-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Ⅲ-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의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6〉 1차 델파이조사 결과

범주	평가지표 항목	적절성(타당성)		CVR
		점수 (표준편차)	순위	
Ⅰ. 단체 실적 및 역량	Ⅰ-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5.93 (±0.96)	7	0.87
	Ⅰ-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6.07 (±0.88)	3	0.87
	Ⅰ-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6.00 (±0.93)	5	0.87
Ⅱ. 공간	Ⅱ-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5.67 (±1.59)	10	0.73
	Ⅱ-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5.2 (±2.08)	12	0.47
	Ⅱ-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5.8 (±1.15)	9	0.73
Ⅲ. 전문인력	Ⅲ-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	5.33 (±1.68)	11	0.47
	Ⅲ-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	6.07 (±0.88)	3	0.87
	Ⅲ-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연계 활용 역량	6.2 (±0.77)	1	0.87
Ⅳ. 네트워크	Ⅳ-1.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6.13 (±0.83)	2	1.00
	Ⅳ-2.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 보유 여부	5.87 (±0.64)	8	1.00
V. 정성평가	V-1.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포함	6.00 (±1.07)	5	0.73

□ 델파이조사 1차 정성분석 결과

- 1차 델파이조사에서 수집된 평가지표별 상세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Ⅰ-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평가 시 우려되는 지점으로 기획 역량 평가의 불명확성을 언급함. 이에 전문성 평가를 자격증 유무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문

11) $CVR = \frac{n_e - (N/2)}{N/2}$, n_e = 총 응답자 중, 긍정(5, 동의함:6, 매우 동의함:7) 응답자의 수, N = 총 응답자의 수

12) Ayre C and Scally AJ (2014) Critical values for Lawshe's content validity ratio: revisiting the original methods of calcula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7(1): 79-86.

성이 판별될 수 있는 세부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함.

- ‘[Ⅱ-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평가 지표에 대하여 공통지표 대신 유형별 지표에 포함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라는 기타 의견이 제시됨. ‘거점’이 공간 중심 개념이 아니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에서의 정의에 근거할 때, 공간 활용 실적은 불필요한 것으로 본 것임.
- 또한, ‘[Ⅱ-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평가지표의 중요성에는 동의하나, 해당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평가의 기준이 불명확함이 지적됨.
 - 지역 내 다양한 자원 간 연결할 수 있는 역량 중 하나로서, 공간자원 연계 역량 역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임.
- ‘[Ⅲ-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크게 ‘전문인력’의 대상과 기준에 대한 의견과 ‘고용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논의 대상이 됨.
 - ‘전문인력’에 대하여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사와 같은 자격증 소지만으로 전문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
 - 오히려 문항에서 문화예술교육사와 함께 예시로 제시되었던 ‘현장 경력 최소 3년’이 더욱 적합한 기준이라는 추가 의견이 수집됨.
 - 전문인력의 고용 형태를 ‘자기 고용(대표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사업계약’ 형태의 비정규 고용도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Ⅲ-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을 평가할 때, 전문인력의 발굴, 양성, 매개를 포함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수집됨.
 - 특히,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이웃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협력, 연계해야 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임.
- ‘[Ⅳ-2]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 보유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상세한 내용의 수집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집됨.
 - 예로, 협력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과 컨셉 등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인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정해진 사업의 형식에 따른 참여 실적인지 구분하여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임.

2) 델파이조사 2차 분석 결과

□ 델파이조사 2차 정량분석 결과

- 1차, 2차 델파이 결과에 대한 의견 합의를 통한 최종결과는 다음 <표 IV-17>과 같음.

- 이때 적절성(타당성) 증감(a)은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와 최종 수렴 점수와의 변화량(점수)을 의미(▼는 1차 델파이 결과에 비해 최종 수렴 점수가 감소, ▲는 증가)하며 점수(b)는 1, 2차 델파이를 통해 최종 수렴된 종합 점수를 의미함.

○ [I-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6.00)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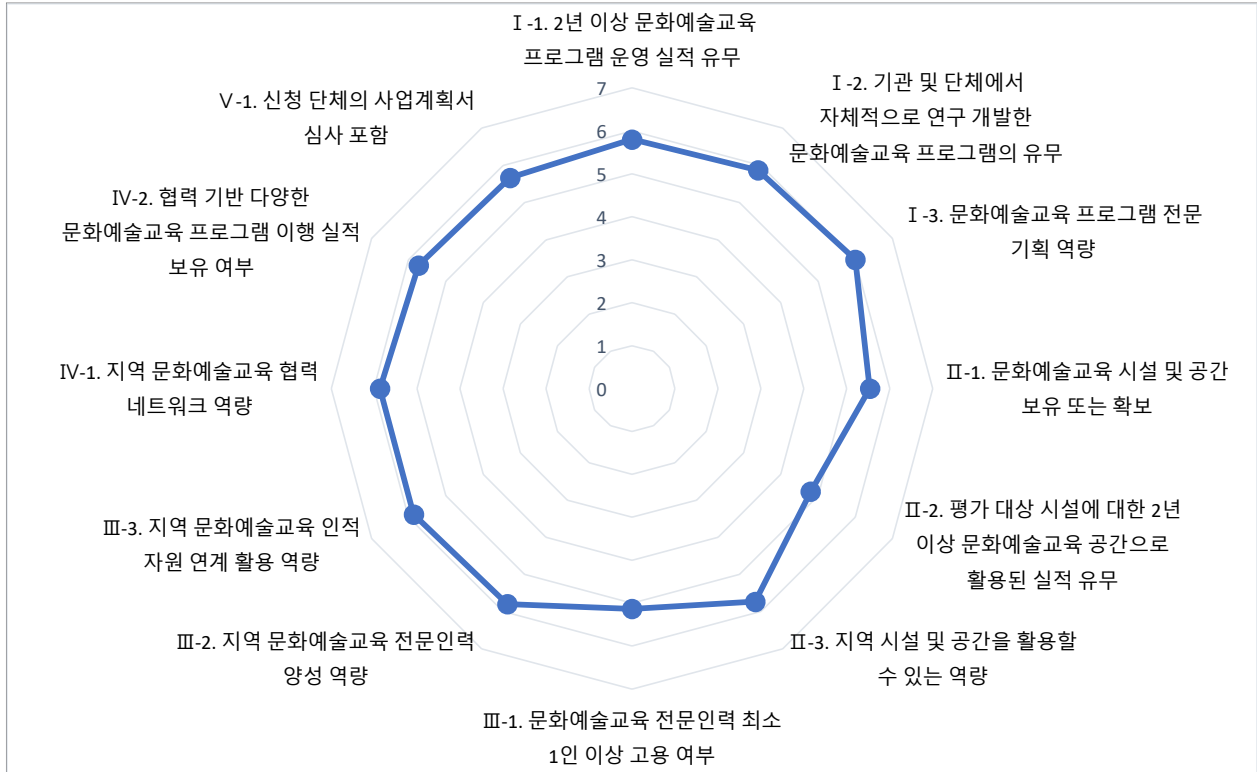
- 다음으로 [I-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와 [Ⅲ-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연계 활용 역량 및 [IV-1]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5.87), [I-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와 [Ⅲ-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5.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Ⅱ-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4.80)가 가장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Ⅲ-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5.13)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Ⅱ-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5.53), [V-1]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포함(5.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7〉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산출된 평가지표별 적절성(타당성) 분석 결과

범주	평가지표 항목	적절성(타당성)			
		적절성 증감	점수 (표준편차)	순위	순위 변동
I. 단체 실적 및 역량	I-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0.13	5.80 (±1.08)	5	▲2
	I-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0.20	5.87 (±0.99)	2	▲1
	I-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	6.00 (±0.93)	1	▲4
II. 공간	II-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0.13	5.53 (±1.6)	10	-
	II-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0.40	4.8 (±1.82)	12	-
	II-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0.07	5.73 (±1.1)	7	▲2
III. 전문인력	III-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	▼0.20	5.13 (±1.64)	11	-
	III-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	▼0.27	5.80 (±1.15)	5	▼2
	III-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연계 활용 역량	▼0.33	5.87 (±1.06)	2	▼1
IV. 네트워크	IV-1.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0.27	5.87 (±1.06)	2	-
	IV-2.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 보유 여부	▼0.13	5.73 (±0.70)	7	▲1
V. 정성평가	V-1.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포함	▼0.33	5.67 (±1.45)	9	▼4



[그림 IV-3] 평가지표별 델파이조사 정량분석 종합 결과 시각화

□ 델파이조사 2차 정성분석 결과

- 2차 델파이조사에서 수집된 평가지표별 상세의견은 1차 델파이조사 정량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통 미만의 동의의사를 표시한 응답자가 작성한 내용을 수집, 분석함.
 - 이에 2차 델파이조사 정량분석 결과 순위가 변동된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I-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평가지표의 타당성은 2단계 순위 상향 변화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평가함으로써 단체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되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집됨.
 - 또한,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단체 또는 기관을 인증하게 될 경우, 2년간의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 평가대상 기관 및 단체의 특성과 역량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5년 이상의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I-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지표의 경우, 1단계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공모형식에 따른 반복적인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스크리닝 필요성이 제기됨. 평가대상 기관 및 단체의 기획 역량이 드러나는 프로그램 유무를 판단해야 함이 재차 강조됨.
- ‘[I-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은 4단계 순위가 상향 변동되었으나, 추가 의견은 수집되지 않음.

- ‘[Ⅱ-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평가지표의 경우, 2계단 순위 상승 변화하였고, 평가대상 단체 또는 기관의 공간 보유 여부를 떠나 지역 내 협력역량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간자원을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다양한 공간 및 장소를 문화예술교육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전문성과 기획력, 교육적 상상력을 요하는 부분으로서 해당 지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의견도 수집됨.
 - 지표 내용과 관련하여 ‘[Ⅱ-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평가지표와 중복되는 지점이 없도록 워딩 정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Ⅱ-1]에서 “확보”까지 확대하여 평가한다면, [Ⅱ-3]이 평가하고자 하는 범위와 중복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Ⅲ-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연계 활용 역량’ 평가지표의 경우, 1순위 하향 변화하였음.
 - 해당 지표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기는 하지만, 인적자원 연계 활용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해당 지표에 대한 배점이 높을 경우, 지역 간 특성과 인프라 분포 차이에 따라 갈등의 소지를 우려하여 지표 적절성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됨.
- ‘[Ⅳ-2]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 보유 여부’는 1단계 상승하였는데, 그 이유로 ‘[Ⅳ-1].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지표와 유사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수집됨.
 - 단, 협력의 범주를 어디까지 상정할 것인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음.
- ‘[Ⅴ-1]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포함’의 경우, 4단계 순위가 하향 변화되었음.
 - 해당 지표에서 지칭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응답자의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남.
 -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서로 해석하거나, 과거 기 추진된 사업계획서로 해석한 경우,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 반면,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중요성에 공감하며, 해당 사업계획서에 지역 실태, 발전 방향, 거점의 기능과 역할, 비전, 전략이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중요한 평가지표라는 응답이 복수 확인됨.

□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추가 의견조사

- 지자체 재정자원 확보 및 자체 운영기반 마련과 같은 지속성 평가 측면에서 ‘재원 조성’ 관련 평가지표가 추가가 고려되어야 함.

- 기초 단위 지역별 환경과 인구 특성,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현황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이에 공통지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현장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동료평가 방안 수립으로 해당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평가 또는 평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함.
- 인증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엄격한 인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3.2.3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정

○ 집행 및 수행기관 종사자(A)와 연구 종사자(B) 간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Welch's T 검정을 시행한 결과¹³⁾, 1개의 평가지표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Ⅱ-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실무자 집단이 연구자 집단보다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18〉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실무자(A)와 연구자(B) 간 Welch's T 분석 결과

범주	평가지표 항목	적절성(타당성)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평균 차이 (A-B)	표준 오차 차이	크기
Ⅰ. 단체 실적 및 역량	Ⅰ-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0.409	0.646	
	Ⅰ-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0.523	0.582	
	Ⅰ-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0.341	0.553	
Ⅱ. 공간	Ⅱ-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0.727	0.947	
	Ⅱ-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1.091	1.061	
	Ⅱ-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1.341*	0.553	A>B
Ⅲ. 전문인력	Ⅲ-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	0.864	0.965	
	Ⅲ-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	-0.614	0.673	
	Ⅲ-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연계 활용 역량	0.159	0.641	
Ⅳ. 네트워크	Ⅳ-1.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0.159	0.641	
	Ⅳ-2.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 보유 여부	0.318	0.417	
V. 정성평가	V-1.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포함	0.568	0.863	

† : $p < .10$, * : $p < .05$

13) 총 응답자의 수가 15명으로 모수적 추정을 위한 통상적 수준(최소 데이터 30개 미만)에 적합하지 않아 비모수적 검정기법 중, T-test에 대응하는 Welch's T 검정을 시행함.

3.2.4 AHP 분석 결과

- 각 평가지표에 대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Consistency Ratio) 값이 기준 수렴치인 0.2 이하로 나타나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범주 수준에서는 IV. 네트워크(0.29)가 가장 가중치가 높게 산출되었음.
 - 다음으로 I. 단체 실적 및 역량화(0.28), III. 전문인력(0.22), V. 정성평가(0.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평가지표 중, II. 공간(0.10)의 가장 가중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범주별 평가지표 항목을 살펴보면, ‘I. 단체 실적 및 역량’ 범주에서는 I-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0.40)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산출됨.
 - 다음으로 I-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0.38), I-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유무(0.22) 순으로 나타남.
- ‘II. 공간’ 범주에서는 II-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0.38)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산출됨.
 - 다음으로 II-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0.35), II-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0.27)순으로 나타남.
- ‘III. 전문인력’ 범주에서는 III-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연계 활용 역량(0.62)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산출됨.
 - 다음으로 III-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0.25), III-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0.15) 순으로 나타남.
- ‘IV. 네트워크’ 범주에서는 IV-1.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0.60), IV-2.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 보유 여부(0.40)에 비해 더 중요한 것으로 산출됨.

〈표 IV-19〉 AHP 분석 결과

범주 (가중치)	평가지표 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Ⅰ. 단체 실적 및 역량 (0.28)	Ⅰ-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0.22
	Ⅰ-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0.40
	Ⅰ-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0.38
Ⅱ. 공간 (0.10)	Ⅱ-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0.35
	Ⅱ-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0.27
	Ⅱ-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0.38
Ⅲ. 전문인력 (0.22)	Ⅲ-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	0.13
	Ⅲ-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	0.25
	Ⅲ-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연계 활용 역량	0.62
Ⅳ. 네트워크 (0.29)	Ⅳ-1.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0.60
	Ⅳ-2.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 보유 여부	0.40
Ⅴ. 정성평가 (0.11)	V-1.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포함	1.00

4. 소결 및 시사점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생태구조와 환경 조성 필요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화예술교육 환경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이어진 정체기로부터의 회복이 더딘 상황으로 파악됨. 팬데믹 시기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확대와 활성화에 대한 모멘텀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었으나 지속적인 지원과 같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핵심적인 이슈로 기존 공공지원 방식인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은 단기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현장의 피로도와 그 한계에 대한 체감도가 축적된 상황임.
- 대안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료화를 통해 단체가 재정적인 자생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에 직·간접적인 정책 방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로써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에서도 민간지원을 포함한 다각적 재원조성 전략과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확인됨.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 2020~2022년에 시행되었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 밀착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과 기초 단위 거버넌스 조성 및 운영 경험은 현장 전문가들이 해당 사업의 중단에 아쉬움을 표하는 큰 요인으로 나타남.
- 이에 향후 대안으로 제시될 정책 방안에 대하여 기존 지원사업이 발현했던 긍정적인 측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표현함.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기대 역할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이 갖추어야 할 핵심 기능과 역할로서 크게 ‘인력자원,’ ‘연계와 협업,’ 그리고 ‘예산확보’를 꼽았음.
- 인력자원의 경우, 발굴, 역량 강화, 더 나은 참여환경 조성 등의 역할을 기초 거점단체 또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음.
- 또한, 기초 거점은 매개 및 자원 연결을 중심으로 한 중간 지원조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기초 거점은 지역 내, 그리고 광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응답함.
- 지역 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거버넌스 운영,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를 활성화는 기초

거점의 중요한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음. 이는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사회적 영향이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내 사회적자본 생성과 관계가 있음을 드러냄.

- 더불어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은 광역 단위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조직과의 연계와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됨.
- 이러한 기초 거점조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 역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응답함. 다만, 이 부분은 지역 지자체와의 관계 그리고 지역공동체에의 영향력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까지 기초 거점조직이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앙의 간접지원 또는 혜택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접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 간접지원 제도, 특히 인증제도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됨.
- 우선 인증제도에 대한 보편적 이해도나 익숙한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가운데 인증제도를 통한 공신력 및 신뢰도 획득 등 긍정적인 기대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사업지원을 통한 단기적, 직접지원 체계에 의존도가 높은 현장의 상황에서 인증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초기 실행 단계에서는 혜택이 명확하고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인증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의구심과 우려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떠한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안으로 제시된 것인지, 그에 대한 적합성은 확인이 된 것인지에 대한 불명확성에서 기인함.
- 또한, 인증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대안에 대한 공감의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한편,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에 변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현장 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기대가 나타남. 이에 현장 자율성과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 보장되는 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향후 지원방안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분명히 드러남.
- 인증제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소속감, 정체성이 증진될 것에 대한 기대감도 확인됨. 이는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지역공동체와 시민 사이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낮은 것에서 온 상실감이 있었음을 반증함.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가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됨.

□ 단체 전문성 평가의 중요성과 공간 및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감

- 자료 분석 결과,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또는 단체를 평가하는 요건 중, 단체의 전문성과 역량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의 실적을 평가할 때, 공모형식에 따른 반복적이 프로그램 수행에 집중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문화예술교육 기획 역량과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조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함으로 해석됨.
 - 참고로, 평가 범주는 크게 ‘단체 실적 및 역량,’ ‘공간,’ ‘전문인력,’ ‘네트워크,’ ‘정성평가’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음.
- ‘공간’에 대한 평가 범주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응답자의 ‘거점’이 함의하고 있는 장소성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공간 보유가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다만,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실무자 집단이 연구자 집단보다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지역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지역 네트워크 역량과 연관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기획 시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됨.
- 인력 고용의 문제는 예산과도 직결되어 있어 해당 항목에 대한 부담감이 드러남.
- 또한,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함에 있어 자격증(예: 문화예술교육사) 소지로 평가하기보다는 현장 경험과 해당 기초 단위 또는 주변 지역 활동 경력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그 밖에도, 기초 거점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하기 위한 평가는 과정 중심의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통합된 방식이어야 한다고 조사 결과 나타남.
- 지역별 환경과 특성이 다름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함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V. 기초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제도 모델

1. 인증제도의 목적과 방향
2. 인증제도 운영 체제(안)
3. 거점 인증의 요건
4. 인증기관 선정 평가지표(안)
5. 단계적 전략

V. 기초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제도 모델

1. 인증제도의 목적과 방향

1.1 거점 인증제도의 목적

1) SWOT 분석

- 기초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사회의 인간 및 사회 문제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그 자체로서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중요한 문화도시 접근방법으로 고려하고 있음.
- 또한 기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와 인력들은 존재하지만, 주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생태계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문화예술교육시설 브랜딩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정책 지원사업은 주로 프로그램 차원에 집중되었으며, 단체 육성 및 시설 브랜딩 차원에서는 취약함. 또한 기초 지역의 권역별로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격차가 큰 실정임.
- 한편 기초 지역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며,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특성 및 방법에 대한 공감 수준이 낮은 상황임.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기반 조성 단계에서 문화예술교육 거점 및 인증제도에 대한 공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통, 공유, 참여, 협력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인력(강사, 기획관리자,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매개자 등)들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소속감, 그리고 미래 비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창조 노동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우수 문화예술교육 인력과 단체 등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초 지역의 경우, 문화기반 시설과 문화예술교육 자원들의 지역별 격차가 큰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기반과 수요가 높은 지역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기반과 수요가 취약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초 단위에 문화예술교육 거점을 조성할 경우에는 취약지역의 거점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기초 단위에 문화예술교육 거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와 지원사업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문화예술교육시설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증 이전 단계, 인증 단계, 인증 이후 단계 전반에 걸쳐서 적절한 지원 전략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지원 전략은 직접 지원 전략과 간접 지원 전략을 모두 활용하는 통합지원 전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인증 요소로는 그 동안의 문화예술교육 실적 뿐 아니라 미래 문화예술교육 계획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교육 실적은 거점 인증을 신청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파악하는 준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미래 문화예술교육 계획은 거점 인증을 신청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관점과 의지를 파악하는 준거 자료가 될 수 있음.

〈표 V-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 SWOT 분석

<div>역량</div> <div>환경</div>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조직과 인력 확보 문화예술교육 공간자원 확보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인식 미흡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경영 인력의 활동기반 취약 문화예술교육 재원 조성 및 예산 확보 한계
기회(Opportunity)	전략1: SO	전략2: 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권화 추세, 기초 거점 수요 증대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사회 관계 구축 수요 문화도시의 문화예술교육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문화예술교육기관 시상 및 브랜딩 지원 제도 운영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연계 활성화 기반 조성 타 영역과의 융합형 프로젝트 개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가치 인식 제고 활동 강화 실적과 계획의 통합 인증평가 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경영인력 활동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위협(Threat)	전략3: ST	전략4: 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생태계의 신뢰도와 협력도 미흡 “문화예술교육” 정체성 인식 취약 기초지역 문화예술교육 취약 지역의 진입한계와 격차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공감 활성화 거점기관 실태조사 체계 구축 취약지역의 거점기관 인증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지원(간접+직접 지원) 제도 적용 인증 거점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 및 브랜딩 전략 활성화

2) 인증제도 도입 쟁점 이슈

- 거점기관 인증제도는 인증의 대상을 기초 지역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거점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인 조직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거점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함. 거점기관으로 인증된 조직은 최소한 문화예술교육 시설,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체계 등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함. 운영체계는 조직과 인력,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됨.
- 거점 인증대상의 특성은 운영주체에 초점을 두는 조직모델과 시설에 초점을 두는 시설 모델로 구분할 수 있으나, 거점기관의 운영 역량이 중요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총체적으로 갖춘 운영주체를 거점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직 모델은 거점기관의 총체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거점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시설 모델은 시설 자체가 시민들의 거점기관 인식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시설에 초점을 둬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조직 모델의 경우, 시설 뿐 아니라 운영 주체인 기관, 단체들이 모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시설 모델의 경우에는 주로 시설 중심으로 거점 인증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큼.
- 시설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시설로서의 적합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거점기관으로 인증될 수 있음. 이것은 시설이 거점기관 인증의 핵심 요소이지만 시설만으로는 거점기관으로 인증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증의 대상기관을 시설로 한정할 경우, 자칫 문화예술교육 전문 운영체계 부문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랫동안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의 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음.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시설이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 전문 운영체계를 갖추는 필요가 있음.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시설을 민간 비영리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주체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설모델의 경우, 시설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이 어려우며, 시설 편중에 따른 거점 편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거점기관에 대한 브랜딩 전략 측면에서 조직 모델은 조직 브랜딩과 시설 브랜딩을 결합한 총체적 브랜딩 전략이 가능한 반면, 시설 모델은 시설 브랜딩에 한정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거점 인증제도에서는 운영주체를 핵심 인증 요소로 설정하되, 시설,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통합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표 V-2〉 거점 인증대상 기관의 특성: 조직 모델과 시설 모델 비교

구분	거점 조직 모델	거점 시설 모델
인증 핵심 요소	• 운영체계, 활동 및 프로그램, 시설	• 운영체계, 활동 및 프로그램 시설
적용대상의 범위	• 시설: 운영체계, 활동 및 프로그램을 갖춘 시설 • 단체: 시설,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춘 단체 및 기관	• 시설: 운영체계, 활동 및 프로그램을 갖춘 시설
전문성과 책임성	• 운영 주체에 초점을 둠. 전문성, 책임성 확보 노력. • 활동 및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관계, 운영인력과 조직 조 등 총체적 접근	• 시설 편향성으로 총체적 접근 한계 • 계약기반의 위탁 운영시설인 경우, 운영 주체의 변동에 따른 지속성 확보 한계
취약지역 거점 조성	• 거점 협력기관과의 협력으로 취약지역 거점 조성	• 시설이 열악한 취약지역의 거점 조성 한계
거점기관 브랜딩	• 통합브랜딩 • (시설 브랜딩 + 기관 및 단체 브랜딩)	• 시설 기반 브랜딩

○ 또한,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인증거점기관 적정 규모, 거점기관 운영 주체, 협력 거점 활용 방법, 거점기관 역량, 거버넌스 체계, 지원방식 등에 대한 쟁점 이슈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인증 거점 기관의 적정 규모 이슈는 거점기관의 규모를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확산 거점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확산보다는 질적 우수성에 초점을 두고, 적정 규모로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 이것은 거점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거점기관의 운영 주체를 공공부문으로 한정할 것인가, 민간 비영리 및 민간부문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증제도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이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거점기관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거점기관을 핵심 거점과 협력 거점으로 구분하여 협력 거점기관 모델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핵심 거점기관의 협력 사업 차원에서 협력기관을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슈임. 이것은 핵심 거점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계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기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취약한 지역의 거점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거점기관의 역량을 실적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계획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이슈가 있음. 기초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고유한 특성과 운영체계 등에 대한 인식 공감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무엇이 문화예술교육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거점기관 인증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거점기관의 미래 문화예술교육 비전과 관점 및 사업계획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하여 중앙 주도 거버넌스 체계로 할 것인가, 지역 주도 거버넌스 체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함. 지방분권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중앙 단위의 역할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인증제도와 지원제도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함.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인증만으로는 거점 조직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지원 등 통합 지원 전략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V-3〉 인증제도 도입 쟁점 이슈

고려 요인	주요 내용	방향
인증거점기관 적정 규모: 우수성 vs.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인식 미흡 • 질적 우수성 측면: 실질적으로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거점 모델 개발 • 양적 확산 측면: 거점 인증을 통한 전국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관 중심으로 거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 확산 (30개 내외 규모로 시작) • 장기적으로 1시, 군, 구에 1-2개 정도 수준으로 확산
거점기관 운영주체: 공공 vs.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조직, 시설 • 민간기관: 민간 비영리, 임의단체 등 민간단체,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기관의 유형을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공공, 민간부문의 우수기관 및 단체들이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협력거점 활용 협력사업 vs. 협력기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업: 거점기관의 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접근 • 협력기관 인증: 마을, 동네 단위의 작은 거점들을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거점”으로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시, 군, 구에 1-2개 내외의 거점기관을 인증하고, 마을, 동네 단위의 작은 거점을 협력거점으로 연계 운영하고, 별도의 협력거점을 인증하지는 않음

고려 요인	주요 내용	방향
거점기관 역량: 실적 vs.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 실적에 초점을 두는 방안 • 미래 3년 동안의 계획에 초점을 두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과 계획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되, 초기에는 실적 지표에 초점을 두고, 점차 계획지표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향으로 조정
거버넌스: 중앙 vs. 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주도 방식(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방(광역시/기초) 주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네트워크 허브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원방식: 간접지원 vs. 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지원: 인증기관에 대한 브랜딩, 컨설팅, 네트워킹 등 간접지원 • 직접지원: 거점기관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촉진 차원에서 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거점기관에 대한 간접, 직접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통합모델 개발

3) 비전과 목적

〈표 V-4〉 거점 인증제도의 비전과 목표

비전	생활권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 환경 구축	
목표	1. 문화예술교육기관의 정체성 확립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러한 정체성을 지속 유지하면서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전문성을 갖도록 동기부여
	2.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증진과 인식 확산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인식하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일상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함.
	3. 문화예술교육의 일상성, 지속성 확보	생활권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일상적이고 지속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4.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성 확보	기초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발굴, 육성, 연계하고, 기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4) 전략 방향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

- 인증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증되는 거점기관이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인증제도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점기관을 인증할 수 있는 선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한 선정 심사체계 구축,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인증 취소 제도 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인증제도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적정 규모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거점 경험과 역량 및 미래 계획 수준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거점기관의 브랜딩과 역량 강화

- 거점기관 인증제도는 거점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점기관의 의지와 역량이 인증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거점기관이 자체 브랜딩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촉진자로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융합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 생활문화, 평생교육, 사회복지, 공동체 회복, 문화다양성, 생태환경, 지역재생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 영역 및 이슈들과 융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결 및 협업 환경을 조성

□ 인증제도 운영체계 구축

- 인증의 기준, 심사체계 구축, 인증제도 안내 매뉴얼 개발
- 인증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평가체계,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정립
- 인증 정보 플랫폼 구축

□ 인증 기반 지원사업 개발

- 문화 취약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 전략 개발
- 거점기관의 자생력 기반이 취약하고, 기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증만으로는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인증받은 거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제도 운영 체제(안)

□ 인증 심사 및 인증 취소 체계

- 거점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증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의하고, 신청하고, 일정한 심사를 받아야 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서면심사와 현장 실사 심사를 통해 신청한 기관들을 심의하고, 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함.
-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받은 거점기관은 3년 후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함.
 -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인증 기간 설정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법정 인증 기간은 인증제도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이지만, 대체로 3년이 많은 편임. 문화예술후원 인증 3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3년, 도농교육과정 인증 3년,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은 2년,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은 4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은 5년임.
 - 지역 현장 관계자, 전문가 FGI 결과, 인증제도 초기 단계에서 인증된 거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며, 3년 정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연장, 재인증, 인증 취소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거점기관은 인증 1차년도에 거점 기반 조성, 2차년도에 거점 활동 본격 추진, 3차년도에 거점 활동 평가 및 환류 등의 단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증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 취소 사유, 소명 자료의 제출, 청문, 인증 취소 심의위원회 운영, 인증 취소 통보, 인증 취소 공지 등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지함.

□ 인증 로고 및 증서 제공

- 인증받은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에 대해서는 명칭, 로고,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대외적으로 문화예술교육기관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접근은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명칭, 브랜드정체성(Brand Identity, BI)을 개발하여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들이 문화예술교육기관 또는 문화예술교육 시설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브랜딩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명칭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 센터” 등의 키워드를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가칭 “지역문화예술교육 거점” 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명칭 검토
- 브랜드정체성(BI)을 개발하여 문화예술교육 거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브랜딩 전략에 활용.

□ 인증 정보 플랫폼 구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제도와 인증 진행 사항에 대해 온라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정보 플랫폼은 인증제도 안내, 인증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인증 현황, 인증기관 정보,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들은 정보 플랫폼을 통해 사전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문의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정보 플랫폼을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인증제도와 인증기관에 대한 홍보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인증제도가 법제화되고, 인증받은 거점기관 수가 늘어날 경우, 한국인증원과 연계하여 정보 공유 및 확산 체계 구축

□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기관 실태조사

- 사업 필요성과 목적
 -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증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증 지속 여부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기관에 대한 지표관리를 통해 인증기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공
 -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점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거점 인증기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표 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표 V-5〉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기관 사업 및 내용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표체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인증기관 지표체계 연구 • 거점기관 관계자들과 지표체계 및 실태조사의 목적과 활용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 환경 조성 • 정기적인 지표조사 체계 구축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실시 • 분석결과의 발표 및 실태조사 자료집 공유 • 우수 거점기관 선정 평가자료로 활용
지식정보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 역량강화 데이터로 활용 • 국가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체계와의 연계 • 지역 거점기관의 문화예술교육백서 발간

○ 실태조사 지표체계

〈표 V-6〉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실태조사 지표체계 개발

지표체계 항목	세부 내용
거점기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유형: 공립, 비영리, 민간 등 분포 지역: 읍, 면, 동 주 활용 영역: 문화예술, 생활문화,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적 재생, 복합 공간, 유희공간 등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 활동에 참여한 전문 인력 규모 거점기관 활동에 참여한 매개 인력 규모 거점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 규모와 특성 거점 관에서 활용한 시설 규모와 특성 협력기관 규모, 특성(주요 업무, 조직, 시설, 인력 등)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의 활동 실적 개요 거점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규모, 내용, 특성 협력 기관과의 공동 사업 규모, 내용, 특성 문화예술교육 참여 지역주민 규모, 특성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구조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 규모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여부 포함) 기관의 전담인력 규모, 업무별 규모 지역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운영
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한 정책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사업내용,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등 조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활동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연계 활동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활동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활동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 활동

○ 추진체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표체계 개발, 실태조사,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등의 사업 추진체계 구축
-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추진체계 구축
- 국가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및 지식정보 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공감을 보하고, 거점기관의 참여와 협력 환경 조성. 거점기관의 경우,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기초 단위 거점기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아냄으로써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고, 거점기관 종사자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데 기여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의 데이터 종합체계 구축 자료로 활용
- 우수 거점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

○ 법제도 개선사항

- 현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 중의 하나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 10조 4항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의 하나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 13조 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을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받은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 근거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도입 단계에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여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근거 법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음. 또한 인증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인증받는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모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체부로부터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거점 인증제도 운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주요 업무로는 사전 인증제도 기반 조성, 거점기관의 인증 및 관리, 거점기관 역량 강화, 거점기관 브랜딩, 인증 기반 지원사업 등을 설정할 수 있음.

〈표 V-7〉 거점 인증제도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역할	세부 내용
1. 사전 인증제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도 도입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협의와 조정 • 인증제도 법제도 개선 • 잠재 인증 가능 기관, 단체, 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 인증기관 로고 개발
2. 거점기관 선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체계 구축, 심사지표 개발 • 인증기관 선정, 인증로고 및 증서 제공 •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기관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평가 • 인증제도 정보플랫폼 구축 운영 • 인증 취소 체계
3. 거점기관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강화 컨설팅 체계 구축 • 역량 강화 교육 연수체계 구축
4. 거점기관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도와 인증기관에 대한 홍보 마케팅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네트워크 활성화
5. 인증 기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선정 및 시상 • 거점기관의 지역융합형 파트너십 프로젝트 활성화 • 지역 문화예술교육 경영인력 활동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 거점기관의 문화예술교육 브랜드 경영과 자원 조성 활성화

3. 거점 인증의 요건

3.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의 요건

〈표 V-8〉 거점 인증 요건과 내용

요건	세부 사항
1. 운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는 문화예술교육 기획, 운영 경험과 역량이 있어야 함. 지난 3년 동안 최소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적이 있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시설, 단체를 포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 모두 가능 • 단독기관 또는 복수의 협력기관도 신청 가능 (예컨대, 공공 문화예술교육시설을 민간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위탁한 경우, 수탁단체와 시설 운영 주체가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함) • 향후 3년간 동일한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 전문 단체, 문화기반시설, 평생교육기관, 복합문화공간, 지역의 재생 문화공간, 사회복지시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시설 모두 인증 가능 기관으로 광범위하게 설정.
2. 운영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인력의 규모와 역량은 거점조직의 효과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함. • 문화예술교육 기획, 경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최소 1명 이상 확보해야 함. • 민간 문화예술교육단체의 경우, 대표의 경력도 전담인력의 범위에 포함시킴. • 문화예술교육자격증 소지자도 전담인력의 범주에 포함시킴.
3. 교육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간은 물리적 공간 형태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함. • 독립 전문 문화예술교육 공간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은 교육공간의 범주에 포함시킴. • 위탁 또는 임대 등의 경우에도 향후 3년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교육공간의 범주에 포함시킴.
4. 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을 신청하는 운영주체는 필수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운영주체 단독 활동 뿐 아니라 협업 활동도 교육활동의 인정 범위에 포함됨. • 교육활동의 인정 범위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동, 문화예술교육 인력 아카데미 활동, 문화예술교육 연구 활동, 지역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활동, 문화예술교육정책사업 활동 등이 모두 포함됨. • 향후 3년간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함.

3.2 운영 주체 유형별 과제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 기관들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증 가능성과 한계 및 과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 가칭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 대상 기관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기초 단위 인증 대상 기관의 범주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기반시설, 복합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초 단위 거점기관으로 인증될 수 있는 조직은 매우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 문화예술교육단체

- 문화예술교육단체의 경우,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2020~2022)에 참여한 단체는 거점기관으로 인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최근 3년 동안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는 많지만,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속 수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임. 또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경우, 단일 프로그램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개별 프로그램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경우, 기획인력은 대표 또는 프로그램별 기획관리자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강사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음. 한편 문화예술교육단체의 경우, 주로 공공부문의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취약한 실정임.

□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2020~2022)에 참여한 조직과 시설은 거점기관으로 인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대덕문화원, 광주북구문화의집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됨. 문화기반시설은 기초 생활권 단위에 구체적인 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대상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역량은 시설에 따라 격차가 큰 상황임. 한편 대부분의 지역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 등은 문화강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인력과 협업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문화기반시설의 기획인력은 대표 또는 프로그램별 기획관리자 형태로 활동하고 있음. 문화기반시설의 재정은 공공지원금, 자체 수입, 수강료 등 다양함.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은 대부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복합문화공간

- 복합문화공간은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카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은 폐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 공간,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 공간, 문화도시 사업의 복합문화공간 등 그 형태가 다양함.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중에서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2020~2022)에 참여한 조직과 시설은 거점기관으로 인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전주문화재단의 팔복예술공장, 완주문화재단의 누에가 여기에 해당됨. 복합문화공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문화기획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인력, 조직 역량, 활동 및 프로그램, 예산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음.

□ 주민자치시설

- 주민자치시설의 경우, 읍, 면, 동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문화강좌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강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생의 수강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 주민자치회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기획 관리 전문 인력이 없는 실정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부처협력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가 많은데, 그 유형으로는 예술강사 개인이 참여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사회복지 대상 주민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 거점기관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관리 역량이 낮고, 자체 문화예술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거점기관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사회복지시설에서 문화 돌봄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복지시설형 문화예술교육 거점센터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의 정의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 공간을 갖추고 있음.

-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관으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시-도 교육감은 시-군-구의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해야 하며, 이에 대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등이 규정되어 있음(평생교육법 제 21조).

〈표 V-9〉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구분	기관수	설립주체				운영 형태	
		국가 지자체	법인	개인	기타	직접	위탁
교육감 설치 및 지정	338	256	58	15	9	279	59
지자체 설치	163	163				154	9
계	501	419	58	15	9	433	68

자료: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평생교육백서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읍, 면,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평생교육법 제 21조의 3).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되는 시설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등을 들 수 있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재정지원 구조를 살펴보면, 지원 없음 80.87%, 국고 지원 8.69%, 교육청 지원 3.26%, 지방자치단체 지원 4.61%, 기업 지원 2.32%, 기타 0.24%로 나타나, 지원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 군, 구는 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기초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기초 생활권 단위에게까지 정책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대상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개별 강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프로그램의 지향점과 운영체계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시설 운영 담당자의 경우에도 문화예술교육정책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초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평생교육시설을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재단

- 기초 지역의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 역량의 차이가 크지만,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2020~2022)에 참여한 지역문화재단은 거점기관으로 인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기초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시민문화, 생활문화, 공동체문화, 문화다양성,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을 융합적, 총체적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또한 기초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공공도서관, 문화기반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초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교육단체나 문화기반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점이 있음.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2020~2022)에 참여한 지역문화재단을 기초 거점기관으로 인증하여 모델링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문화재단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인증기관 선정 평가지표(안)

□ 평가지표 개발 쟁점 이슈

〈표 V-10〉 인증 평가지표 개발 관련 쟁점 및 설계 방향

쟁점 이슈	주요 내용	방향
공간 필수 여부: 공간 확보/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확보: 자체 공간 확보 공간 활용 가능성: 교육공간 활용 실적과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3년 정도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1개 이상 확보 또는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기관을 우선적으로 인증
전담 인력 필수 여부: 전문인력/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전문 전담 인력 확보 (문화예술교육사 등) 문화기획, 활동 인력으로 범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 1명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 인력의 범위를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1년 이상된 문화기획가, 문화 활동가, 문화 행정가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
정책사업 참여 실적 여부: 실적 필수/연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 참여 실적이 1개 사업 이상 문화예술교육 연관 활동 실적으로 확대하여 활동 실적이 1개 사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입 단계에서는 정책사업 실적을 필수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재정확보 필수/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현재 또는 미래 문화예술교육 재정계획 수립 조건부: 재정확보 여부는 평가 기준에서 다루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현황 및 계획은 독립적인 평가지표로 고려하지 않고, 미래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고려 요인으로 설정

□ 평가지표(안)

- 설문조사, FGI, 델파이조사를 통해 수렴한 현장 전문가 및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 표와 같은 평가지표(안)이 도출됨.
- 범주는 중요도에 따라, 평가지표 항목은 범주 내 적절성 분석결과에 따라 순차나열하였음.
- 단,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정성평가는 범주 중요도 순위에서 제외하였음.

〈표 V-11〉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안)

범주	평가지표 항목
단체 역량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신청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가?

범주	평가지표 항목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에 속해 있거나 구성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타 문화예술분야 또는 비문화예술 조직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다면, 협력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이행했는가?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인력교류 포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발굴, 양성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최소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을 갖추고 있는가? •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가? • 평가 대상 시설은 최근 2년 동안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후, 향후 3년 사업계획이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조직 역량, 인력, 시설, 프로그램, 재원조성 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5. 단계적 전략

〈표 V-1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인증제도 도입 단계별 전략(안)

전략	기반 조성 단계 (2023년) 30개	인증제도 도입 단계 (2024년) 60개	인증제도 확산단계 (2025년~) 시·군·구별 1개 이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제도 체계구축 및 법제도 개선 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과의 관계 형성 및 거점기관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의 확산 및 자생력 촉진 환경 조성
1. 사전 인증제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선정 및 시상 인증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한 협의 조정 및 인식 공유 사전 인증 대상 기관 실태조사 실시 		
2. 인증기관 선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운영 인증제도 실행 매뉴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관 선정관리 인증기관 실태조사 및 평가 인증정보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관 선정관리 인증기관 실태조사 및 평가 인증정보 플랫폼
3. 인증기관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거점기관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수 컨설팅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수 컨설팅 네트워킹
4. 인증기관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관 로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PD 대회 전국 지역문화예술교육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브랜딩 플랫폼 구축 전국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연합회 출범 지원 및 관계 형성
5. 인증 기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인증거점기관 시상 융합형 파트너십 프로젝트 활성화 경영인력 활동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의 브랜딩과 재원 조성 활성화

VI. 거점 간접지원 정책 방안

1. 거점기관 접근성 증진 방안
2. 거점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
3. 거버넌스 체계 구축
4. 단계별 기초 거점 지원 전략

Ⅵ. 거점기관 간접지원 정책 방안

1. 거점기관 접근성 증진 방안

1.1 필요성과 방향

- 거점기관 제도는 지역주민과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로 하여금 지역에 어떤 문화예술교육 기관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일상생활 속에서 인식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의 문화기관, 비문화기관 등 다양한 시설 및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는 취약한 상황임. 그동안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예술교육기관 보다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외에는 문화예술교육기관에 대한 이해가 낮음.
-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는 어떤 기관들이 있고, 이러한 기관들의 특성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민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은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딩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에 대한 브랜딩 전략은 개별 거점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관(광역문화예술교육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 제도 운영, 지역융합형 프로젝트 활성화, 비문화영역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환경 조성 시범사업 등을 제시함.

1.2 정책 방안

1.2.1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제도 운영

□ 사업 필요성과 목적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모델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기초 거점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해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거점”의 개념과 모델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거점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이해도는 낮을 수밖에 없음. 특히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장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험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업 현장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모델에 대한 거점기관 관계자들의 인식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사업내용

〈표 VI-1〉 우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선정 및 시상 사업

사업 구분	사업내용
우수기관 심사체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거점기관 평가 지표체계 개발 • 우수 거점기관 평가단 운영 및 평가 방법 개발
평가 실시 및 우수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통합 평가 (서류평가 + 현장평가) 실시 • 우수기관 선정
홍보마케팅 및 사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관 시상, 인증서, 인증패 수여 • 우수기관 상금 지원 (1천만 원~3천만 원 차등 지원) • 우수기관 홍보 및 사례 공유 활동

□ 평가지표

〈표 VI-2〉 우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심사 평가지표

지표 구분	세부 내용
프로젝트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기관 프로젝트 기획의 질적 우수성 • 거점기관 프로젝트 성과의 파급 효과
조직경영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시설자원의 활용 성과 • 경영전략의 적합성(비전, 조직구조, 인사관리, 가치경영 등) • 재원 조성 성과
협력과 융합혁신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협력과 혁신 환경 조성 • 비문화예술 영역과의 협력, 융합 체계 구축
거점기관의 지역사회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제고 •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여도

□ 추진체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우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선정 및 시상사업 운영 체계 구축
- 공모 및 신청접수
 - 신청자에 대해서만 우수기관 선정 심사 진행
- 심사제도
 -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 심사제도 운영
 - 서류심사 점수와 현장심사 점수를 구분하여 합산하지 않고 통합하여 심사점수 부여
- 추진 시기
 - 인증제도 도입 이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인증제도 도입 이후에는 인증제와 연계하여 운영

〈표 VI-3〉 우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선정 사업 유형

구분	인증제도 도입 이전 단계	인증제도 도입 이후 단계
목적	•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단체, 시설 발굴	• 인증된 거점기관의 모델 개발 및 인식 확산
내용	• 우수 문화예술교육 거점 선정 • 선정 기관 시상 및 지원금 지급	• 우수 인증 거점기관 선정 • 선정 기관 시상 및 지원금 지급
추진체계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서류평가와 현장평가기반의 통합평가제도 • 선정된 우수기관의 지원금 지급 및 관련 사업 관리체계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서류평가와 현장평가기반의 통합평가제도 • 선정된 우수기관의 지원금 지급 및 관련 사업 관리체계
기대효과	•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브랜딩 및 인식 제고 • 사례 공유 • 지역 거점 인증제도의 기반조성	• 인증 거점기관 브랜딩 • 인증 거점기관 사례 공유 • 인증 거점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기대효과

- 지역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 문화예술교육조직(시설, 단체, 기관 등)의 발굴 및 브랜딩 효과
-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거점 모델 개발의 준거 사례로 활용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에 대한 인식 제고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브랜딩 평가사업” 사례

□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육성사업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에 특화된 문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발전모델을 발굴 및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지역의 문화브랜드 사업 중 우수 사업을 지역 문화 대표브랜드로 선정해왔음.
- 지역의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 및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브랜드 사업을 대상으로 소재의 고유성, 지역 대표성, 주민과의 관계성, 브랜드의 창의성 및 상품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대표브랜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함.
- 2012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총 25개 대표브랜드를 선정 및 지원하였음.

표 5-1-15 연도별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 현황(2012~2020)

연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규모(개)	25	2	2	3	3	3	3	3	3	3
예산 (백만원)	840	5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2020 문화예술 정책백서」.

[그림 VI-1] 연도별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 현황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의 문화 브랜드화 사업 중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 발전 유도 및 지역문화 발전모델 발굴·확산
- (사업내용) 지역의 우수 문화브랜드를 공모·선정,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브랜드 육성·지원
- (사업 예산) 100백만 원(지자체 경상보조)

○ 공모개요

- (신청 주체) 지방자치단체(특별·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 (브랜드 범위) 지역의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브랜드 사업
 - [제외사업] 지역축제, 자연경관 및 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단기적 일회성 사업 등
- (선정 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서면심사 → 현지실사(PT 및 현장방문) → 선정 및 통보 → 국고보조금 교부 • 1차 서면심사: 사업계획서의 심사기준 부합성 평가를 통해 현지실사 대상 사업 선정(6개 내외) • 2차 현지실사 : PT 및 질의응답, 현장방문 - (심사기준) 지역대표성(40%), 브랜드화 가능성(40%), 주민과의 관계성(20%) • 심사분야별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심사 • 각 평가항목별 점수(최고·최저점 제외)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 (시상규모) 대상 1점(5천만원), 최우수상 1점(3천만원), 우수상 1점(2천만원) • (문체부 장관상)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상 수여 • (인센티브 사업비)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정액지원)

1.2.2 지역융합형 파트너십 프로젝트 활성화

□ 사업 필요성과 목적

- 거점기관이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연결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관, 단체, 인적자원들을 실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단체가 학교 및 교육기관, 사회복지, 교도소, 마을공동체, 문화기반시설 등 다양한 현장 기관 및 시설들과 협업 관계를 형성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음. 이러한 연결자 역할은 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수행해왔으나, 지역 내 행위자들의 연결에 초점을 두지는 않음.
- 기초 단위 지역의 경우, 대부분 정책 거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연결과 네트워크 구축 기능은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은 기초 단위에서의 연결과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초 생활권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중요한 역할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지역의 인적자원, 시설 자원 등은 문화예술교육에 활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체로 기회와 성장의 경험을 축적해 갈 수 있음.
- 거점기관의 연결 기능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협업 프로젝트가 기획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인식 수준과 역량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 수행하는 것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이런 맥락에서 기초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들로 하여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수요와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거점기관의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사업내용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과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의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 거점기관과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며, 기초 지역의 특성과 거점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추진. 거점기관과 협력기관은 공동으로 협력수요를 조사하고, 공동 프로젝트 추진체계를 개발해야 하며, 지역문화예술교육 거점 확산 성과를 제시해야 함.
-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관 및 단체를 모두 아우르며, 문화예술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함. 이와 같이 협력기관의 범주를 다양하게 열어놓는 것은 협력기관을 발굴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지원내용은 워킹그룹 운영비, 연구개발비, 시범 프로젝트 운영비,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비 등으로 구성됨.
-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유형은 취약지역 거점 발굴형, 수요자 접근성 증진형, 지역문제 해결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VI-4〉 거점기관의 지역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유형

유형	사업내용	협력기관 예시
취약지역 거점 발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함 •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프로젝트 수요와 과제를 제시하고, 취약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관점에서 성과 관리 	취약지역의 학교, 예술가 스튜디오, 마을회관, 카페, 책방,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
수요자 접근성 증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생활권 시설과 협의하여 시설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제공 • 생활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자치시설 의 참여자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실시 	공동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문제 해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이슈와 연관된 기관, 단체, 시설 등과 협력 프로젝트 진행 • 문화예술교육 맥락에서 지역이슈를 탐색하고, 이와 연관된 자원 및 기관 실태조사 실시 	생태문화시설 및 공동체, 지역공동체,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및 공동체 등

□ 추진체계

- 기초 거점 사업 참여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사업 기간은 3년도 사업으로 설정

〈표 VI-5〉 거점기관의 지역융합형 파트너십 프로젝트 지원사업 단계별 전략

단계	사업목적과 방향	사업내용
1. 기초 거점 사업 참여기관 중심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 사업 종료 시점에서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거점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 거점기관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과 협력기관 공동 사업 기초 단위 새로운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수요 발굴 및 협업 프로젝트 설계
2. 우수기관 및 잠재 거점기관으로 확대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 기초 거점기관 발굴 및 육성 우수 거점기관 시상제도와 연계 거점기관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과 협력기관 공동사업 기초 단위 새로운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수요 발굴 및 협업 프로젝트 설계
3. 기초 거점 인증기관 중심 (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으로 인증받은 거점기관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거점 인증제도와 연계 거점기관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과 협력기관 공동사업 기초 단위 새로운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수요 발굴 및 협업 프로젝트 설계

- 문체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기반으로 사업추진

〈표 VI-6〉 거점기관의 지역융합형 파트너십 프로젝트 지원 참여자 역할 구조

참여 조직	주요 역할
문체부	정책방향 수립, 예산 확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기획과 집행, 심사, 컨설팅, 평가, 네트워킹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컨설팅, 지식정보서비스, 네트워킹
기초 지방자치단체	운영 지원
거점기관	공동사업신청, 사업주관기관, 사업집행, 성과보고 등
협력기관	공동사업신청, 사업협력기관, 사업집행, 성과보고 등

- 선정 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의 통합평가 실시

〈표 VI-7〉 거점기관의 지역융합형 파트너십 프로젝트 선정 심사 평가지표

지표 구분	세부 내용
프로젝트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수요 적합성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개발과정의 관계자 참여도
거점기관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실적 • 거점기관의 지역사회 이해 • 거점기관의 네트워크 역량
융합혁신 체계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기관과 협력기관의 협업체계 적합성 • 협력기관 선정의 적합성
프로젝트의 지역 파급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혁신 성과 기대 • 지역 문화예술교육 확산 효과

□ 기대효과

- 기초 거점기관의 지속적 활성화 기반 및 역량 강화
- 미래 잠재 거점기관 발굴 및 활성화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기여

1.2.3 비문화영역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거점환경 조성 시범사업 추진

□ 사업 필요성과 목적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여성회관 등 비문화예술 영역의 기관 등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협력기관 차원에서 단년도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이고 주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기능과 추진체계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경우에도 문화예술교육 강사와 단체가 부처 협력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 체계를 갖춘 협력시설은 미흡한 실정임.
- 이러한 비문화예술영역의 기관들은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많지만, 문화예술교육 노하우와 지식을 기관들의 핵심기능들과 융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자체 개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 체계 등은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비문화예술영역 기관들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해외이주민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요를 갖고 있는 경

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비 문화예술 영역의 기관들 중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주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거점기관들을 육성하여, 기관들의 핵심 기능과 문화예술교육 기능이 융합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비문화예술영역 기관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시범 기관으로 선정, 지원하고, 향후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육성
- 지원내용의 유형은 인력 지원, 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및 네트워킹 지원, 시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등으로 설정함.
- 현행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사업유형을 프로그램 중심 유형에서 기관 중심 유형으로 확장하여 추진

〈표 VI-8〉 비문화예술 영역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환경 조성 사업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종사자(사회복지사 등)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연수 •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경영 인력 파견 지원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컨설팅 • 기관 특성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연구개발 및 네트워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특성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R & D Lab 운영 지원 • 문화예술교육 R & D Lab 기반 네트워크 플랫폼 지원 (워킹그룹 회의비, 네트워크 포럼 지원 등)
시범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비 지원

□ 추진체계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추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
- 향후 3년간 (2023년~2026년)로 매년 3~5개 규모로 조성
- 기초 지역의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고,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 사업 기간은 3년도 사업으로 설정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

〈표 VI-9〉 비문화예술 영역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환경 조성 사업 참여 조직과 역할

참여조직	주요 역할
문체부	정책방향 수립, 부처 협력과 조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부처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업기획과 집행, 심사, 컨설팅, 평가, 네트워킹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컨설팅, 지식정보서비스, 네트워킹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동 신청, 자원 지원
비문화예술 영역의 거점기관	사업신청, 사업추진체계 구축, 사업집행, 성과보고, 네트워크 참여

○ 선정 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의 통합평가 실시

〈표 VI-10〉 비문화예술 영역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환경 조성 사업 심사기준

지표 구분	세부 내용
문화예술교육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동안 문화예술교육 실적이 있을 것 • 최근 3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것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인식과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비전과 위상 및 활용계획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 •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의지를 갖출 것
문화예술교육 시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문화예술교육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활용계획의 적절성 • 기관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운영역량

□ 기대효과

- 비문화예술 영역 기관들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모델 개발 및 확산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민 접근성 증진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문제 해결 거점으로 활용
-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속가능체계 구축

2. 거점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

2.1 필요성과 방향

- 현재 문화예술교육 기반과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인증된다고 하더라도, 인력 부족, 지식정보 부족, 예산 부족, 협력 네트워크 경험 부족 등으로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의 역량은 크게 문화예술교육 전문 역량,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관계 역량,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의 지속가능 발전 역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기초 지역의 경우, 이러한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은 매우 적은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거점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거점기관 인력들의 교육연수, 전문 컨설팅 서비스,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조사 연구, 거점기관 네트워킹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 정책 방안

2.2.1 문화예술교육 거점 컨설팅 및 네트워킹

□ 사업 필요성과 목적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점기관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점기관 역량의 격차가 클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문화기반시설이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시설 담당 인력들의 문화예술교육정책과 거점기관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 역량은 취약할 것으로 전망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목적, 문화예술교육 관점, 과정 관리, 기대성과 등의 측면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비문화예술교육 기관이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조성된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그 기관의 핵심 업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점기관 관계자들의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역량은 취약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비문화예술교육기관

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목적, 문화예술교육 관점, 과정 관리, 기대성과 등의 측면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와 정책 거버넌스 맥락에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위상과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거점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 역량체계를 프로그램 기반에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와 거버넌스 기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시설과 단체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원을 발굴하고, 확보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표 VI-11〉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의 필요 역량

거점기관 역량	세부 내용
문화예술교육 전문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이해 역량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역량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 조사 및 활용 역량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관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역량 지역사회 특성과 문제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이슈 이해 역량 지역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 자원들의 협력관계 구축 역량
지속가능 발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경영 역량 재원 조성 역량 지역 문화예술교육생태계의 협력네트워크 역량 문화예술교육정책 거버넌스 참여 역량

□ 사업내용

〈표 VI-12〉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역량 강화 사업 유형과 내용

사업 구분	사업내용	세부 사업내용
교육 연수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거점기관의 자율적 역량 강화 워크숍 활동 지원 (현장 탐방, 전문가 특강, 연구 발표 활동 등)
	전국 거점기관 관계자 연수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전국 거점기관 관계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연수 실시
컨설팅 서비스	자체 전문가 활용 지원	거점기관의 자율적 전문가 활용에 대한 사례비 지원
	전문 컨설팅 서비스 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 지원

사업 구분	사업내용	세부 사업내용
지식과 경험 공유 플랫폼	공유 플랫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광역 차원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활동 지원 •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시스템 연계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지원
	우수기관 사례 공유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관 평가 및 시상제도와 연계하여 우수기관 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 사례 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개발 (책자 발간, 현장 탐방 기회 제공, 연구비 지원 등)
	전국문화예술교육센터 박람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브랜딩 마케팅 전략 추진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의 실태와 지속 발전 방안 논의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들의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활용

□ 추진체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기초 거점 인증제도 담당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하거나 자율형 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 직접 주관 사업으로는 전국 거점기관 관계자 연수 사업, 거점기관에 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지원 사업, 공유 플랫폼 지원, 우수기관 사례 공유 워크숍, 전국 문화예술교육센터 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
- 자율형 사업은 거점기관들의 자체적으로 필요한 역량 강화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일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함. 자체 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 자체 전문가 활용사업 지원 등이 이러한 자율형 사업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직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가칭 “전국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 연합회”를 조성하여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고, 참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가칭 “전국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 연합회”에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직들이 회원으로 참여함.
- 가칭 “전국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연합회”는 지식정보 교류, 교육연수 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데이터 관리, 지역문화예술교육 박람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기대효과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활동 기반 마련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들의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

2.2.2 지역 문화예술교육 경영인력 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 필요성과 목적

- 기초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이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획, 집행, 평가, 환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 네트워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문화예술교육 경영인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경영인력에 대한 개념과 활동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 행정가, 문화 기획자, 문화 활동가, 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터 등의 형태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음. 문화 행정가는 공공기관에서 상근하는 직원을 의미하는데, 문화예술교육 업무 외에도 지역문화와 연관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문화 기획자, 문화 활동가들은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환경이 불확실하며, 연간 소득 또한 취약한 실정임.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그동안 주로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인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문화예술교육 경영인력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함.
-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의 경우, 상근 직원들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교육 강사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민간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의 경우, 대표 또는 프로젝트 기반 기획자들이 문화예술교육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문화예술교육 강사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기관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전문 경영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력들의 역량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는 이러한 인력 확보 수준을 평가지표로 설정해야 함. 또한 거점기관으로 인증된 경우에도 이러한 인력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에서 종사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가칭 “문화예술교육 PD”로 명칭을 부여하고, 정체성과 브랜딩 전략 추진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에 “문화예술교육 PD”를 배치 또는 파견하는 사업을 정책적

으로 추진하여 거점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점기관 인증제도에 관한 관심을 높임.

- “문화예술교육 PD”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험과 지식정보 공유, 자부심 고양 및 동기부여, 역량 강화의 장으로 활용

〈표 VI-13〉 문화예술교육 PD 사업 유형과 내용

사업유형	사업내용
문화예술교육 PD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PD 직무와 역량체계 정립 • 문화예술교육 PD 교육연수 과정 운영
문화예술교육 PD 배치 및 파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기관의 문화예술교육 PD 채용에 대한 일부 인건비 또는 활동비 지원 • 현행 ‘문화예술교육사 파견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 PD 배치 및 파견’ 지원사업 개발
문화예술교육 PD 브랜딩 및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문화예술교육 PD 대회 개최 • 우수 문화예술교육 PD 선정 및 시상

〈표 VI-14〉 문화예술교육 PD 직무와 역량

직무	역량
지역사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기관이 활동하는 지역의 특성 분석 • 거점기관이 활동하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수요 분석 • 거점기관이 활동하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작성
거점기관과 지역사회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기관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유,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 • 협의체 구성 운영 • 거점기관의 문화예술교육 방향 설정 및 과제 개발
자원 발굴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발굴과 활용 • 문화예술교육 시설자원 발굴과 활용 • 문화예술교육 재정자원 발굴과 활용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 기반의 사업 기획 •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평가, 환류 • 문화예술교육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 추진체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사업 전담 운영
- 기초 거점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문화예술교육 PD로 명명하고, 문화예술교육 PD 직무와 역량, 근무조건 등을 개발하여 매뉴얼 제작
- 전국 문화예술교육 PD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브랜딩 전략 추진

□ 기대효과

- 기초 거점기관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기초 거점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코디네이터, 활동가들의 문화예술교육 지속 참여 동기부여

※ 관광두레 PD 사례

- 관광두레: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공동체 중심의 관광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및 그 사업의 추진방식을 말함. 2013년 5개 지역 36개 관광두레를 신설한 이래 2021년 현재 128개 지역, 822개 주민사업체(누적 현황)가 운영되었으며, 2021년 신규 사업체는 22개 지역 216개임.
- 관광두레 PD: 주민사업체의 발굴, 조직화 단계에서부터 창업, 경영개선 지원 등을 수행하며, 총괄기관-주민사업체, 지자체-주민사업체, 고객-주민사업체, 주민사업체-주민사업체 사이의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관광두레 PD 역할: ① 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 지원, 주민사업체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전략기획, 주민사업체의 단계별 지원사업 수요 예측 및 업무지원 ② 주민사업체 지원 사업 신청 및 사후보고 ③ 관광두레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 운영 여건 조성 ④ 기타 주민사업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2.2.3 거점기관의 브랜드 경영과 자원조성 활성화

□ 사업 필요성과 목적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기관, 단체, 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증제도를 통하여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재원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기초 지역의 경우,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정책 의지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문화재단 등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공공 지원금에 의존해 왔으며, 참여자인 학습자들에게는 공공 문화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여 왔음.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체계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자원

조성 차원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다른 한편으로 지방문화원의 문화학교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은 참여자인 학습자들의 수강료가 중요한 자체 수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지방문화원과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공간 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마케팅, 강사와 학습자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체 수입으로 강사 사례비 지급, 교육 재료 확보 등을 충당하고 있음.
- 또한,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교육기관, 단체, 시설 등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음.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들과의 파트너십 사업, 기업메세나 및 ESG 경영 연계 파트너십 사업, 소셜미디어 기반 펀딩 프로젝트 등이 활성화되지 못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문화예술교육 사업 컨설팅 등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들의 재원 조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이 취약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기관이 적극적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지식재산(IP) 확장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거점기관의 브랜딩 전략 활성화 사업과 거점기관의 재원 조성 활성화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함.
- 거점기관의 브랜딩 전략 활성화 사업은 브랜딩 역량 강화 사업,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성됨.
- 거점기관의 재원 조성 활성화 사업은 워킹그룹 활동비 지원, Labs 연구개발비 지원, 거점의 재원 조성 역량 강화 지원, 거점기관-기업 협업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등으로 구성됨.

〈표 VI-15〉 거점기관의 브랜딩 전략 활성화 사업내용

사업	사업내용
거점기관의 브랜딩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기관의 브랜딩 전략에 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지원 • 공공 및 민간부문의 문화정보 서비스 플랫폼 연결 촉진 • 우수 브랜딩 사례 발굴 및 전략적 홍보 마케팅
거점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홍보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표 VI-16〉 거점기관의 재원 조성 활성화 사업

사업	사업내용
워킹그룹 활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된 거점기관이 자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할 경우, 회의비, 전문가 사례비 등 활동비를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물을 거점기관의 자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일정한 수강료 등 수익 확보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함.
Labs 연구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된 거점기관의 자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사업 종료후 그 결과물을 거점기관의 자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일정한 수강료 등 수익 확보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함.
거점의 재원 조성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 대상 재원조성 전문 컨설팅 거점기관 인력들의 재원조성 역량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거점기관-기업 협업 프로젝트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이 기업과 협업(기업 재원 활용)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사업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 추진 기업메세나, 예술후원제도의 연계 강화

□ 추진체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홍보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전략을 추진함.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가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의 문화예술교육 후원 및 협업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브랜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접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거점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을 받을 경우, 사업과정 또는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물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함.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정책 협의를 통해 교육재료비 등 교육비용 일부를 학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 거점기관에서 개발, 기획, 추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사후 질적 수준 제고 및 브랜딩 전략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 지원사업 종료 후 그 결과물을 지속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통해 프로그램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대효과

- 기초 거점기관의 자체 재원 조성 환경 마련
- 기초 거점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확산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가치 확대

2.2.4 유관 정책사업 사례

1) 기업 메세나 사업

□ 기업 메세나 사업 개요

- 2006년 출범한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Business) ‘기업 메세나’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업과 예술단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며, 단발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결연을 통해 다양한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움.
- 기업메세나는 ①기업 결연, ②예술지원 매칭펀드, ③지역 특성화 매칭펀드로 구분됨.
- ① 기업 결연
 - 기업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협력하는 프로그램임.
 - 한국메세나협회는 보유한 예술단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업에게 적합한 파트너를 추천하고, 기업과 예술단체가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컨설팅함.
 - 이 사업을 통해 예술단체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마케팅·경영전략 차원에서 협력자로 자리매김함.
 - 기업 결연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 순수(기초)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 (해당장르) 국악(전통예술), 연극, 창작뮤지컬, 오케스트라, 발레, 미술, 축제, 비주류/다원예술 등
 - (결연기간) 해당 연도의 연내 지원 시작 ~ 12월까지(연중 상시 결연)
 - (협력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 ② 예술지원 매칭펀드
 -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문예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임.
 -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업의 예술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운영됨.
 - (신청기간) 매년 3월 첫째 주부터 해당 년도 매칭펀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
 - (지원장르) 공연예술(연극, 무용, 뮤지컬, 음악 등),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재즈, 융복합) 등 순수예술활동
- ③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 예술지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임.
 - 기업이 공공 문화예술재단 및 기관의 공공형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

레해 문예진흥기금을 추가로 매칭함.

- (신청기간) 매년 3월 첫째 주부터 해당 연도 매칭펀드 예산 소진 시까지.
- (참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설립한 공공 문화예술재단 및 기관
- (지원사업) 지역 문화예술현장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해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중 매칭 기업 기준에 속하는 기업의 지원이 확정되었거나, 한국메세나협회가 지정한 기한 내 기업과 기부(지원) 협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
- (대표사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현안 해소 사업,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 기업 메세나 사업 현황

- ‘2021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790억 5천 4백만 원으로 2020년(1,778억 4천9백만 원) 대비 0.7%(12억 5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이는 총 493개 기업(한국메세나협회 직접 조사 결과 지원 실적이 있는 89개 기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한 404개 기업) 이 1,051건의 사업에 지원한 금액으로, 기업(재단 포함) 직접 지원금 1,649억 8백만 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건부기부금 141억 4천6백만 원의 합산금액임.
-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상승세가 꺾였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2021년에는 0.7% 소폭 증가하여 표면적으로는 지원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나, 기업이 운영하는 예술 인프라 재투자 비용 등이 반영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예술단체에 직접 지원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환경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 아래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지원 기업 수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하였고 지원 건수의 증가 폭은 1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소액으로라도 문화예술 지원을 이어가고자 하는 기업들의 노력으로 해석됨.

2021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¹⁾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지원 기업수	515	547	390	493	▲ 26.4
지원 금액 (단위:백만 원)	203,954	208,144	177,849	179,054	▲ 0.7
지원 건수	1,337	1,431	953	1,051	▲ 10.3

출처: 한국메세나협회(2022). 2021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그림 VI-2] 기업 메세나 문화예술 지원 현황

2) 예술나무운동 사업¹⁴⁾

□ 예술나무운동 사업 개요

- ‘예술나무운동’이란 예술의 가치 확산 및 후원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술을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나무’로 형상화한 한국 대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브랜드임.
- ‘ARTISTREE’는 ‘ART IS TREE’ 또는 ‘ARTIST+TREE’를 의미하며, 예술과 대중의 만남·소통·공생을 상징함.
-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 및 확산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2012년 예술나무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된 범국민 기부 캠페인임.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14.01.28) 및 시행(‘14.07.29)됨.
- 예술나무운동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마중물 지원사업인 ‘크라우드펀딩 매칭 지원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사용되어,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줌.

□ 예술나무운동 사업 현황

- 기부금 사업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부금 182억 원을 달성함.

〈표 VI-17〉 연도별 예술나무운동 기부금 집계표

(단위: 천원)

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인	1,488,566	1,208,665	1,110,037	1,287,922	4,399,951	1,396,209	1,391,028
법인	25,415,994	19,500,205	21,343,069	21,888,166	26,263,526	16,861,575	16,822,662
합계	26,904,560	20,708,870	22,453,106	23,176,088	30,663,478	18,257,784	18,213,69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도 예술나무운동.

- 기부금 활용
 - 민간 플랫폼 ‘텀블벅’ 연계를 통한 창작 활동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전년 대비 성공 프로젝트 26개 증가 (단, 코로나19 긴급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는 제외)

14) 문화체육관광부(2022). “문화예술에 후원하는 당신도 예술가입니다: 문화예술후원캠페인 「예술나무운동」 (ARTISTREE)” 참고 및 발췌

〈표 VI-18〉 연도별 예술나무운동 기부금 활용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성공 프로젝트(건)	35	50	106	80	△26
지원 총액(천원)	70,500	72,140	276,917	109,630	△167,287
총 후원 인원(명)	4,900	6,101	16,529	13,742	△2,787

*2020년 코로나19 긴급 클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예술나무로 다시, 봄>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 규모 확대 (텀블벅) 40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180,500,000원 추가 지원(총 후원인원 2,745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도 예술나무운동.

○ 예술기부 국민 인식 제고 성과

- 민간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 연계를 통한 공익 목적의 예술 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 및 관심도 제고
- 전년 대비 전체모금액 중 민간 후원을 증가(39.4% → 48.4%, 약 10%p 증가)

〈표 VI-19〉 최근 예술나무운동 기부금 활용 성공 프로젝트 비교표

년도	2020년*	2021년	증△감
성공 프로젝트(건)	24	11	△13
지원 총액(천원)	31,675	13,088	△18,586
총 후원 인원(명)	76,555	39,011	△37,544

*2020년 코로나19 긴급 클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예술나무로 다시, 봄>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 규모 확대 (카카오같이가치) 7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10,021,150원 추가 지원(총 후원인원 29,288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도 예술나무운동.

3. 거버넌스 체계 구축

3.1 필요성과 방향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인증제도는 기초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갖추고,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속 수행해온 단체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인증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취약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정책 체계에서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활용될 수 있음.
-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은 공공 또는 민간 조직으로 중앙-광역-기초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조직으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민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은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들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및 지표조사, 정책사업 실태조사, 백서발간 사업 등은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는데 준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3.2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에서 거점기관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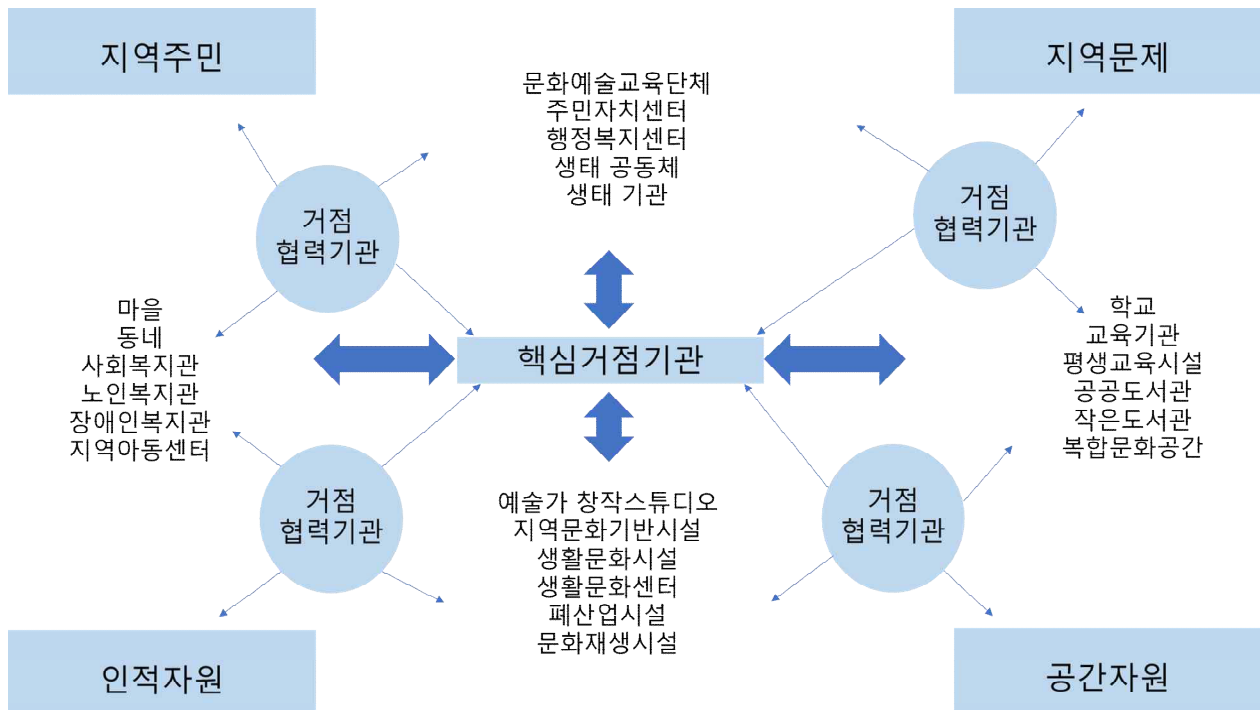
- 현재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전달 및 거버넌스 체계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기초 단위에서는 문화예술교육정책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은 생활권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거점으로 위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정책 거점으로서의 위상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은 일상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체감하도록 하는 일선 현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주창의 전진 기지로 기능할 수 있음.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유형은 크게 단독형과 컨소시엄 협력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단독형은 단일 기관이 거점기관인 경우를 의미하며, 컨소시엄 협력형은 2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단을 구성하여 거점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함. 단독형은 핵심 거점기관이 하나인 경우를 의미하며, 컨소시엄 협력형의 경우에는 핵심 거점기관과 거점 협력기관으로 역할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 컨소시엄 협력형의 경우, 취약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차원에서 적합할 수 있음.
- 단독형의 경우, 핵심 거점기관은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기관, 단체, 시설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컨소시엄 협력형의 경우, 핵심 거점기관은 거점 협력기관 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기관, 단체, 시설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거점 협력기관 또한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기관, 단체, 시설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이러한 거점기관들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기초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도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파트너로서도 활동할 수 있음. 이와같이 기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들은 어떤 형태로든 광역 및 기초 지역의 중요한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이러한 거점기관들이 기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와 거버넌스 구조에서 어떤 위상을 확보할 것인가는 지역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모델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거점기관들의 규모 또한 지역에 따라 1개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음.

〈표 VI-20〉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유형: 단독형과 컨소시엄 협력형 비교

구분	단독형 거점 유형	컨소시엄 협력형 비교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기관을 핵심 거점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거점’과 ‘거점협력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거점기관 인증
거점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시설, 인력, 프로그램,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단독기관을 핵심 거점으로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거점기관은 운영주체, 시설, 인력,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역량을 갖추어야 함. • 협력거점기관은 최소한 시설, 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함. • 거점기관으로서의 인증은 핵심거점기관과 협력거점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짐.
지역사회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마을 공간과의 연계 • 지역이슈 및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 지역생활문화시설과의 연계 • 사회복지관 등 지역 비문화예술교육기관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마을 공간과의 연계 • 지역이슈 및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 지역생활문화시설과의 연계 • 사회복지관 등 지역 비문화예술교육기관과의 연계



[그림 VI-3]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거점 네트워크 구조

3.2 거버넌스 참여자 역할 모델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거버넌스 유형은 크게 중앙·지역협력 기반 거버넌스 유형과 지역 중심 거버넌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중앙·지역협력 거버넌스 유형은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의와 조정, 협력을 바탕으로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을 발굴, 선정하고, 지원하는 형태의 거버넌스 유형을 의미함.
 - 지역 중심 거버넌스 유형은 광역시도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기초 거점 모델을 개발하여, 기초 거점기관의 발굴, 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에서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촉진자,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관계가 중요함.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거버넌스 구축 유형은 단계적으로 접근
 - 초기에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기반 조성, 거점기관 육성, 거점기관 네트워킹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의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형성에 관한 문체부의 정책적 접근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옴. 향후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정책 과정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협의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확산, 정착 단계에서는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거점기관 선정,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연수, 컨설팅, 네트워킹, 프로젝트 지원 등을 실시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법적 규정에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기초 단위의 거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초 단위 거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VI-21〉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거버넌스 유형

유형	중앙-지역 협력 기반 거버넌스 유형	지역 중심 거버넌스 유형
기본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시·도(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초 시, 군, 구의 협의 조정을 바탕으로 거점기관 발굴, 육성, 관리 지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거점 네트워크 허브 리더십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거점기관 발굴, 육성, 관리 지원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기초 거점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추진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초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 - 정착 단계
문체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법제도 • 거점 정책 방향과 계획 수립 • 거점기관 선정, 지원, 관리 • 거점기관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기관 실태조사 • 거점기관 평가 • 거점기관 네트워킹
광역시·도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기관 선정, 지원, 관리 협력 • 거점기관 컨설팅, 역량 강화 • 거점기관 지원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단위 기초 거점 정책 방향 • 기초 거점 선정, 지원, 관리 • 기초 거점 컨설팅, 역량강화 • 광역 단위 기초 거점 네트워킹
기초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기관 지원 조례 제정 • 행정 협력,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공간 제공 • 거점기관 운영 지원
거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조사 연구 • 프로그램 기획, 운영관리, 평가, 환류 •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조사 연구 • 프로그램 기획, 운영관리, 평가, 환류 •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기초 거점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 거점기관들이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기초 거점기관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facilitation)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
- 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융복합 활성화 정책 방향 마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들과의 소통, 공유,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초 거점의 정당성 확보 및 위상 정립과 관련하여 기초 지역에서 왜 문화예술교육 거점이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 확산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초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공공부문의 문화예술교육 인식이 취약한 실정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구조가 복잡하고, 불신과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초 거점기관들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등 기초 거점기관들의 지속 가능 활동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기초 거점들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거점기관들의 소통, 공유,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거점기관 관계자들이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기초 거점기관들과 지역문화예술교육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 “전국 지역문화예술교육 거점 연합회”를 설립,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표 VI-22〉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참여자 역할구조

참여조직	주요 역할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비전과 방향 및 계획 수립, 법제도 정립 • 거점의 가치와 정당성 인식 공감 • 부처 협력과 조정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와의 협의, 조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지원체계 구축 (직접지원 + 간접지원) • 거점의 가치와 정당성 인식 공감 • 전국 거점기관 네트워크 플랫폼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협력관계 구축 • 부처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관계 구축 • 법정 문화도시와의 협력관계 구축

참여조직	주요 역할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거점기관 네트워크 플랫폼 • 광역 차원의 거점 지원체계 구축 (컨설팅, 교육연수, 사업지원, 지식정보서비스 등) • 소멸지역, 소외지역 등에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기초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운영 및 지원 관련 조례 제정 • 거점 공간 설치 또는 위탁 운영 지원 • 거점 공간과 지역사회 연계 환경 조성 및 지원 • 거점 운영 및 사업 지원
기초 지역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 구축 •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시설의 거점기관화 • 지역 거점기관과의 협력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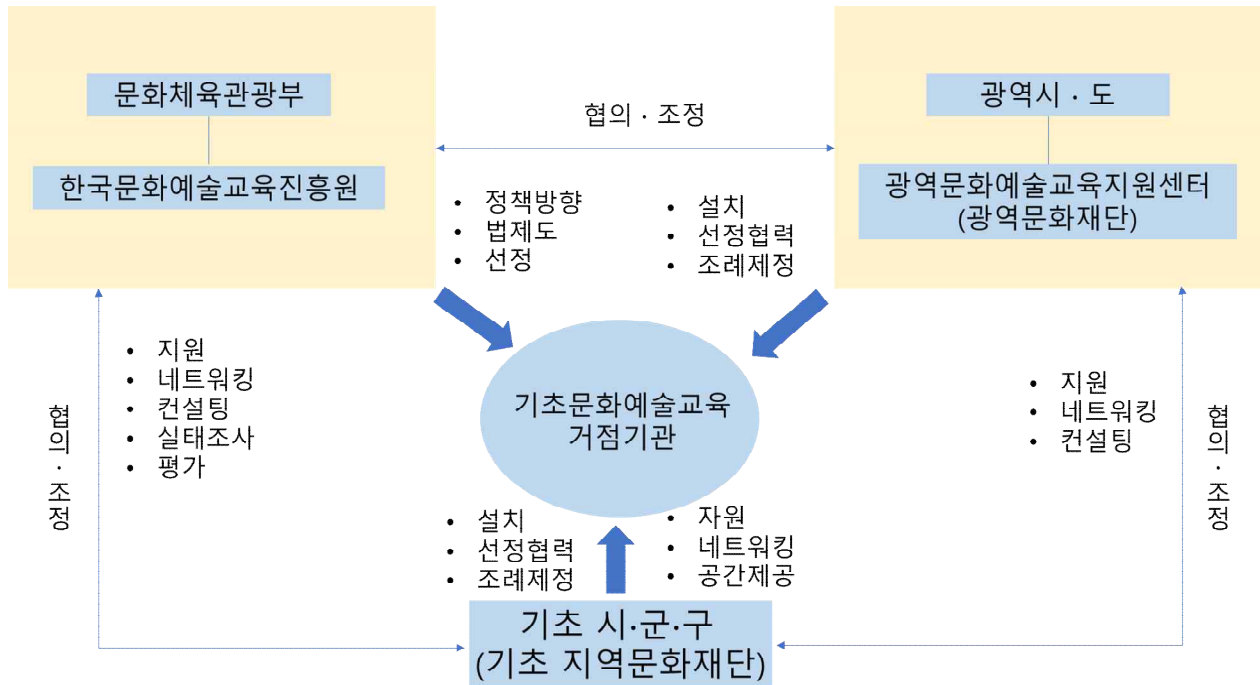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초 거점기관을 기초 지역의 정책 파트너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초 거점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초 거점들을 광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커뮤니티로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초 거점기관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인구소멸지역, 문화소외지역 등에 대해 기초 거점기관을 조성하여, 전략적으로 정책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증진하고,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시, 군, 구 자치구의 경우, 지역재생시설, 문화도시시설, 복합문화공간, 폐산업시설, 공공 및 민간부문의 유휴공간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음. 시, 군, 자치구는 이러한 공간들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문화복합공간의 기능 중 하나로 문화예술교육 기능을 탑재할 수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꿈꾸는 예술터” 사업을 통해 이러한 공간들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음. 앞으로도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의 다양한 공간들을 어떻게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 군, 자치구는 공립 문화예술교육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체계, 인력, 프로그램을 갖춰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음. 시, 군, 자치구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시설을 전문 문화예술교육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으며, 대표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 채용할 수도 있음.

- 또한 시, 군, 자치구는 국가로부터 인증된 민간 비영리 부분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직의 시설, 인력,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조직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 군, 자치구는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의 특성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 및 업무가 다양함.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 인식 수준, 관점 및 사업 또한 다양함. 지역문화재단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전문기관으로 그 위상이 정립되어 가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축,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참여도는 높지 않은 실정임. 최근에 지역문화재단은 기초 거점 문화예술교육사업(2020~20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재단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 또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지역문화재단은 기초 단위의 문화정책 전문기관으로 지역 문화정책의 중요한 거버넌스 참여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지역문화정책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문화재단은 기초 단위의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요한 거버넌스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지역문화재단은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공연장, 평생교육시설, 생활문화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문화기반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 공간, 지역예술인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점으로써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거점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2020년부터 현재까지 법정 문화도시 18개의 경우,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지역문화재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화예술교육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지역의 인적자원, 공간, 문화 활동, 지역사회 이슈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기초 단위의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거점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역량, 지역문화생태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공간자원, 인적자원 등을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공간은 지역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 할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지역문화재단은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과 협력사업을 개발, 운영할 수 있음.



[그림 VI-4]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거버넌스 체계

4. 단계별 기초 거점 지원 전략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의 단계별 지원 전략은 크게 시기로 구분하여 3단계로 구성함.

〈표 VI-23〉 단계별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전략

사업	기초 거점 기반 조성 단계 (2023년~2024) 50개	기초 거점 거버넌스 구축 단계 (2025년~2026년) 100개	기초 거점 확산 단계 (2027년~2028년) 시·군·구별 1개 이상
1. 거점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수 컨설팅 서비스 사례 공유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경험 공유 플랫폼 구축
2. 우수 문화예술교육 거점 선정 및 시상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선정 및 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선정 및 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선정 및 시상
3. 거점기관의 지역융합형 파트너십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조사 및 유형 개발 (취약지역형 / 수요자접근형 / 지역문제해결형) 기초 거점 사업 참여자 대상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기관 및 잠재 거점기관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제해결형 거점기관 파트너십 구축
4. 비문화영역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합형 협력 모델 개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합형 시범사업 운영 (3-5개)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문화영역 기관의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체계 구축
5. 문화예술교육 경영 인력 활동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의 문화예술교육 PD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PD 배치 및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PD 네트워크
6. 브랜딩 및 재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의 재원 조성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랜딩 역량 강화 우수 프로그램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기관- ESG기업 협업 프로젝트 활성화
7. 거버넌스 구축	중앙-지역협력 모델	중앙- 지역 협력모델	지역분권 기반 거점 모델

○ [1단계] 기반 조성 단계

- 2024년까지 향후 약 2년간 50개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조성을 목표로 함.
- 먼저 거점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재교육 연수와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을 통해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현장 생태계의 단기적 활성화를 시도함.

- 기초 단위의 거점 관련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적합한 거점 유형 개발을 수행함.
- 더불어 2020~2022년에 시행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기존에 기획되었던 동 사업 전략 및 목표의 일부를 이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향후 인증제도 도입을 대비한 문제상황 예측과 대안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또한 거점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점기관의 지역협력형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함.
- 다만,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이 주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 구축 차원에서 정책 거점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거점 모델은 기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확산과 융합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 거점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획 및 거점 운영역량을 갖춘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를 대상으로 역할에 적합한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PD’ 모델 개발을 추진
- 기반 조성 단계에는 중앙과 지역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중앙과 기초 단위 시범사업 참여단체 또는 기관 사이 거버넌스의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기초 거점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초 거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체계 정비

○ [2단계] 기초 거점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단계

- 2026년까지 100개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조성을 목표로 함.
- “1단계” 50개의 기초 거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바탕으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모델을 정립하고, 기초 거점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1단계” 50개의 기초 거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우수기관 또는 단체를 확대하여 발굴 및 시상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거점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 단위 지자체와의 협의 및 조정을 추진함.
- 간접지원의 궁극적 지향점에 따라 시범사업 거점기관 대상으로 채용조성 역량 및 브랜딩 역량 강화와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이때, 우수 프로그램 브랜딩을 통해 거점기관 또는 거점의 플래그십(flagship)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 시설, 지역복합공간, 지역의 공공 유희공간 등 비문화영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시범사업을 추진함. 이를 위해 융복합 협업 플랫폼 체계 구축, 부처 협의와 조정,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조정 등을 추진함.

○ [3단계] 기초 거점의 확산 단계

- 2028년까지 시, 군, 구에 최소 1개 이상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조성을 목표로 함.
- 전국 기초 거점들의 지식과 경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 오프라인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접근 및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파급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전국단위의 거점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기초 거점을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 요소로 정립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광역 단위의 거점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기초 거점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VII. 결론

1. 기초 거점 간접 지원 방안
2.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 제언

Ⅶ. 결론

1. 기초 거점 간접지원 방안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을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 및 육성사업, 인증제도, 지정 및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각각 검토하여 제시함.

1.1 거점 조성 및 육성사업 모델

□ 기초 거점 조성 및 육성사업

- II장에서 살펴본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에 따르면, 기초에서 광역과 지역을 잇고 지역 내 교육 주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거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을 통해 거점을 만들고 육성해 왔음.
 - 실제로 중앙과 광역에서 주로 진행해 온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기초 거점사업, 꿈꾸는 예술터,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들은 거점을 만들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을 둬.
 - 위 세 가지 사업의 특성에 기반하여 거버넌스 체계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기초 거점을 조성 및 육성하는 사업형 모델을 구성할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제시한 표의 내용과 같음.
 - 기초 거점 조성육성사업 모델은 주관 주체와 예산조달 방법, 선정 방법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지만, 기초 거점의 공간활용이나 기능 및 역할, 사업내용에서는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기초 거점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사업 방향성은 조성과 육성 방법과 별개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서 구성되어야 함.

〈표 VII-1〉 유형별 기초 거점 조성 및 육성사업 모델

구분	중앙주도형	지자체주도형	중앙-지자체 협력형
주관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초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초자치단체
사업 참여대상	민간예술단체, 기관(기초문화재단, 지역문화원 등)	지자체, 민간예술단체, 기관(기초문화재단, 지역문화원 등), 주민	민간예술단체, 기관(기초문화재단, 지역문화원 등), 주민
예산	중앙정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 혹은 보조금	중앙정부와 지자체 매칭

공간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 활용 • 유휴시설 • 신축 • 공간 간 기능을 분산하여 연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 활용 • 유휴시설 • 신축 • 공간 간 기능을 분산하여 연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 활용 • 유휴시설 • 신축 • 공간 간 기능을 분산하여 연계운영
기능/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지역 내 교육주체들 간의 네트워킹 • 생활권내 주민과 예술가들의 교류 •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구성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지역 내 교육주체들 간의 네트워킹 • 생활권내 주민과 예술가들의 교류 • 광역 단위 거점기관과의 연계 •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구성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지역 내 교육주체들 간의 네트워킹 • 생활권내 주민과 예술가들의 교류 • 광역 단위 거점기관과의 연계 •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구성 및 확산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조성사업과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구분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거점의 특성화 작업 •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경우 목표하는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컨설팅, 운영관리 및 성과공유회 추진 • 연도별 구분하여 연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조성과 시설 프로그램개발을 함께 진행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거점의 특성화 작업 • 목표하는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컨설팅, 운영관리 및 성과공유회 추진 • 연도별 구분하여 연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조성사업과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구분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거점의 특성화 작업 • 목표하는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컨설팅, 운영관리 및 성과공유회 추진 • 단년지원 후 지자체 매칭이나 부담수준을 늘릴 수 있음
선정 방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모로 선정	지자체가 기초단위 민간단체나 공공단체에 공모하여 선정	지자체의 공모를 중앙에서 관리

□ 유관 사업 국내 사례

〈표 Ⅶ-2〉 유관 사업 국내 사례 종합비교

구분	세종학당	평생학습관	지역아동센터	생활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제도 유형	지정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설치 또는 신고·설치	설치·운영	설치	설치
수행 기관	세종학당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
현황	전 세계 84개국 244개소	전국 501개소	전국 4,295개소	전국 173개소	전국 195개소	전국 101개소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교육지원 한국어교원 전문성 강화 한국문화 보급 세종학당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상담 정보 제공 평생교육 종사자 교육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지원 역량 강화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 실화를 위한 점검 지역아동센터 정책자료 마련 및 인식 개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 동호회 및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 운영 창작 및 문화체험, 문화예술교육 등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형: 지원금을 교부받아 운영(독립형/연계형) 협업형: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고 운영(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공공기관, 공익법인) 거점형: 우수 운영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필요한 곳에 직접 설치 또는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교육감: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지정, 운영에의 의무 있음. 시장, 군수, 구청장: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 지원 등 할 수 있음(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그 외의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의무신고 후 설치 가능 ※ 시설 입지, 구조, 설비, 시설, 종사자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용도 변경하여 활용하거나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민간위탁운영/출자·출연기관 대행하여 운영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하여 지자체 운영: 직영 및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개조·독립활용 - 동사무소, 민원실 등 기관 내 복합공간 구성 민간 설립·운영: 농협 등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 심사(현지실사 포함) → 지정 →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교육감: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시장, 군수, 구청장: 설치 또는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협의 후 설치·신고 → 설치자 및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 기준, 건축물 적법 여부 검토 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 검토 → 허가 처리 통보 ※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

구분	세종학당	평생학습관	지역아동센터	생활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지원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지원 • 기본교육과정 및 교재 제공 • 전문가 파견 • 연수 프로그램·장학 사업 지원 • 교원양성과정 제공 등 ※ 지정방식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없음 (80.9%) • 국고 지원 (8.7%) • 교육청 지원 (3.3%) • 지자체 지원 (4.6%) • 기업 지원 (2.3%) • 기타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운영비 및 인건비) • 대상(의무/희망)별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원 • 협력 워크숍 및 교류 지원 • 현장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원
근거	국어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관련 조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지역문화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법 제161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기본법은 세종학당의 사업에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 동법 및 하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세종학당재단 내부 기준에 따라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재원 확보 및 지원, 사업, 관장, 직원, 수강료 징수 등) • 읍·면·동 기준 지정되는 평생학습센터 유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국 실태 조사 자료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아님(제50조 및 제5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제62조),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면세 혜택을 받음(제6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 강구 의무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함(제8조) 이에 따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또한 국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제11조). •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신고·인증제도 별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지방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후 문체부에 심사 및 국고지원 받는 절차로 진행되었으나, 2005년 지방이양 이후 문체부 심사 및 국고지원 절차는 사라짐. • 현재는 문화의집 역할을 하는 민간기관들이 문화의집협회에 회원가입 후 활동

1.2 지원방안으로서의 인증제도와 지정제도

□ 기초 거점 간접지원 방안으로서의 인증제도와 지정제도 비교

- 인증제도와 지정(지원·육성)제도를 비교함으로써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에 대한 보다 적합한 지원방안을 선택 및 추진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인증제도의 경우 새로운 정책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선택, 시행되는 경우가 많음. 다만,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증제도가 시행될 때, ‘품질’인증을 전제로 함.
- 반면, 지정제도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지원을 통한 육성을 시행하고자 특정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시 말해, 지정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공익의 목적에 따른 사업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직접지원이 제공되는 것임.
- 본 연구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에 대한 간접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연구의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현장에 급진적으로 간접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의견이 확인됨. 이에 추가적인 선택지로 직접지원이 수반된 지정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정책방안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간접지원의 체계 구축과 시행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표 Ⅶ-3〉 지정제도와 인증제도의 비교

구분	지정제도(지원·육성)	인증제도(정책추진)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육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특정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이 활용을 계속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해주는 경우 -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증인 경우 - 다만, 정책추진인증도 품질인증을 전제로 하고 함.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지정 예: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관(시·도교육감)(평생교육법) - 임의지정 예: 평생학습센터(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평생교육법), 전문예술법인·단체(문화예술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임의인증 형태임. - 소정의 청소년수련활동은 의무인증 대상임(청소년활동진흥법). -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인증으로 볼 수 있음(사회적기업법).
대상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대상인 경우가 많음 - 기관이나 단체/기업인 경우도 있음 예: 우수국립박물관미술관(박물관미술관법),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 모범기업(문화예술후원법)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 예: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의 경우 시·도교육감 - 별도의 기관이 주관·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예: 세종학당재단(국어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소관 부처 - 예외적으로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의 경우 시·도지사
수행 (지정/인증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 소관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예: 학교밖청소년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소관 부처의 별도의 인증기관 지정 또는 업무 위탁을 통해 수행함. - 예외적으로 소관 부처 내 별도의 인증위원회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청소년활동진흥법)
요건	조직 및 인력, 시설, 사업내용 등	조직 및 인력, 시설, 사업내용 등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또는 하위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취소사유는 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2~5년까지 다양함. 3년이 일반적임.

구분	지정제도(지원·육성)	인증제도(정책추진)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사후 평가 근거가 법률에 규정됨. 예: 학교밖청소년법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인증 대상에 대한 조사, 보고 및 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인증 대상에 대한 조사, 보고 및 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인증대상에 대한 정기 심사를 규정 등 다양하게 사후 평가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예외적으로 사후 평가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예: 문화예술활성화법, 박물관미술관법에는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지원 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학교밖청소년법), 세종학당(국어기본법) - 세제혜택 예: 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단체, 다만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세제적 격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심사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혜택은 인증표시 사용권한 및/또는 홍보 허용이 일반적임 - 예산이나 비용의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예: 문화예술후원법은 경비 지원 대상을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법률상 명시된 지원 이외에 다양한 혜택 및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 예: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출입국 우대카드, KB금리우대,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킹(우수사례 견학) 등의 혜택이 부여됨.
비고	<p>이 유형의 경우 지정이라는 명칭을 도입하는 것은 다른 지정제도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표현하여 다른 지정제도와 구분하는 바람직함(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0))</p>	

1.3 인증 심사 활용을 위한 평가지표(안)

□ 기초 거점기관 또는 조직 인증 심사를 위한 평가지표

-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 시행 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자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함.
- 아래 표는 그중 델파이조사와 AHP 가중치 분석 결과를 종합한 표임.
- 해당 결과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한 인증심사 평가지표를 연이어 제시함.
 - 제시한 평가지표는 인증심사를 위해 개발된 내용이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그 적합한 요건과 평가기준을 설계한 것이므로 향후 인증제도 외 다른 정책 방안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표 VII-4〉 평가지표에 대한 델파이조사와 AHP 분석 결과

범주	평가지표 항목	1차 적절성(타당성)		2차 적절성(타당성)		가중치	
		점수 (표준편차)	순위	점수 (표준편차)	순위	항목별	범주별
I. 단체 실적 및 역량	I-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5.93 (±0.96)	7	5.80 (±1.08)	5	0.22	0.28
	I-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6.07 (±0.88)	3	5.87 (±0.99)	2	0.40	
	I-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6.00 (±0.93)	5	6.00 (±0.93)	1	0.38	
II. 공간	II-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5.67 (±1.59)	10	5.53 (±1.6)	10	0.35	0.10
	II-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5.2 (±2.08)	12	4.8 (±1.82)	12	0.27	
	II-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5.8 (±1.15)	9	5.73 (±1.1)	7	0.38	
III. 전문인력	III-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	5.33 (±1.68)	11	5.13 (±1.64)	11	0.13	0.22
	III-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	6.07 (±0.88)	3	5.80 (±1.15)	5	0.25	
	III-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연계 활용 역량	6.2 (±0.77)	1	5.87 (±1.06)	2	0.62	
IV. 네트워크	IV-1.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6.13 (±0.83)	2	5.87 (±1.06)	2	0.60	0.29
	IV-2.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 보유 여부	5.87 (±0.64)	8	5.73 (±0.70)	7	0.40	
V. 정성평가	V-1.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포함	6.00 (±1.07)	5	5.67 (±1.45)	9	1.00	0.11

〈표 VII-5〉 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안)

범주	평가지표 항목
단체 역량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신청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에 속해 있거나 구성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타 문화예술분야 또는 비문화예술 조직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다면, 협력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이행했는가?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인력교류 포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발굴, 양성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최소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을 갖추고 있는가? •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가? • 평가 대상 시설은 최근 2년 동안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후, 향후 3년 사업계획이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조직 역량, 인력, 시설, 프로그램, 재원조성 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2.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 제언

2.1 향후 연구과제

□ 연구의 한계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을 연구하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은 해당 방안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의 불명확성이었음. 앞선 집단면접조사(FGI) 분석에서도 등장했듯이, 지난 3년(2020~2022)간 시행되었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정립되거나 제시되지 않았음. 더불어 간접지원 방안 중에서 ‘인증제도’의 목적 및 지향점이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거점’ 역할 이행에 맞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다건 인증을 통해 확산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았음. 이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자료수집 및 현장 조사를 이행하여 논의 범위가 다소 넓은 경향이 드러남.
- ‘인증제도’에 대하여 다소 생소함을 드러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와 활동가와 제도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논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해당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 점 역시 아쉬운 점임.
- 마지막으로, 연구의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된 지정제도와 방안으로 도출된 조성 및 육성 사업정책에 대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다만, 지정제도와 조성 및 육성 사업방안의 경우, 인증제도를 검토,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지원방안 검토의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수행된 것이므로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연구과제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환경과 문화예술 및 전문인력 인프라의 편차가 큼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평가지표의 지역 유형화 과정이 필요함.
- 이는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논의를 통한 간접지원 방안 관련 공론화를 통한 담론 형성과정, 예상 거점 기능 수행 가능한 기관 실태조사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
- 특히, 간접지원 방안은 문화예술교육 분야뿐 아니라 공공지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생소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서 공동의 이해범위를 구축하는 사전 단계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의 형성과 민간지원이 용이한 생태계 조성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이로써 간접지원 방안의 수용도가 증진되고 재원조성의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음.

2.2 정책 제언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지형과 특성을 고려한 기초 거점 조성·육성(안) 수립 중요

-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초 단위 거점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므로 기초 거점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사업 모델이 필요함. 다양한 주관 주체 및 예산구성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기초 거점 구축 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거점의 특성화 작업을 선행한 후 구체적인 거점 구성사업을 진행해야 함. 다른 지역들과 유사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가진 거점은 거점으로서의 매력이 반감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또한 생활권 단위에서 이미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민간예술단체의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존중하고, 이들 간의 지역 내 관계를 공적 지원을 통해 와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기초 거점은 정책전달체계의 편의를 위해 구성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거점 구성이 지역 내 권력화나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기초 내 지역 상황과 자원을 면밀히 조사해야 함.
- 특히 거점으로 활용할 공간에 대해 새로 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게 되거나, 하나의 독립된 공간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장소로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공간 간의 기능을 분산하여 연계운영을 수행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생활문화센터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과 함께 설치된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생활문화교육 거점의 경우도 이렇게 여러 기능과 목적을 가진 공간들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기능의 설계를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 공간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성을 탐구한 후 수행해야 함.

□ 광역-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협력 거버넌스 강화

-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에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므로 기초 단위 거점과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함.
- 지금까지 2020~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을 통해 중앙주도 기초 단위 거점 조성이 이루어졌고, 기초 거점 구축의 초기 단계에서 중앙주도의 지원과 협력이 실효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분권화의 확립과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생태적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에 대한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할 필요성이 있음. 예를 들어, 광역-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광역 단위 지역 내 활용 및 교류 가능한 자원 실태 확인 및 확대 등을 모색하여 기초 단위 지역 정체성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이로써 효율적인 중앙-광역-기초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아

직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광역-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협력 거버넌스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생활권 기반 기초 거점 조성 및 지속 발전정책 추진

- 기 시행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참여단체 또는 기관, 그리고 협력 주체들의 만족도가 확인되었으며, 성과 또한 나타남. 이와 같은 긍정적인 동력을 부분적으로나마 이어가기 위해 해당 지원사업의 성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방안과 연계 가능성을 모색,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본 연구 역시 일면 기초 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성과를 이어갈 수 방안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수행된 만큼 간접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지형의 다양성이 고려된 지속 발전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특히 거점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역 협력기반 거점 거버넌스 체계 구축 모색이 필요함.

□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

- 인증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간접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분야 공감대 형성과 간접지원 방안 중 하나로서 인증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 이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선행 과정임.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간접지원이나 인증제도에 대한 공통의 이해 발판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간접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에 대한 합의와 협치를 이를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가칭 인증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간접지원 정책에 대한 담론형성과 현장의,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을 도모해야 함.
- 사전 준비의 과정으로 간접지원의 급진적인 시행보다는 우수 문화예술교육 기관 선정 및 시상을 통해 인증제도의 특성을 일부 내포하되 직접지원의 성격도 가진 사업 이행으로 점진적으로 간접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함.

□ 간접지원 방안 수용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 문화예술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모두 활용하는 통합 지원체계가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전제로 간접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시장의 형성을 통한 다양한 재원의 조성이 가능한 환경이 형성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자생력을 갖추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유료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민간지원 중심의 재원조성을 위한 교육 및 재교육의 지원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료화 및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상원·김창수·손동혁·전승용·임지혜·곽민지(2022). 지역문화예술교육(2018~2022) 이행상황 분석 연구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고용노동부(2022).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1.7.).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지원 박차'. 과학기술문화과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789&searchOpt=ALL&searchTxt=>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2). 2021 평생교육백서.
- 나채준(2021). 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인증제도 유형 및 법적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남지현(2014). 빈집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거점 만들기 - 세타가야구의 지역공생의 집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0(11), 3-12.
- 노수경·손유진(2021).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운영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가이드북.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세종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n.d.).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계획수립 가이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2030. 세종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2020 문화예술 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도 예술나무운동. 세종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2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22.01.01. 기준). 세종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 박성은·이석환(2016). 부산시 마을단위 거점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행정지원형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 399-408.
- 법제처(2020).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지원총괄과 간행물.
- 서울특별시(2019). 공고 제2019-800호
- 송명중·김모두·이효원(2019). 거점경로당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5(9), 57-64.
- 송성수(2009). 과학기술거점의 진화 - 대덕연구단지의 사례. 과학기술학연구, 9(1), 33-55.
- 신혜선·백령·김진웅·김영주(2021).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이행현황 분석 연구: 델파이조사를 통한 이행도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영등포문화재단(2022). 2021년 예술활동 거점지업 활성화사업(영등포구) 결과보고서.
- 이영범(2020). 시민 문화예술 활동에서 거점공간의 역할. 시민인문학, 39, 165-187.
- 이은경·황순자(대구시의회 의원) (2019.10.11.). '문화파출소를 아시나요'. 영남일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91011.010290720290001>

- 장민영·서수정·임보영·변은주(2021). 근린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운영방안. 건축공간연구원.
- 정옥주(2006). 프랑스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 경쟁거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6), 704-719.
- 지역문화진흥원(2020). 생활문화센터 가이드북.
- 지역문화진흥원(2021). 생활문화센터 조성 길잡이.
- 최자혜·권순석·김정원·최진(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추미경·조아영·오은영·한찬화·김지원(2018).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 한국메세나협회(2022). 2021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8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기초(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 릴레이 간담회 결과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사례집: 문화x파출소, 동네를 지키는 힘이 바뀐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 분석 연구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2020~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성과자료집. All of THE GROUND.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문화예술교육과 사업 통계 내부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 내부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신고·인증제의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여성가족부.
- 황성기(2014). "그린인터넷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자율규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1호, p.197.
- Mulcahy, K. (2000). "The Government and Cultural Patronage: A Comparative Analysis of Cultural Patronage in the United States, France, Norway, and Canada," in *The Public Life of the Arts in America* Eds. by Cherbo, J. M. and M. J. Wyszomirski.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Ayre C and Scally AJ (2014) Critical values for Lawshe's content validity ratio: revisiting the original methods of calcula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7(1): 79-86
-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mfac.or.kr>
- 문화포털. <https://www.culture.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복합문화지구 누에 홈페이지. <http://www.nu-e.or.kr>
-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홈페이지. <https://www.ubnori.kr/>
아트누리. <https://artnuri.or.kr/>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gokams.or.kr/04_exchange/business10.aspx
예술순환로 홈페이지. https://artsoonhwanro.com/?page_id=54
우리동네 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ifac.or.kr/>
전라남도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jncf.or.kr/>
지리산씨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www.jirisanc.com/>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rcda.or.kr>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cbfc.or.kr/arte>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 <https://www.palbokart.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생나눔교실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arko2010&from=postList&categoryNo=49>
한국 e나라표준인증 종합정보시스템. <http://www.standard.go.kr>

부 록

부록

A1. 인식조사 설문 문항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 연구」 지역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

ID :

--	--	--	--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진 (공동 책임: 임학순 교수, 신혜선 박사)은 올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문화 예술교육 간접지원 방안 및 인증제도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역 및 현장 활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보호)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조사 결과 또한 통계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개별 응답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위컬처 리서치 앤 컨설팅

I. 일반사항

※ 아래 내용을 작성해주시오.

1. 연령 (만 나이)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2. 성별	남 () 여 ()
3.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형태	① 예술단체법인 ② 교육전문단체/협회 ③ 대학(산학/산하연구소) ④ 박물관/미술관 ⑤ 지역문화원 ⑥ 지역문화재단 ⑦ 지자체(광역/기초) ⑧ 예총 ⑨ 복지관 ⑩ 치료전문단체법인 ⑪ 기타()
4.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울산 ⑦ 세종 ⑧ 대전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5. 직무	① 교육 강사 또는 문화예술교육사 ② 기획 ③ 교사 ④ 예술가 ⑤ 행정가(재단 또는 센터 등) ⑥ 행정가(지자체) ⑦ 교수 및 연구자 ⑧ 기타 ()
6. 핸드폰 번호	○○○-○○○○-○○○○ (* 해당정보는 모바일 상품권 전송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II. 인증제도에 대한 기초 인식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증제도는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로 그 유형은 품질인증, 안전인증, 프로그램 인증,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서의 인증 등 다양하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주로 직접 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근거로 지정하고 있으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기초 단위에 다양한 지역문화예술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거점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1) 2020-2022년 현재까지 최근 3년 동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응답 후 문2)로
② 없다. ☐ 응답 후 문3)로

해당사업 참여연도: _____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다.)

④ 조금 안다. **☞ 응답 후 문3-1)로** ⑤ 잘 안다. **☞ 응답 후 문3-1)로**

① 반대한다. [답] 응답 후 문6)으로 ② 약간 부정적이다. [답] 응답 후 문6)으로
③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
④ 약간 긍정적이다. [답] 응답 후 문5)로 ⑤ 찬성한다. [답] 응답 후 문5)로

문6) 귀하가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또는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Ⅲ.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및 활성화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이란 기초 생활권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건과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법적 개념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에서는 발굴(지원발굴, 축적, 매개), 지원(주체의 성장 지원), 보급(지역 특화 협력,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홍보(문화예술교육인식 확산) 등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은 지역에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토대를 만들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7) 기초 단위에서 우선되어야 할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 ①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시설 자원 발굴 및 활용
- ②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인력 자원 발굴, 역량 강화, 참여 환경 조성
- ③ 지역 특성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실행
- ④ 지역 내 다양한 영역 및 문제들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협업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 ⑤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연관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조성
- ⑥ 기초 단위 문화예술 자료 아카이빙 및 데이터 관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 ⑦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수요자 확대
- ⑧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활동 조직 (시설, 단체, 기관 등)의 다양화와 확대
- ⑨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 및 담론 형성
- ⑩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협력관계 유지 및 강화
- ⑪ 중앙(진흥원)과의 협력관계 유지 및 강화
- ⑫ 지역 문화예술교육 예산 확보
- ⑬ 기타 (응답: _____)

문8)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기대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 ②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의 문제(이슈)에 대한 해결 기여
- ③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④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인력 활성화
- ⑤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확보 및 활용 활성화
- ⑥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확산
- ⑦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 문화 문해력(cultural literacy) 신장 기여
- ⑧ 지역민의 문화예술 참여(여가활동) 기회 확대
- ⑨ 지역예술가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⑩ 지역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 ⑪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격차 해소
- ⑫ 기타 (응답: _____)

문9)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시, 우려되는 (잠재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예산 확보의 불안정성 및 예산 부족
- ② 거점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 확보 한계
- ③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부족
- ④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공간 부족
- ⑤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인식과 경험 부족
- ⑥ 거점기관의 독립성 확보 한계 (예: 정치적, 행정적 영향)
- ⑦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수요 인식 부재로 인한 활성화 한계
- ⑧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지속성 한계
- ⑨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부족
- ⑩ 기타 (응답:)

문10) 위 문항(문9)에서 선택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점의 주요 역량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 ① 예산 확보 역량
- ② 전담 인력 확보 및 인적 자원 네트워킹 역량
- ③ 지역특성에 적합한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 역량

- ④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 ⑤ 지역주민과의 소통 역량
- ⑥ 문화예술교육 공간, 시설 자원 확보 역량
- ⑦ 기타 (응답: _____)

문1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및 간접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세요. (이것은 인증받은 거점기관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기초 단위별로 최소 1개 이상)을 고려하여, 거점으로 인증된 기관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연구진들은 정책 방안으로 ① 인증 거점기관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 ②인증 거점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인력 교육 연수 ③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제도 ④ 거점기관의 파트너십 프로젝트 지원 (거점기관과 지역 내 다른 조직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개발 등) ⑤ 인증 거점기관들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원 ⑥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전국 박람회 개최 ⑦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 참여 인센티브 부여 방안 (거점기관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⑧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사업 지원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의견이나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해 주십시오.

IV. 인증제도에 대한 평가 지표

문12) 다음은 기초 거점 인증제도 시행 시 활용할 평가 지표 항목의 적합성에 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기관 또는 단체의 기초 거점 인증과 인증 유지를 위해 평가해야 할 항목의 적합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세요.

문항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중요하다
12-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①	②	③	④	⑤
12-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①	②	③	④	⑤
12-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①	②	③	④	⑤
12-4.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자체 소유 또는 협력/계약 등을 통한 활용 공간 확보 포함)	①	②	③	④	⑤
12-5.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①	②	③	④	⑤
12-6.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①	②	③	④	⑤
12-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예: 문화예술교육사 1인)	①	②	③	④	⑤
12-8. 문화예술교육 교육 및 기획 전문인력 양성 역량	①	②	③	④	⑤
12-9. 문화예술교육 교육 및 기획 전문인력 지역 내 네트워크 활용 섭외 역량	①	②	③	④	⑤
12-10.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①	②	③	④	⑤

문13) 이 밖에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문14)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다음 중 택1 해주세요.

- |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울산 | ⑦ 세종 | ⑧ 대전 |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 ⑰ 제주 | | | | | | | |

문15) 귀하의 주요 문화예술교육 활동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해당 지역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 |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울산 | ⑦ 세종 | ⑧ 대전 |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 ⑰ 제주 | | | | | |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2. 1차 델파이조사 설문 문항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 연구」

1차 델파이조사 설문

ID :

--	--	--	--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진(공동 책임: 임학순 교수, 신혜선 박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조사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으로서 인증제도에 활용 가능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참여자 일반사항 : 답례품 지급을 위한 기본 사항
- ◆ 설문 작성 안내
- ◆ 설문 문항

본 델파이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응답에는 약 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델파이조사의 종료일은 2월 3일로** 기한 내에 응답 완료 및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위컬처 리서치 앤 컨설팅

※ 조사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weculture.rnc@gmail.com

I. 일반사항

1. 연령(만)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2. 성별	남 () 여 ()
3. 소속기관 또는 단체	
4. 직위(직함)	
5. 해당 분야 종사기간	()년 ()월
6. 휴대폰 번호	○○○-○○○○-○○○○ (※ 해당정보는 모바일 상품권 전송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답례품은 2차 조사가 완료된 후 일괄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II.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으로서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발 안내문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수행될 예정이며, 단계별 델파이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델파이 : 기추진된 설문조사(인식조사) 및 FGI를 토대로 설정된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함.

2차 델파이 : 1차 델파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정된 평가지표의 재평가 및 지표별 가중치(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함.

본 델파이는 1차 조사에 해당하며, 수정 델파이 기법(modified Delphi technique) 방식으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제도 시행 시, 활용될 평가지표 개발의 일환으로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평가지표의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때, **거점**이란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나 자원을 기획하여 엮어내고 추진하는 주체”로서 “공간과 같은 물리적 요건에 귀속되지 않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환경 및 생태계, 그리고 협력 구조의 조성 및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 수행의 주체(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n.d.:11).”를 의미합니다.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연구진이 살펴보고 있는 ‘인증제도’의 활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교육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인증함으로써 자부심과 동기를 부여하여,

‘인증제도’가 생활권 기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증진과 인식 확산,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성과 지역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성이 지표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중요도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 작성 방법 예시

- i) 아래 표와 같이 각 문항에 대해 평가 수준에 해당하는 칸을 ✓로 채워(입력, 체크) 주시기 바랍니다.
 ii) 이때, 각 평가지표 항목 별 적절성이 보통(4) 이하라고 판단(체크)하신 경우, 이에 대한 이유 및 보완 수정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항목	응답란							
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중요도	①	②	✓	④	⑤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중요도	①	②	③	④	✓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Ⅲ. 설문 응답란

Q1. 다음 평가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평가(해당 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때, 각 평가지표 항목별 중요도가 **보통(④)** 이하라고 **판단(체크)**하신 경우, 이에 대한 **이유 및 보완수정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항목		응답란(✓)						
		매우낮음	<----->			보통	----->매우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사업으로 운영실적 평가대상을 제한함. 이는 인증 신청 대상을 문화예술교육 정책 참여주체로 제한함으로써 인증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적절성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적절성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적절성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4.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자체 소유 또는 협력/계약 등을 통한 활용 공간 확보 포함)	적절성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5.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적절성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평가지표 항목	응답란(✓)							
6.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적절성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 (예: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해당 지역 활동 경력 최소 3년 소유자 1인)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적절성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8.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 (기획, 교 육자, 매개자 발굴 등)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적절성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9.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연계 활용 역량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적절성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10.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 그리고 타부처 소속 비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예: 사회복지, 장애인시설 등) 모두 포함)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적절성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11.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 행 실적 보유 여부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적절성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평가지표 항목	응답란(✓)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12.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포함 (목적: 통합적, 정성적 평가의 근거 마련)	적절성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완 및 수정 의견							

《 전문가 델파이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3. 2차 델파이조사 설문 문항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 연구」 2차 델파이조사 설문

ID :

--	--	--	--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차 델파이조사를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 덕분에 잘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델파이조사는 **2회차 조사**에 해당하며 응답에는 약 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연구진(공동 책임: 임학순 교수, 신혜선 박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조사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으로서 인증제도에 활용 가능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참여자 일반사항
- ◆ 1차 델파이조사 결과 요약
- ◆ 2차 델파이 작성 안내 및 설문 문항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02월

위컬처 리서치 앤 컨설팅

※ 조사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weculture.mnc@gmail.com

I. 일반사항

1. 연령(만)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2. 성별	남 () 여 ()
3. 소속기관 또는 단체	
4. 직위(직함)	
5. 해당 분야 종사기간	()년 ()월

※ 사례비는 2차 조사가 완료된 후 일괄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II.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으로서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발 안내문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수행될 예정이며, 단계별 델파이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델파이 : 기추진된 설문조사(인식조사) 및 FGI를 토대로 설정된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함.

2차 델파이 : 1차 델파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정된 평가지표의 재평가 및 지표별 가중치(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함.

본 델파이는 2차 조사에 해당하며, 1차 조사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증제도 시행 시, 활용될 평가지표의 중요도에 대하여 취합된 응답을 조율하고, 지표별 가중치(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1차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요약표

1) 중요도에 대한 집계 결과

범주	평가지표 항목	적절성(타당성)	
		점수 (표준편차)	순위
I. 단체 실적 및 역량	I-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5.88 (±0.96)	7
	I-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6.00 (±0.89)	3
	I-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5.94 (±0.93)	5
II. 공간	II-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5.63 (±1.54)	10
	II-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5.19 (±2.01)	12
	II-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5.75 (±1.13)	9
III. 전문인력	III-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	5.31 (±1.62)	11
	III-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	6.00 (±0.89)	3
	III-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연계 활용 역량	6.13 (±0.81)	1
IV. 네트워크	IV-1.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6.06 (±0.85)	2
	IV-2.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 보유 여부	5.81 (±0.66)	8
V. 정성평가	V-1.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포함	5.94 (±1.06)	5

Ⅲ.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 연구」를 위한 2차 델파이 설문

※ 설문 작성 방법

- 아래와 같이 세부 과제별 세부내용 및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이행현황에 대한 1차 델파이조사 결과 요약(p. i)을 참조하시어 각 문항에 대한 의견에 부합하는 칸에 ✓로 채워(입력, 체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때, 각 평가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동의 수준에 따라 문항별 안내 문구 숫자를 따라 다음 <그림 1>과 같이

i) **보통이나 동의하는 경우**(④, ⑤, ⑥, ⑦), 다음 평가지표의 항목을 평가해주시고

ii) **동의하지 않는 경우**(①, ②, ③), 다시 한번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의 수준을 평가 및 의견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림 1> 동의 정도(여부)에 따른 문항 이동 안내

[I-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Q1-1. 해당 평가지표의 1차 적절성(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1-2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1-1-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1-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적절성 (타당성)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1-2.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비
동
의
한
경
우

Q1-2.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1차 적절성(타당성)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1-3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1-2-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동
의
한
경
우

Q. 1차 조사에서 수행했던 평가지표별 적절성(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체크(✓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I-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5.88점, 7/12순위)

Q1-1. 해당 평가지표의 1차 적절성(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1-2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1-1-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1-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적절성 (타당성)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1-2.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I-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6.00점, 3/12순위)

Q1-2.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1차 적절성(타당성)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1-3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1-2-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2-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적절성 (타당성)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2-2.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I-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5.94점, 5/12순위)

Q1-3.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1차 적절성(타당성)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2-1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1-3-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3-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적절성 (타당성)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3-2.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II-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5.63점, 10/12순위)

Q2-1. 해당 평가지표의 1차 타당성(적절성) 평가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2-2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2-1-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1-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적절성 (타당성)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1-2.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Ⅱ-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5.19점, 12/12순위)

Q2-2.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1차 적절성(타당성)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2-3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2-2-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2-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적절성 (타당성)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2-2.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Ⅱ-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5.75점, 9/12순위)

Q2-3.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1차 적절성(타당성)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3-1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2-3-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3-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적절성 (타당성)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3-2.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Ⅲ-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5.31점, 11/12순위)

Q3-1. 해당 평가지표의 1차 타당성(적절성) 평가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3-2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3-1-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3-1-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적절성 (타당성)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3-1-2.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Ⅲ-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6.00점, 3/12순위)

Q3-2.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1차 적절성(타당성)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3-3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3-2-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3-2-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적절성 (타당성)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3-2-2.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Ⅲ-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연계 활용 역량(6.13점, 1/12순위)

Q3-3.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1차 적절성(타당성)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4-1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3-3-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3-3-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적절성 (타당성)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3-3-2.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Ⅳ-1]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6.06점, 2/12순위)

Q4-1.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1차 적절성(타당성)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4-2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4-1-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4-1-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적절성 (타당성)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4-1-2.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IV-2]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 보유 여부(5.81점, 8/12순위)

Q4-2.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1차 적절성(타당성)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5-1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4-2-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4-2-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적절성 (타당성)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4-2-2.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V-1]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포함(5.94점, 5/12순위)

Q5-1.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1차 적절성(타당성) 결과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Q6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경우는 Q5-1-1로]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5-1-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적절성 (타당성)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5-1-2.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Q6. 지금까지 응답하신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의 일환인 인증 평가지표에 대하여 추가 의견(제언)이 있으신 경우, 기술하여 주십시오.

IV. AHP 설문(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간접지원 방안으로서 인증 평가지표의 중요도 산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단계(수준)별로 나뉘어있는 요소들의 가중치(중요도, 일종의 우선순위)를 산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AHP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우선순위 방식의 설문 방법에 비해 엄밀성과 객관성 확보가 용이하며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인(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AHP는 각 요소에 대해 모든 요소 간 쌍대 비교(두 개씩 비교)하여 측정(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가령 A, B, C의 요소가 있다면 i) $A \leftrightarrow B$, ii) $A \leftrightarrow C$, iii) $B \leftrightarrow C$ 와 같이 요소 간 비교를 통해 응답한 결과를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 참조).

[illegible]

AHP 설문내용

범주	평가지표 항목
I. 단체 실적 및 역량	I-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I-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I-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범주	평가지표 항목
Ⅱ. 공간	Ⅱ-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Ⅱ-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Ⅱ-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Ⅲ. 전문인력	Ⅲ-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
	Ⅲ-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
	Ⅲ-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연계 활용 역량
Ⅳ. 네트워크	Ⅳ-1.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Ⅳ-2.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 보유 여부
Ⅴ. 정성평가	V-1.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포함

Q7-1. 위 범주를 참조하시어, 각각의 **모든 문항**(총 10개의 문항)에 대하여 A와 B를 비교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문항 수	평가 항목 (A)		A가 절대 중요		A가 매우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동 등	B가 약간 중요		B가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절대 중요		평가 항목 (B)	
	A 항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항	
1	I. 단체 실적 및 역량																			II. 공간	
2	I. 단체 실적 및 역량																			III. 전문인력	
3	I. 단체 실적 및 역량																			IV. 네트워크	
4	I. 단체 실적 및 역량																			V. 평가	
5	II. 공간																			III. 전문인력	
6	II. 공간																			IV. 네트워크	
7	II. 공간																			V. 평가	
8	III. 전문인력																			IV. 네트워크	
9	III. 전문인력																			V. 평가	
10	IV. 네트워크																			V. 평가	

Q7-2-1. 위 범주 중, **I. 단체 실적 및 역량** 부문의 평가지표를 참조하시어, 각각의 **모든 문항**(총 3개의 문항)에 대하여 A와 B를 비교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문항 수	평가 항목 (A)	A가 절대 중요		A가 매우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보통	B가 약간 중요		B가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절대 중요		평가 항목 (B)
	A 항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항
1	I-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I-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2	I-1.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유무																		I-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3	I-2 기관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I-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 역량

Q7-2-2. 위 범주 중, **II. 공간** 부문의 평가지표를 참조하시어, 각각의 **모든 문항**(총 3개의 문항)에 대하여 A와 B를 비교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문항 수	평가 항목 (A)	A가 절대 중요		A가 매우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보통	B가 약간 중요		B가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절대 중요		평가 항목 (B)
	A 항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항
1	II-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II-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2	II-1.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유 또는 확보																		II-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3	II-2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 유무																		II-3. 지역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Q7-2-3. 위 범주 중, **Ⅲ. 전문인력** 부문의 평가지표를 참조하시어, 각각의 **모든 문항**(총 3개의 문항)에 대하여 A와 B를 비교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문항수	평가 항목 (A)	A가 절대 중요		A가 매우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보통	B가 약간 중요		B가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절대 중요		평가 항목 (B)
	A 항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항
1	Ⅲ-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																		Ⅲ-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
2	Ⅲ-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고용 여부																		Ⅲ-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연계 활용 역량
3	Ⅲ-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																		Ⅲ-3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연계 활용 역량

Q7-2-4. 위 범주 중, **Ⅳ. 네트워크** 부문의 평가지표를 참조하시어, 각각의 **모든 문항**(총 1개의 문항)에 대하여 A와 B를 비교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문항수	평가 항목 (A)	A가 절대 중요		A가 매우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보통	B가 약간 중요		B가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절대 중요		평가 항목 (B)
	A 항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항
1	IV-1.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역량																		IV-2. 협력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행 실적 보유 여부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